

발 간 사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5년의 기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정부」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시대를 열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 전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남북장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총 76회의 남북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반세기만에 동해선 임시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0여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알지 못하던 이산가족중 6,000여명이 혈육을 만났으며, 앞으로 상설 면회소를 통한 정례적인 상봉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에 열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는 남북의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였으며, 북측 응원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전세계에 민족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50만명이 넘는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4만여명의 남북 주민이 서로 오고 갔으며, 남북교역액도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습니다.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경협사업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일부 구간에서 철조망과 지뢰가 제거되었으며, 군사실무자

간 직통전화가 설치되는 등 초보적이거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길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99년과 2002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서해교전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 미국내 9.11 테러 사건과 대테러전쟁 등으로 조성된 국제정세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02년말에 대두된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의 성숙된 자세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왔으며, 최근 현안인 북한 핵문제 역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03 통일백서」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성취한 결실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지와 참여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통 일 부 장 관 정 세 현

「2003 통일백서」 목차

<본 문>

제1장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북한 변화

제1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2절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1. 추진 배경
2. 목표, 추진 원칙과 기초
3. 통일과정에서의 대북화해협력정책
4. 대북정책 추진과 국제협력

제3절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1. 2002년도 개관
2. 남북대화의 다양화·정례화
3.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4.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5.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

제4절 북한의 변화

1. 대내적 변화
2. 대외 관계의 변화
3. 대남 관계의 변화

제2장 남북대화의 다양화·정례화

제1절 남북정상회담

1. 개최 배경 및 준비접촉
2. 회담 내용 및 「6·15 남북공동선언」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제2절 남북특사회담

1. 북측 특사 방한
2. 남측 특사 제1차 방북
3. 남측 특사 제2차 방북

제3절 남북장관급회담

1.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2.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3.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4.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5.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제4절 남북군사분야 회담

1. 남북국방장관회담
2. 남북군사실무회담
3. 남북군사실무접촉

제5절 남북경제분야 회담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3.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4.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5.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6.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7.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8.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제6절 남북 인도·사회분야 회담

1. 제1~3차 남북적십자회담
2.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
3.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제3장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제1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 개 관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3. 개성공단 개발사업

4.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5.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및 임남댐 공동조사
6.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7. 대북 식량차관 제공

제2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 교역
2. 위탁가공교역

제3절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1. 개관
2.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3.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4. 다양한 남북공동행사 개최

제4절 남북한 인적 교류

1. 남북한 왕래
2. 북한주민접촉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교류

1.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2.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3.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 국내입국 추이

2. 정착지원 추진
3. 법·제도 개선

제4절 북한인권·환경문제 개선 추진

1. 북한인권문제
2. 북한환경문제

제5장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배경

제2절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1. 경수로사업 기반 조성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3. 본공사 및 북한인력 훈련
4. 재원조달
5. 통행·통신 등 사업지원체계 강화

제3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기반 조성

제1절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1. 여론조사 실시 및 다양한 여론수렴 활동
2. 자문기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3.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4. 인터넷 활용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5. 국제사회 및 재외동포 대상 홍보

제2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정립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2. 통일교육 실시
3. 학교통일교육 지원
4. 사회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자료 개발
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제3절 북한실태 분석 및 자료 제공

1. 북한실태·주요동향 분석 및 자료발간
2. 다양한 연구사업·행사 지원
3. 북한정보자료 개방 확대

<부 록>

- ① 통일정책 관련 대통령 주요 연설문
- ② 통일정책 관련 법규
- ③ 주요 남북관계 합의 문건
- ④ 남북관계 주요 일지(1998~2003.1)
- ⑤ 남북관계 관련 웹사이트(Website)
- ⑥ 통일부 조직표

제1장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북한 변화

제1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2절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1. 추진 배경
2. 목표, 추진 원칙 및 기조
3. 통일과정에서의 대북화해협력정책
4. 대북화해협력정책과 국제협력

제3절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1. 2002년도 개관
2. 남북대화의 다양화·정례화
3.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4.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5.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

제4절 북한의 변화

1. 대내적 변화
2. 대외 관계의 변화
3. 대남 관계의 변화

제1장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북한 변화

분단 이후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남북관계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큰 흐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 기조 등은 당시의 국제정세, 남북간 역학관계, 그리고 국민의 여망 등 환경적 요소에 따라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1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분단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남북한은 국제냉전질서 속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치열한 대결로 일관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대통령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 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당국을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국제화를 중시하여, UN 감시하에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전쟁 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무력복진통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천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통일에 대한 국민 염원을 반영한 정치적 구호로서 상징적 의미가 컸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총리 정부는 '무력복진통일' 주장을 폐기하였으나,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 를 통일 정책의 기조로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한편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사실상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초기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주력한다는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을 정립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를 통해 정부의 통일방안이 UN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失地回復)에 의한 국토통일임을 밝히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초반 동·서간의 냉전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69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에 들어 미·중, 일·중의 접촉과 미·소·일·중 4국간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1960년대 우리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남북간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됨에 따라 통일 정책도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적십자회가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

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대화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대화환경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해결 등을 요구함으로써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전제 아래, 남북간의 내정 불간섭과 불침략, 남북대화의 지속,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 추진 등 7개 항을 담았다.

이어서 정부는 1974년 1월 18일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같은 해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 1979년 1월 19일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 대화」 제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서는 ①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 ②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대화·교류협력 증진 ③이러한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를 제시하였다.

1980년대는 국제적 탈냉전 추세에 따라 남북관계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체제경쟁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모색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대화를 통한 화해분위기가,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대결과 대화가 교차되는 관계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1982년 2월 1일 민족화합을 위한 실천조치로서 20개 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20개항의 시범사업중 대표적인 것은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들의 우편 교류 및 상봉 실현 ▲설악산·금강산 연계 자유관광 ▲자유 교역을 위해 인천항과 진남포항 개방 ▲쌍방 방송 자유 청취 ▲각계 인사간의 상호 방문 ▲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 이용 ▲군비통제 조치 협의 및 쌍방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이었다.

한편 1984년 9월 8일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후에도 남북간 대화는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세우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1980년대 후반 국제냉전이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또한 그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또한 5월 7일 제7차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9월 17일에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1992년 말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위기국면으로 치달았다.

그 이후 미·북간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을 직접 지원하는 등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대북 경수로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회피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바탕을 두고 평화적·민주적 절차를 강조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이를 보완하여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도 이 같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법만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 교류 후 통일'의 입장을 체계화한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남북연합단계'는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체제에 해당한다.

과도적 체제로서의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는데 따라 각기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남북공동사무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체제가 정착되며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민족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마지막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의 의회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 과정을 거쳐, 남북한간 이질감이 해소되고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조건 위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절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정책 목표와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남북간 국력 격차 심화 등 달라진 환경에 부응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수립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또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과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정책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1. 추진 배경

가.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1980년대 말에 동구 공산권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제적 냉전질서가 종식되었다. 세계는 과거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정보화,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과학·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아·환경·테러·마약 문제 등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역내국가 내지는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일·중·러 주변 4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민족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나.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북한은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채 고립과 폐쇄의 길을 고집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는가 하면, 에너지난·식량난·외화난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등 체제이완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이미 실패했고 변화 없이는 경제회생이나 체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이나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이 급격히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이는 북한체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으며,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체제 유지에 주력하면서도 1990년대 중반이후 조심스럽게 변화의 조짐을 보여 왔다. 특히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가격·수익성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관

료들을 서방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만으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에 들어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북한이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다. 남북간 국력 격차의 심화

분단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체제경쟁을 지속해 왔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남북간 국력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남북간 우열이 분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말 구 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권의 몰락 등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북한의 체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남북간 체제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남북간 국력의 차이는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해졌다. 명목 국민소득(GNI)은 북한에 비해 약 27배, 국민 1인당 GNI는 약 13배, 무역 규모는 약 128배(2001년 한국은행 통계 기준)의 격차가 나고 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비록 병력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으나, 한·미연합전력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남북간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21세기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과 남북간 국력 격차를 감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간 대결 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여 민족의 보다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되었다.

2. 목표, 추진 원칙 및 기조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을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공식화하여 지난 5년여 동안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등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추진하여 현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가. 목 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 추진 원칙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③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

첫째,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평

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유지는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때 북한도 무력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도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억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아직까지 근본적 변화가 없고, 남북의 대규모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과제이다. 아울러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평화를 지키는 정책」(peace keeping)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평화를 만드는 정책」(peace making)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통일은 어느 일방이 타방을 일거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체제나 영토를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가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욱이 남과 북은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대결하고 반목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상호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준비과정이 없는 급작스런 통일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실현된다 해도 그 충격과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독

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당장 법적, 제도적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를 바탕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셋째,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단계적·점진적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평화공존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많은 대화와 접촉을 갖고, 서로 필요로 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때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약화시키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급진적 통일에서 오는 갈등과 부작용을 방지하며, 통일에 드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추진 기조

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①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②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③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⑤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추진기조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양면성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이중성을 떨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긴장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의 길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의지를 약화·포기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근원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정착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아울러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의존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호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평화공존'을 대북정책 추진기조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은 시간을 두고 달성해 가더라도,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존의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우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분단상황을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분단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즉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평화공존'과 함께 '평화교류'를 병행 추진함은 평화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개선,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국가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며,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도 개혁과 개방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 역시 그들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북한내부에서도 이미 부분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같은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 체제의 붕괴를 의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북한의 대남도발, 선전선동, 억지주장 등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의연히 대처하는 한편,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 그리고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됨은 물론 나아가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인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북의 현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서로 주고 받는 양과 종류, 시기 등이 대칭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인정, 존중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기본적인 자세는 중요하다. 나아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민족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문제는 우리 자신의 삶과 민족의 장래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당연히 우리 7천만 겨레의 뜻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권한과 책임을 가진 남북 당국간의 대화야말로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정부가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의 노력이 보다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는 관계국과의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섯째, 대북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뜻과 의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이며, 정부는 국민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되어 슬기롭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북한과 주변국들도 이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불어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국민적 합의 조성을 위해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뜻과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3. 통일과정에서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지난 50여년간 지속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사회를 통합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당면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여 통일의 밑바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통일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남북 간 지리적 통합과 주권의 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에 우선 그러한 통일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즉, 남북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말하는 것은, 서로 상이한 제도와 사상을 가진 채 반세기 이상 적대적 갈등을 지속해 온 남북이 단 시간 내에 평화적 방법으로 제도, 사상, 영토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또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이 제도와 사상, 영토는 다르지만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 상황은 남북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정착된 상황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란 남북간 정치, 군사적으로 신뢰가 구축되고 군비축소 및 통제가 실현됨으로써 정전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되었을 때다.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남북간에 호혜적 경제관계가 구축되고, 남북한의 주민이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이 소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민족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남북 주민간의 적대감은 해소될 것이며, 두 개의 상이한 사회체제도 빠른 속도로 동질화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남북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일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현 대북정책이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룩하려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4. 대북정책 추진과 국제협력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미·일 등 유관국 정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주변국가들과의 정책 조율을 위한 고위급 통일정책협의회 및 실무정책협의회를 추진하였다.

2002년 11월 통일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외상 등 해당국 고위인사들과 정책 협의를 가졌으며, 뉴욕에서는 Korea Society 주관 통일문제 강연회를 통해, 도쿄에서 일본외신기자클럽(FCCJ) 초청연설회 등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시켰다.

2002년 7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실무정책협의회」,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한·중 실무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북정책 설명과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미·일 3개국의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 참여(1.25 서울, 4.9 도쿄, 6.18 샌프란시스코, 9.7 서울, 11.9 도쿄)하여 대북정책 공조체제 구축에 기여하였다.

통일부는 통일정책과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동포사회의 지지기반을 확산시키기 위해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지닌 주요 국가의 관계인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

정책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2년 5월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옌지에서 「한·중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당국 관계자 및 재러 동포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러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6월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 의회관계자, 한반도문제 전문가, 재미 한인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대북정책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 4개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1996년 8월부터 미·일·중 주재 한국대사관에도 각각 통일연구관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다.

미·일·중 주재 통일연구관은 해당 국가의 대한반도 정책 관계자·연구자·전문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주재국의 대한반도 정책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주재 국내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주요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대북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제3절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1. 2002년도 개관

「국민의 정부」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2000년 6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02년에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관계의 실천적 국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2002년 1월 정부는 2002년 내에 이루어야 할 남북관계 5대 핵심과제로서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5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2년 1월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북한이 동북아평화의 잠재적 위협 요소라는 관점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도 대화와 교류협력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월에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경의선 연결지점에 있는 도라산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발표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소

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남북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4월 초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원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였다. 특사는 평양에 머무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대화과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남북관계를 원상 회복시킨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지고, 대북 비료 지원이 추진되는 등 남북관계는 다시 개선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6월에 서해상에서 북한측 함정의 선제 도발사격으로 우리측 해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못하고 긴장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응을 했고, 이에 북한측은 “유감” 발표를 했다.

이후 8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과 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를 통해, 5대 핵심과제 등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분야별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2002년 한해 동안 총 33회에 걸친 회담을 개최하였다.

2002년 한해에 열린 33회의 회담중 26회가 실무회담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남북회담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선전의 장」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위한 「실천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2년 한해 동안 남한주민의 방북인원은 12,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도 1,000여명에 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2002년 10월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켈리 국무부 차관보

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 개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북한이 핵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집행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북 중유 제공을 2002년 12월부터 중단하였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핵동결시설의 해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요원의 추방,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등 일련의 관련 조치를 진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북한의 핵개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와 국민적 합의에 입각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과 북한 스스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등 남북간 현안사업들의 충실한 이행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막고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남북대화를 지속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였다. 2002년 10월 제8차 장관급회담과 2003년 1월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그리고 이어 대통령 특사의 방북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북한측에 전달하고,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남북간에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2. 남북대화의 다양화 · 정례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6월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98년 이후 2003년 1월말 현재 남북 회담 개최 회수는 총 76회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과 남북간 비공개 접촉을 포함하면 총 85회에 이른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남북당국대표회담 등 4차례의 회담이 중국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특사회담 등 정치·총괄 분야 회담 13회, 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분야 회담 17회,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경제분야 회담 21회, 적십자 분야 7회,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참가에 따른 체육분야 회담 2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1995년이래 한반도내에서 개최되지 못했던 남북회담이 한반도에서 다시 개최되었고, 판문점도 1994년 이후 약 6년만에 회담장소로 복원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북을 왕래하며 회담을 하고 있고, 군사실무회담은 판문점에서, 적십자회담은 금강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1월 말 현재, 회담 개최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8회, 평양 13회, 금강산 20회, 판문점 15회, 제주도 2회, 중국 7회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2003년 1월 말 기준으로, 공동보도문 18건, 합의서 22건이 채택되었다. 공동보도문은 장관급회담 9건, 국방장관회담 1건, 경제분야 회담 4건, 적십자회담 2건, 특사 방문 2건이다. 합의서를 채택한 회담은 경제분야 15건, 군사분야 2건, 적십자 분야 4건, 체육분야 1건이었다.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 추진 현황 >

구 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
합 계		76회	2회	2회	26회	8회	38회
남북정상회담 및 관련 분야 회담 (12회)	남북정상회담	1회			1회		
	남북특사접촉	3회			3회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5회			5회		
	통신·보도 실무접촉	2회			2회		
	의전·경호 실무접촉	1회			1회		
남북장관급회담(9회) 및 실무대표접촉(1회)		10회			4회	2회	4회
남북 군사분야 회담(17회)	남북국방장관회담	1회			1회		
	남북군사실무회담 및 접촉	9회			3회	2회	4회
	남북군사실무접촉	7회					7회
남북 경제분야 회담(21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3회			1회		2회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회			2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2회				1회	1회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2회					2회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3회					3회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1회					1회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1회					1회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1회					1회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협의회	2회				1회	1회
	남북전력협력 실무협의회	1회				1회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2회					2회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1회					1회
남북적십자회담 (7회)	남북적십자회담	4회			2회	1회	1회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3회					3회
남북 체육분야 회담(2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	2회					2회
남북특사회담(3회)		3회			1회		2회
정상회담 이전 남북회담(4회)	남북당국대표회담	1회	1회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회	1회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2회		2회			

3.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국민의 정부」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해 내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남북사이에 철도와 도로의 연결, 해운 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에 기반을 둔 경제협력사업과 교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9월 18일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사업을 동시에 착공하여, 2002년 말 현재 동해선 임시도로 건설을 완료하였고, 경의선 철도도 연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등은 2003년 1월 말 임시도로 개통에 관한 군사적 보장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교역도 1998년에 2억 달러에서 2000년과 2001년에 4억 달러, 2002년에는 6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남북교역액은 20억 달러가 넘는다.

또한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 4개 경협합의서를 타결하였다.

남북간 왕래인원은 1998년 이후 2002년 12월 말 현재 총 37,572명(연평균 7,514명)으로, 50만명의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평균 인원 267명 보다 28배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교류 분야가 문화·예술·학술·체육·종교·방송 등 사회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지던 민간 교류행사도 서울·평양·금강산 등 한반도내에서 이루어졌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대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국가신인도 증대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IMF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기여하였다.

4.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2년 12월말 현재 5차례의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통해 5,4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였으며, 생사·주소 확인 사업 등을 통해 총 12,000여명이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였다. 2003년 2월에 또 한차례의 이산가족상봉단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동포애적·인도적 차원에서 또 남북화해협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였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2년 12월 말까지 5년간 정부의 대북지원은 2억 7,208만 달러이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5,442만 달러이다.

민간차원에서는, 정부 지원과는 보완적인 형태로, 지난 5년 동안 종자개량, 농자재 지원, 결핵 퇴치, 병원 현대화, 삼림 복구 등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1억 9,072만 달러이다.

1998년 이후 2002년 12월까지 5년간 정부와 민간의 총 대북지원액은 4억 6,280만 달러로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9,256만 달러이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2달러 정도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중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1998년 이후 매년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인 '하나원'이 1999년 7월 개원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 각종 프로그램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 정착기반이 조성되었다.

5.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일대에서 대남 비방·중상이 중지되고, 노동신문과 중앙방송 등 보도매체에서의 대남 비방도 크게 완화되었다. 나아가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사라지는 등 과거에 비해 남북간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었다.

2000년 9월에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잠수정 침투, 서해 교전 등 군사적 돌발 상황 발생시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 철책과 지뢰를 제거했고, 남북군사실무자간 직통전화도 설치하였다. 특히 2003년 1월 남북간 임시도로 통행과 관련한 군사보장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향후 비무장지대가 남북화해협력의 장으로 전환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새롭게 제기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납득할만한 조치를 촉구해 나가고 있다.

제4절 북한의 변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기존의 정치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도 여러 분야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나왔다.

또한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EU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 경영권을 확대하는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영방식의 수정을 모색하였다.

신의주, 금강산, 개성 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을 통해서 금융 및 무역, 관광, 경공업 산업을 육성하고 남한과 외국 자본유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 차원에서 ‘모기장을 치고 단계적으로 개방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지원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고 하겠다.

1. 대내적 변화

북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경제난과 식량난 극복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 중심의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통치슬로건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김정일 우상화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통치방식에서는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워 군이 전반적인 국가사회지도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군이 체제수호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신사고’ 등의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오래된 관습의 탈피와 새로운 경제의식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의식전환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새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갈 것”을 강조하고, 1월 4일 노동신문에서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일 본새(일하는 방식)와 생활기풍을 근본적으로 일신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낡은 틀, 고정 격식화된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 안목에서 보고 통이 크게 일관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재건을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외부지원의 확보에도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90년 이후 ‘98년까지 거듭해왔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탈피, ‘99년 이후부터 3년 연속 플러스 성장(‘99년 6.2%, ‘00년 1.3%, ‘01년 3.7%)을 이룩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회복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경계하면서도, 의식전환, 기술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 일련의 경제관리 개선과정을 밟아 왔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정보기술(IT)산업을 경제회복의 '단번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면서 한국·일본·중국 등의 10여 개 업체와 소프트웨어(S/W) 합작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경제제도 부문에서는 1998년 9월 헌법 개정 당시 독립채산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 생산조직의 채산성 관련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2001년 4월 대외경제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가공무역법·감문법·저작권법 등을 채택하였고, 2002년 3월 국토계획 부문에서의 외국과의 협조 강화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경제관리 방식에 있어서 효율성 및 수익성에 중점을 두었다. 기관·기업소에 실시하던 독립채산제를 성·관리국에까지 확대하고 생산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분적이거나 자체적 자금조성과 자율경영을 허용하였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기업경영의 자율권 확대 ▲임금 및 물가 인상 ▲노동결과에 따른 차등배분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제관리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재정부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재정수입 증대를 기본 목표로 두면서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내각의 성·관리국이 자체 책임하에 공장·기업소들의 생산활동을 직접 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예산 수납체계를 종래 기업소 중심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 성·관리국 중심의 '부문별 수납체계'로 변경하였다.

한편 북한은 산업구조 개편과 현대화를 위해 모든 산업시설을 폐기·개선확장·신규건설 등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산업조직을 개편, 생산정상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 투자하였다.

2000년 1월 및 9월의 2차례에 걸친 공장·기업소 조직 개편에 이어, 무역상사를 통폐합하는 등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에 주력하였다. 남포유리공장과 같은 노후화된 공장들을 폐쇄하고, 특히

자강도 포도주공장·신의주 화장품공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산업들의 설비 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북한 산업의 골간인 농업부문에서까지 일정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농업관리방식에 있어 분조관리제 개선, 농장원에게 협동농장 간부 선출권 및 작목 선택권 등의 부여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북한은 대외경제부문에서도 첨단 과학기술 도입 및 외화 획득을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개방적 자력갱생' 노선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여 왔다.

경제관료·전문가들을 한국을 비롯한 중국·호주·유럽연합(EU)·미국 등의 시장경제국가에 파견하여 선진과학기술 및 자본주의 경제운용방식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제도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벨기에·이탈리아·스웨덴·영국 등 유럽국가들에 경제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경협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IBRD,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세계식량정상회의(2002.6.10~13, 로마) 등의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서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변화양상은 최근에 발표된 「신의주특별행정구」('02.9.12), 「금강산관광지구」('02.10.23), 「개성공업지구」('02.11.13)를 지정·발표한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제에 있어서는 중국 홍콩행정구의 기본법을 모방하고, 개발 방향에서는 심천·상해 등 중국 특구 또는 개방구를 선별 수용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단동을 경제건설의 배후지로 하여 국제금융 및 물류흐름의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한 경제특구라 하겠다.

금강산관광지구는 관광특구로서, 개성공업지구는 제조업 중심의 물류 공급기지로서 주로 남한과의 경험확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외무역은 종래의 일률적인 사회주의적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적 거래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 규모가 1999년 14.8억 달러→2000년 19.7억 달러→2001년 22.7억 달러 →2002년 22.3억 달러 등으로 점차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상품의 경쟁력 부족으로 국가별·상품별로 수출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 수입수요의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북한주민들의 대외접촉이 증대되고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감이 다소 완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도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북지원에 있어 한 국제품임을 알 수 있는 지원물품·비료포대 등의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동포애적 호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북한 국내외 북한 방문자가 증가하고 접경지역에서의 무역이 활성화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는 상황변화에 따라 외부문화의 북한내 유입도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2년도에 북한은 심혈을 기울여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추진하였고, 이의 성공을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관광지를 정비하고 연계관광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항공로를 증설하였다. 일부 미국인에게 관광비자의 발급을 허용하였으며, 이례적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민박)를 제공하는 관광상품을 판매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장마당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생활터전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장마당이 사라지면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주민들 사이에서는 달러나 남한상품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TV 등 문화매체에서도 북한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대중화 추세가 점차 확산되었다. 주민계몽을 위한 과학상식, 컴퓨터 사용법, 체육, 건강, 위생, 여가 등 생활정보와 관련한 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 만화 등 오락적 성격의 프로그램 방영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문화교류 행사를 생방송하였으며, 남한에서 개최된 한·일 월드컵 축구경기와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의 주요 경기 장면들도 방영하였다.

또한 북한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교육하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전국의 고등중학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공업, 농·어업관련 과목별로 특화된 「선택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기술분야의 각종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대학·연구소를 신설하였다.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기술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대학들에 관련 학과들을 신설하고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였다.

2. 대외 관계의 변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고 북한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적 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1990년대 중반, 미국과의 제네바 핵 합의를 통해 경수로 건설과 매년 중유 50만톤 공급 등을 확보하면서 북한의 대외 활동은 국제

적 고립 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때부터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진영 외교'에서 실리를 위주로 하는 '전방위 외교'로 변화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북한은 1998년 3월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해외공관의 30%를 축소하는 양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외교수행체제의 체질을 개선하였다.

2000년부터 전통적 우방이면서도 다소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유럽제국과 새로운 관계를 확대하면서 일본과의 수교도 적극 추진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북한은 대미관계의 개선이 체제안보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핵, 미사일 문제 등을 고리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 6월에는 미사일 재발사 유예 발표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 제재 부분해제를 획득하였고 10월에는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한 후,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반테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등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1년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표방,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언급, 4월 비핵국가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 공개 등을 계기로 북한은 대미비난 수위를 높였다.

2002년 10월 미 국무부 켈리 차관보가 특사로 방북하였을 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계획을 언급함으로써 핵 개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계획을 먼저 포기한 후에야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2002년 12월부터 중유지원

을 중지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북한은 핵동결을 해체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하며, 핵비확산조약에도 탈퇴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핵시설 동결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북한은 2000년 약 7년 만에 수교회담을 재개하고 2000년 9월에는 제3차 일본인 처고향방문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교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나섰다.

2002년 4월 북·일 적십자회담과 외무성국장급 회담을 거쳐 마침내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일 평양선언'에서 북한측은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 시인·사과하였고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경협방식에 의한 대북경제지원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북·일간 관계 개선은 순조로워 보였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2002년 10월에 개최된 제12차 북일 수교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또한 2002년 11월에 개최하기로 하였던 '안보협의회'마저 불발되면서 북·일관계는 다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는 정상외교를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하였다.

중국과는 김정일 위원장의 두차례 방중(2000.5, 2001.1) 및 장쩌민 중국 주석의 방북 (2001.9)을 통해 기존의 우호관계를 회복한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견제하면서 다방면적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대 중국 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

러시아와도 정상간 상호방문(2000.7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2001.7-8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를 통해 전통적 친선관계를 회복하였다. 특히 2002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극동지방 방문 시에는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KR/TSR) 연결 사업 및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간 경제협력 등 실질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북한의 실리추구, 전방위 외교활동은 대 유럽연합(EU) 외교활동에서 보다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EU 국가와의 외교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총 15개 성원국중 프랑스 및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하였다. 특히 북한은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획득 및 경협추진 활동을 강화하였다.

동남아 국가들 역시 북한이 펼치는 새로운 외교활동의 대상이 되고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01년 7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방문한 데 이어, 2002년 3월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순방했다. 또한 북한은 식량 및 자원부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3. 대남 관계의 변화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적대적인 대남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남북당국 간 대화에 적극 호응해 오는가 하면, 대남정책에서 실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이는 당면목표인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서방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도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6.15 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남북회담에 호응해 왔다. 분야별 남북대화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 관광 실현 등에 합의하였으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절차·청산결제 등 4개 경험 관련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5차례에 걸쳐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상봉이 이루어지고 생사확인, 서신교환도 성사시켰으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더불어, 북한은 과거 수십년간 지속하여 오던 대남비방 및 선전 선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남비방을 중지하였으며, 노동신문과 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보도매체에서도 대남비방을 크게 완화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라디오로 방송하던 정례적인 비방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2000년 11월에는 대남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방송' 및 난수표 방송도 중단하였다.

북한은 민간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에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활성화에 합의한 이래 교류에 적극 나서는 실리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2002년에 북한은 민간차원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8.15 공동행사를 진행하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응원단이 참가하는 등 체육, 교육, 방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였다.

제2장 남북대화의 다양화 · 정례화

제1절 남북정상회담

1. 개최 배경 및 준비접촉
2. 회담 내용 및 「6·15 남북공동선언」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제2절 남북특사회담

1. 북측 특사 방한
2. 남측 특사 제1차 방북
3. 남측 특사 제2차 방북

제3절 남북장관급회담

1.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2.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3.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4.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5.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제4절 남북군사분야 회담

1. 남북국방장관회담
2. 남북군사실무회담
3. 남북군사실무접촉

제5절 남북경제분야 회담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3.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4.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5.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6.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7.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8.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제6절 남북 인도·사회분야 회담

1. 제1~3차 남북적십자회담
2.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
3.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제2장 남북대화의 다양화 · 정례화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이래 남북당국간 직접대화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각종 분야별 남북대화를 활발히 개최하며 이를 정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남과 북은 정치, 군사, 경제, 적십자, 체육 등 분야에서 총 76회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다자간 회담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과 남북간 비공개 접촉을 포함하면 총 85회에 이른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1999년도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준거 틀로서 우리측이 강조한 ‘상호주의 원칙’을 북측이 거부함에 따라 회담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 기간중 적십자대표접촉(‘98.3.25~27), 당국대표회담(‘98.4.11~17), 차관급 당국회담(‘99.6.22~7.3간 2회) 등 13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대화는 다양하게 또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1999년 4월~6월, 남과 북은 베이징 비공개 접촉을 통해 새롭게 대화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에 발생한 연평해전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그 직후에 차관급당국회담이 열렸으나 아무런 결실을 이루지 못한 채 남북관계는 전반적인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3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화해협력선언」(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 회복 지원 ▲한반도냉전 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기본합의서 이행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 개최 등을 천명하였다.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서도 우리 정부가 2년여 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대북화해협력정책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북한 측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오게 하는 계기를 조성했다.

베를린 선언 직후 남과 북은 베이징에서 3차례의 특사접촉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남북 두 정상직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축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회담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의 세부 실천사항들을 이행하고 남북간 현안 문제를 협의·해결해 가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가고 있다.

한편,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서해교전 등의 영향으로 남북대화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남과 북은 상호 신뢰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꾸준히 대화통로를 열어가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화해협력정책이었다.

제1절 남북정상회담

1. 개최 배경 및 준비접촉

가. 개최 배경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것으로서, 당장의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는 남북정상이 만나 민족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우리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2000년 3월 9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화해협력 선언」(베를린 선언)을 천명하였다.

베를린 선언은 남북간 평화공존이 실현가능한 대세가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①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 회복 지원 ②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 ③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④ 남북 당국간 대화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실천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으로서,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베를린 선언이 나온 직후 북측은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특사접촉을 제의하고, 이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북측의 제의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특사로 임명하고 북측 인사와 접촉케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위한 남북간 첫 특사접촉은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첫 접촉 이후 실무급에서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남북의 특사는 베이징에서 3월 23일 또 한차례 접촉을 가진 다음, 4월 8일 최종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0년 4월 10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00년 4월 8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나. 준비접촉

「4·8 남북합의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이 판문점에서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례 개최되었다. 이 접촉에는 우리측의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와 북측의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를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판문점에서 개최된 것은 199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었다.

제1차 준비접촉(4.22, 평화의 집)에서 우리측은 대표단 규모, 정상회담 형식, 회담의제, 왕래수단 등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 안

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북측은 절차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제의를 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에 관한 원칙적 입장만 제시한 후, 토의과정에서 우리측 제안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차기 접촉에서 제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제2차 준비접촉(4.27, 통일각)에서 쌍방은 절차문제 전반을 광범위하게 논의,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측은 정상회담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 안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가장 쟁점이 되었던 의제 문제와 관련, 북측은 4·8 합의서의 표현을 인용한 포괄적 의제를 제시하였다.

제3차 준비접촉(5.3, 평화의 집)에서 쌍방은 절차문제에 관한 합의서를 조항별로 협의하여, 수행원 규모(130명), 정상회담 횟수(최소 2회 이상), 왕래수단(항공로·육로), 편의보장 등 상당 부분에 합의하거나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북측은 제2차 접촉에서 기자단 규모를 80명으로 제시한 우리측 안을 수용하였으나, 제3차 접촉에서 30~40명 선으로 후퇴한 안을 제시하였다.

제4차 준비접촉(5.8, 통일각)에서 쌍방은 절차문제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회담 의제, 기자단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포괄적인 의제로 하자는 데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기자단 규모에 대해 북측은 40명 선을 고수하였다.

쌍방은 제4차 준비접촉과 제5차 준비접촉 사이에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제5차 준비접촉(5.18, 평화의 집)을 통해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준비접촉의 과정에서 남과 북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정상회담 의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타결하였다. 이러한 의제 채택은 남북정상회담의 목적과 우리 민족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는 의미가 있었다.

준비접촉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최소 2~3회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정상간 논의의 기회가 최대한 마련되었다.

또한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간 위성통신망을 구성·운용하기로 하였고, 우리측 인원과 장비로 직접 촬영·제작한 TV 실황방송을 북측의 협조를 통해 위성중계 함으로써 7천만 겨레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2. 회담 내용 및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는 선발대 30명을 포함하여 수행원 130명, 기자단 50명이 참가하였다. 수행원은 공식수행원 11명, 특별수행원 24명, 일반수행원 95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전용기 편으로 서해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지도급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공식 환영행사 참가에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며 환담을 나누었고,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 직후 회담을 가졌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4일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기간중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최고당국자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한다는 입장에 따라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협

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이 대결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북간에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에 구호나 원척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두 정상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여 6월 15일 발표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요지▶

- 나라의 통일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감.
-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

남북공동선언은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최고당국자가 합의, 서명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공동선언에서의 표현된대로 남북정상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원칙적 합의를 양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합의·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의 커다란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변4국의 이해와 협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당사자인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 제3국(인)의 개입이나 중재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당국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구축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기술자·근로자의 접촉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두 정상들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상회

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이끌어냄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쌍방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의미로 강조될 만하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국민의 정부」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초기의 의구심을 버리고 당사자간 대화에 응했기 때문이다. 즉 남과 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각종 회담의 다양화·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교류의 활성화와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 진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한 것도 의미가 크다. 앞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남북간 합의에 대해 우리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에 폭넓은 신뢰를 심어 주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남북특사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는 총 3차례의 특사 파견이 있었다.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가 2000년 9월 1차례 우리측을 방문했고, 우리측 대통령 특사가 2002년 4월, 2003년 1월, 2차례 방북했다. 특사는 정상의 뜻을 전달하고 의견교환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동안 남북은 3차례 특사 파견을 통해 그 당시 당면해 있던 제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당시 다소 정체되어 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계속 이어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북측 특사 방한

북측 특사 방한문제는 2000년 8월 우리측 언론사 사장단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기하고, 2000년 9월 1일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방북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북측 특사의 남한 방문은 추석 직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이 접근되었으며, 구체적 일정은 9월9일 남북연락사무소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북측의 김용순 특사, 박재경 인민군 대장 등 8명은 2000년 서해 직항로를 통해 9월11일부터 14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였다. 북측 박재경 대장은 9월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석선물로 남측에 보낸 송이버섯 3,000kg을 전달한 후 바로 귀환하였다.

김용순 특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박재규 통일부장관,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역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문제, 이산가족문제, 남북회담 일정 등 남북간 제반 현안문제를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한편, 김용순 특사 일행은 제주도 및 경주를 방문하고, 산업시설인 포항제철 등을 시찰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발전상과 관광산

업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 <북측 특사 방문시 공동보도문 요지> —

1.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2.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해 환영
3.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교환을 우선 추진
 - 9.20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 교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협의
4. 남북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타결을 위한 남북경협실무접촉을 9.25 서울 개최
5. 빠른 시일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개최
6. 15명 규모의 북측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
7.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남북공동조사 실시

2. 남측 특사 제1차 방북

우리 정부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실없이 끝난 이후 조성된 남북관계 소강국면을 해소하고, 미·북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세를 폭넓게 고려하여 2002년 들어 특사 파견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는 정부가 남북간 현안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서는 다른 회담 형식보다도 특사 파견이 적절하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 3월 북측이 우리측 특사 방북을 수용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원 대통령 특보를 특사로 임명하였다. 임동원 특사를 비롯한 우리측 일행 7명은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2000년 4월 3일 평양에 도착, 3박 4일간 머물렀다.

특사는 체류기간 동안 김정일 위원장 면담,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와의 회담 등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4월 4일 임동원 특사는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5시간에 걸쳐 남북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특사는 한반도 정세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특사는 무엇보다도 정체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남북관계가 계속 정체될 경우 한반도 긴장국면이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이미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과 남북간 군사당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북·미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이로 인해 또 다시 위기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와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였다. 그 결과는 미국 특사의 방북 수용, KEDO와의 협의 재개, 민간차원의 대미 교류 추진 등 미국과의 대화재개 수용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위원장은 또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사 방북은 당초 4월 5일까지 2박 3일간 예정되었으나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하루를 연기하면서 공동보도문에 대한 마지막 문안 조정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경제시찰단 방문,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동해선-서해선 철도·도로의 조속한 연결에 합의하는 등 총 10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특사는 4월 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였다. 당초에는 방북할 때처럼 서해 직항로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육로를 통한 판문점 귀환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동안 판문점 지역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에 비추어 이례적인 조치였다.

— <우리측 특사 방북시 공동보도문 요지> —

1.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
2.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관계를 원상 회복
3.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
4.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 적극 추진
 - ①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를 5.7-10까지 서울에서 개최
-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가동
 -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금강산 당국회담을 6.11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28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 ④ 북측은 경제시찰단을 5월중 남측에 파견
 - ⑤ 합의사항 이행과 진척에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5.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 재개
6.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

3. 남측 특사 제2차 방북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력 외교를 전개하였다.

2002년 10월 로스카보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2003년 1월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에 특사를 파견하는 한편 미국에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을 보내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입장조율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1월 10일경 북측에 특사 파견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기간(2003.1.21~24)중 북측은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 옴으로써 1월 24일 남과 북은 대통령 특사의 방북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 <대통령 특사 방북 관련 발표문> —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1월 27일부터 평양을 방문한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을 대표해서 이종석 인수위원이 함께 간다.

이번 특사방문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현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며, 임성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등이 수행한다.

대통령의 특사 방북은 2003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다.

특사 일행 8명은 2002년 4월 방북시의 전례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이용하여 방북, 귀환하였다.

특사는 체류기간 동안 대통령의 친서를 김용순 비서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했으며,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 현안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방에서 중요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사정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리측에 양해를 구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 내용을 전달해왔다.

김정일 위원장은 "대통령님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특사를 보내 따듯한 조언이 담긴 친서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언급하고 이 말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 임동원 특사는 방북기간 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사는 북측이 취한 핵 관련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가 모두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핵의혹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과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다. 또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측이 보다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NPT 탈퇴 선언 철회,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 복구 등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농축우라늄 계획 의혹의 해명과 이의 폐기를 선언할 것을 설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대화에 들어갈 것을 권고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측은 우리측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우리측 설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추후에 연락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이제까지 밝혀온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주장하였다. 즉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는 개발할 의사도 없다”, “이를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용의가 있다.”, “핵문제는 북·미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한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쌍방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우리측이 남북 군사당국간에 군사분계선 통과문제가 해결된 만큼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를 촉진하여 2월에 완료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북측이 동의하였다.

우리측은 차기정부도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며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북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당선자측 대표인 이종석 인수위원은 당선자측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핵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제2절 남북장관급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5항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서울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2003년 1월까지 남북을 오가면서 9차례 개최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사항들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현안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분야별 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는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남북 쌍방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대화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2000년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실천 결의행사 개최,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문산-개성간 24km구간 연결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두 차례 추가 실시 등 7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신규도로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등 5개항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북측에 촉구하고, 모든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실현, 남북간 직항로 개설, 말라리아 공동방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및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 2회 추가 교환,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실무협의 개최,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 4개항을 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각기 제기한 의제를 놓고 협의한 결과,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두 차례 추가 실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공동추진,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키로 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합의사항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석달반 동안 이루어진 일들은 크게 보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협력사업 이외에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매 회담시마다 많은 합의를 내기보다는 이미 합의한 협력사업들의 이행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 양측은 세부 의제에 대한 다소의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남북간 합의사항들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의 조속한 타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문제를 차기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하였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제3차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진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결산하고 2001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부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업들의 추진일정을 조정,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차 장관급회담시 양해가 이루어진 사업 등을 협의·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은 남북간 전력협력문제, 남북어업분야 협력문제, 남북태권도 통합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2000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전력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경협관련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북측의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추진일정을 재조정하고, 어업부문 상호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남과 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제4차 회담에서 합의된 일정보다 6개월이나 연기되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쌍방은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등에 합의하는 등 경협분야 9개항을 포함한 총 13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이 회담을 통해 우리측은 지난 3월에 개최기로 합의했었던 제5차 장관급회담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이를 연기하였던 점과, 북측 선박이 우리측 영해를 무단 통과한 사건, 그리고 8·15 남북공동행사 진행과정에서 일부 방북단의 '3대현장 기념탑' 앞 행사 참석과 돌출 발언으로 물의가 빚어진 사실 등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2001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틀 연장되어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9.11 테러사태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제5차 회담 합의사항들의 이행일정을 재조정하며, 남북간 대화국면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남측이 취한 비상경제조치에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5차회담

합의사항 이행일정의 재조정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경계강화조치가 9.11 미국내 테러 사건 이후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취해진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남북간 여러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공조 등 우리측의 외교활동은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남과 북이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받을 때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3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접촉, 실무접촉 등을 통해 12월초 4차 이산가족방문단 상봉, 제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 등에 의견접근을 이끌어 냈으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장소, 제7차 장관급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이 종료되었다.

2.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북측은 2002년 7월 25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북측은 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쌍방사이에 합의한 남북철도연결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5 특사 공동보도문 이행문제와 그밖의 관심있는 문제들을 원만히 협의하기 위하여 8월 초 금강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들의 실무접촉부터 가지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7월 30일 정세현 수석대표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여 북측이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장관급회담대표 2명을 포함하여 적절한 실무인원을 금강산에 보낼 것임을 표명하였다.

북측이 당일 회신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측 제의를 수락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봉조(통일부 정책실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 표	서영교(통일부 국장)	김만길(문화성 국장)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은 2002년 6월 29일 서해사태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우리측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측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서해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고 더 이상의 논쟁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 쌍방은 수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제7차 장관급회담 일정과 의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하여, 분야별 회담 일정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안을 타결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1.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002.8.12~14 서울 개최
2.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아래 사항을 협의·해결
 - 4.5 공동보도문 이행 일정 확정문제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문제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등 경제협력문제들을 토의)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개최문제
 -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
 -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
 -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제5차 이산가족 상봉 실현문제
3.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 북측 참가
4.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민족통일대회」와 9월 축구경기 적극 지원

3.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2년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7차 회담에는 우리측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쌍방 대표단에 대폭적인 교체가 있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정세현(통일부 장관)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표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박문석(문화관광부 차관) 이봉조(통일부 실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조성발(내각사무국 참사)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춘근(민경련 서기장) 김만길(문화성 국장)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그 동안 남북간 합의가 많았으나 그 이행은 지지 부진하여 대내외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회담은 실천하는 회담,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를 금년 내에 연결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개최 ▲금강산육로관광 실현 등 관광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개최 ▲면회소 설치 및 서신교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제4차 적십자 회담을 개최 ▲추석을 계기로 제5차 상봉단을 교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임남댐 공동조사 문제 등 협의 ▲부산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8.15 서울민족통일대회, 남북축구경기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서해교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6.15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적십자회담, 금강산당국회담 등 각종 회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남북축구경기, 태권도시범단 교환, 경제시찰단 파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북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실무접촉을 수 차례 진행하여 4·5 공동보도문 이행일정,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간 핵심 현안의 실천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10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26~29 서울에서 개최
 -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그 밖의 경제 협력 문제 등을 협의
 -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동시에 병행 착공
2.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함.
 -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내 개최
3. 임남댐 공동조사를 실시, 이를 위한 관계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
4.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9.4~6 금강산에서 개최
 - 면회소 설치·운영문제 등을 협의
 - 이와함께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
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을 9.10~12 금강산에서 개최
6.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 참가와 성화 봉송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17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실무협의를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
7. 9.6~8 서울에서 진행되는 남북축구경기에 적극 협력
8. 태권도 시범단 교환
 -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 평양 방문,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 서울 방문, 관계단체들간의 실무협의 주선
9. 북측 경제시찰단 10월 하순 남측 지역 방문
10. 제8차 장관급회담을 10.19~22 평양에서 개최

4.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제7차 회담에서 합의한대로 10월19일부터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제7차 회담이후 2달여 동안의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감안할 때 제8차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제8차 회담을 이틀 앞둔 10월 17일,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8차 회담의 전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형성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간 화해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진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다른 현안에 앞서 제8차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최우선과제로 대두되었다.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합의한 일정을 하루 넘기면서 2002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회담 며칠 전에 제기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기를 시험·생산하지 않으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지 않기로 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핵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그리고 제네바 미·북 합의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측은 북한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합의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 유관국가 및 국제기구와 즉각 대화에 나서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핵문제 이외에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군사적 신

외구축 문제를 논의할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을 중점 제기하였다.

북측은 핵문제는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로 남측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10월 21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은 우선 우리측 대표단이 김영남 상임위원장 일행과 공동면담한 데 이어,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간 단독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정세현 수석대표는 최근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측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최근 제기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렇게 해야만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측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북한도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4박 5일간의 회담을 통해 남북 쌍방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화해협력의 이행 및 제도화 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결국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8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회담 기간중 「개성공단 법률관계자 접촉」이 4차례 개최되

었다. 남북 쌍방의 해당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한 임금 및 노무관리, 하부구조 개발과 지장물 철거, 토지임대료 문제 등을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 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
- ② 철도·도로 건설을 동시에 빨리 진척시키며, 1차적으로 경의선을 개성공단에, 동해선을 금강산지역에 연결
 - 동해선 철도 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 방향의 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
- ③ 개성공단 착공(12월중) 등 실무문제는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협의
 -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 설치
- ④ 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 금강산에서 개최
- ⑤ 통행합의서 채택문제는 철도·도로 처음 연결 시기에 맞추어 협의
- ⑥ 동해어장 개방을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에서 개최
- ⑦ 금강산면회소 조기 건설 및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지원
- ⑧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

5.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은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제9차 회담을 1월 중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9차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1주일 정도 연기된 일자로 수정 제의함으로써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제9차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수 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에 장애를 조성하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북측이 분명하게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핵동결 해제조치를 원상복구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이 2003년 1월 10일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으며, 이를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실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핵문제가 북·미간의 문제로서, 북·미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3박 4일 회담 기간 동안의 우리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에 대한 북측의 보다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경협문제와 관련해서는 철도·도로 연결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 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일정에 합의하였다.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을 4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도 장관급회담이 계속될 수 있게 되었다.

제9차 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교류협력사업의 계속 추진 그리고 차기 회담 일정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종료되었다.

한편 제9차 장관급회담 기간 중 북한이 우리측 특사 파견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측 특사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북측을 방문하였다.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24일
서 울

제3절 남북군사분야 회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과 북의 군사당국자들이 마주 앉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남북회담 역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첨예한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왔던 남과 북의 군사당국자들이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남과 북은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군사분야의 화해·협력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의 조속한 개최 협의’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후 우리측이 2000년 9월 11일 송이버섯 전달차 서울에 온 북측의 박재경 대장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동의하는 서한을 9월 13일 우리측에 보내옴으로써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조성태 국방부 장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차석 대표	김희상 국방부장관 특보(중장)	박승원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중장)
대표	김국헌 국방부 국장(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국장 이인영 합동참모본부 과장 (대령)	김현준 인민무력부 보좌관 (소장) 로승일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유영철 판문점대표부 부장 (대좌)

회담에서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 노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군사적 협력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를 주는 군사행동 금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5개항으로 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쌍방이 합의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우리측의 개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2003년 1월말 현재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
-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의 왕래 허가와 안전을 보장하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 구체적 세부사항 추진
- 남북 연결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
-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 중순 북한에서 개최

2. 남북군사실무회담

남과 북은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5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타결(2001. 2. 8)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하여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발효시키기로 하였으나 2001년 2월 11일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로 동 합의서의 서명 교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오에 따라 합의서 발효가 연기되었다.

합의서 발효가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새로이 동해선 철도·도로도 연결하기

로 합의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 8.27~8.30)에서는 2002년 9월 18일 이전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 유엔군과 북한군은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두차례 개최(2000. 11.17, 2002. 9.12)하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이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과 북은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2. 9.14, 평화의 집)을 열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하였다. 합의서 타결에 이어 남과 북은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9.16, 통일각)과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9.17, 평화의 집)을 통하여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군사보장합의서」를 발효시켰다.

<< 제6~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덕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준장)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대좌)
대표	이명훈 1사단작전부사단장(대령) 박성규 합동참모본부 과장(대령) 이명훈 육군건설단 계획처장(중령) 서훈택 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배경삼 인민무력부(상좌) 김기복 인민무력부(상좌) 정창욱 인민무력부(상좌) 박기용 인민무력부(상좌)

발효된 합의서는 전문을 포함하여 총 6개조 4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요지> —

- 남북관리구역 설정
 - 기존 경의선 철도노반 기준, 250m 폭 설정
- 지뢰 및 폭발물 제거
 - 계절조건 고려, 작업 1주전 상호 연락, 지뢰제거 작업 동시 착수
 - MDL부근 쌍방 400m 근접시 남측 화,목,토/ 북측 월,수,금 작업
- 철도와 도로 작업
 - 쌍방 200m 근접시 남측 월,화,수/ 북측 목,금,토 작업
 - 공사 마감단계시 MDL 20m 월선 허용
- 공사현장 책임자간 접촉 및 통신연결
 -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군사실무 문제는 전화통지문을 통한 협의 원칙
 -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에 유선통신 2회선, 팩스 1회선 설치
- 작업장 경계 및 안전보장 대책
 - 안전보장을 위해 100명 이내의 경계병력 운용
 - 경계병력의 무장 : 개인화기, 개인당 실탄 30발로 제한
- 합의서 발효·폐기 및 수정·보충
 -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발효

3. 남북군사실무접촉

남과 북은 쌍방간에 합의된 「군사보장합의서」의 구체적 이행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 통일각과 평화의 집을 번갈아 오가며 2002년 10월 3일부터 2003년 1월 27일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관리구역 내 지뢰제거절차 및 검증 문제, 통신선 연결, 임시도로 통행 등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군사실무접촉에는 우리측은 김경덕 준장(1차~3차)과 문성묵 대령(4차~7차)을 수석대표로 한 5~6명의 인원이, 북측은 유영철 대좌를 단장으로 한 3~4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7차례의 접촉중 제1~5차 접촉(1차 : 2002. 10. 3, 2차 : 10.11, 3차 : 10.16, 4차 : 10.25, 5차 : 11.13)에서는 지뢰제거작업 및 검증문제, 통신선 연결, 철도·도로 접속지점 설정을 위한 공동측량 등 남북관리구역 안에서의 공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제6차 접촉(2002.12.23)부터는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를 논의하였다. 제7차 접촉(2003. 1.27)에서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및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 동안 북측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여 왔으나, '남북관리구역이 비무장지대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승인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기함으로써 북측의 정전협정 준수가 기정 사실화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요지>**

-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
-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
 -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
-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
-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

제4절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2000년에 3차례, 2001년에 3차례, 2002년 14차례, 모두 20차례의 경제분야 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제분야 회담은 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접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쌍방은 경제협력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2000년 11월 11일 제2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재 합의서 등 4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가서명하였다.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하였으나, 발효절차를 거친 문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2002년 12월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전력협력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2001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전력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성과없이 회의를 종료하였다.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00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

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2001년 1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월 3일 서명·교환하였다.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위원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위원장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제1부 위원장)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박정성(철도청 대외철도협조 국장)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양성호(건설교통부 수송물류 심의관)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김해중(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경련 참사)

* 제3차 회의시 우리측 양성호 위원을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위원으로 교체

우리측은 쌍방이 합의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를 9월 16일 양측이 동시에 착수하여 철도는 2002년 내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연결할 것을 제시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임시 도로를 11월말까지 연결하여 2002년 내에 개통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이를 위해 9월중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 9월중 양측 사업자간 실무협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과 공사 착수 이전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착공식을 9월중 양측이 각기 편리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이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및 실무협의회를 9월 중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에 대해 북측구간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자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양측 당국선에서 책임지고 실천하되 북측은 관련 특별법을 곧 제정·공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실무협의회는 경의선 임시도로 개통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되 북측은 임진강 상류 기상수문자료를 우리측에 통보하고, 임진강 유역 치산·치수를 위한 남측의 묘목 제공을 요청하면서 관련 실무협의회를 경의선 임시도로 완공이후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 쌍방은 수차례의 위원장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결과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임남댐공동조사 등에 관한 8개항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을 서명·교환하고, 「남북간 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요지>—

-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동시 병행추진
 - 착공식은 9.18 쌍방이 동시에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
 - 경의선 철도는 2002년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연결
 -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은 1차적으로 저진-온정리(철도), 송현리-고성(도로)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
 - 동해선 임시도로는 2002년 11월말까지 연결
 - 북측구간 철도·도로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남측이 북측에 제공
 - 군사실무회담은 9.18 전까지 개최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13~15 개최(금강산)
- ② 개성공단 2002년내 착공 및 10월중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개성)
 - 북측은 곧 「개성공업지구법」 제정·공포
 - 남측은 개성공단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
- ③ 임진강수방 현지조사를 11월중 착수 및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 개최(개성)
 - 북측은 임진강 상류의 기상수문자료를 남측에 통보
 -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용 묘목을 북측에 제공
- ④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16~18 개최(금강산)

- ⑤ 투자보장 등 4개 경제협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각기 해당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4개 합의서 후속조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⑥ 남측은 쌀 40만톤(차관방식) 및 비료 10만톤을 가급적 빠른 시간내 제공
- ⑦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 방문
- ⑧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1.6~9 개최(평양)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북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추진, 동시개통의 원칙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가야함을 강조하며, 남·북·러 철도상 회의의 조속한 개최와 이를 위한 3자 또는 양자간 실무자 접촉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건설 착공식을 12월 20일경 진행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기에 앞서 4개 경제협력 합의서를 동시에 발효시키며,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확인, 통행, 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 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남측 어민들의 북측 동해어장

이용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5일에 각각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선 최근에 대두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안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지점 확정을 위한 공동측량을 11월 13일부터 실시하고 공사일정표 교환 및 공사진행 현황을 통보할 것과 철도·도로 실무협의회를 11월 말에 개최하여 열차·차량 운행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개성공단건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3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때까지는 임진강 공동조사가 착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11월 말에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하고, 식량 분배와 철도·도로 자재·장비 사용과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북 쌍방은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해운협력 실무접촉 및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개최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초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에 서명·교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요약>

-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대책 강구
 - 11월중 공동측량 실시, 공사일정표 교환 및 공사 진행 상황 상호 통보
 -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실무접촉 11월 중순 금강산 개최
- ② 개성공단 건설이 12월 하순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
 -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 남측은 빠른 시일 안에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
 -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실무접촉 12월 초 개최
- ③ 해운협력 및 북측 동해어장 공동이용 관련 실무접촉 일정 합의
 - 해운협력실무접촉 11월 19일 금강산 개최
 - 북측 동해어장 공동이용을 위한 실무접촉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개최
- ④ 빠른 시일 내에 4개 경험 합의서 동시 발효 및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12월 중순 서울 개최,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등의 문제를 협의
- ⑤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
- ⑥ 제4차 회의는 2003년 2월초 서울에서 진행

2.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제1차 회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제1차 회의는 2001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남북 쌍방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만 확인하고, 차기 회담을 2001년 10월 19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측이 9.11 미국내 테러 사건 이후 우리측이 취한 비상 경계조치를 들어 제2차 회의 개최 장소로 합의했던 설악산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면서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제2차 회의

2002년 4월 우리측 특사 방북시 합의에 따라 남북 쌍방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제2차 회의를 2002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2002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택룡(내각사무국 부장)
대표	김찬(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장) 정내삼(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장)	방종삼(무역성 부국장) 전종수(내각사무국 과장)

우리측은 먼저 동해선 임시도로가 완공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육로관광을 실시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에 상응하게 북측도 관광특구 지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관광객 확대를 위해 자율통행로를 확대하고 관광코스를 추가 지정하며, 장차 경의선 도로가 연결되면 개성지역으로 관광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1차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쌍방 당국이 책임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과 사업자 간의 합의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1월중 육로관광을 실현하고 북측의 관광특구 지정 등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이에 북측도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그 결과 11월중에 육로관광을 시작하고 해로관광도 계속 활성화해 나간다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의 사업자들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당국 간 협력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3. 남북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과 관련 2차례의 실무협의회와 3차례의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세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쌍방은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인도·인수 절차,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경의선 임시도로 접속점 및 계획고(計劃高) 등에 합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표	양성호(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이성한(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최진택(국토환경보호성) 김명렬(철도성 과장)

* 2차 실무협의회시 우리측 대표는 조명균·손봉균·이성한(1차 실무접촉시 이성한 빠짐. 2, 3차 실무접촉부터 우리측 양성호는 손봉균으로 교체), 북측 대표는 박정성·길원국·김창식(제1차 실무접촉시 박정성, 김철호, 김창식, 계봉환 참가, 제2차 실무접촉부터 계봉환 빠짐.)

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2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남북이 동시에 갖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9월 18일 11:00에 하되, 경의선은 남방한계선 제2통문 앞에서, 동해선은 송현리 통일전망대 앞에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북측도 착공식 시간·장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공사방법 및 절차와 관련, 군사분계선상 접속지점에 대해 우리측이 생각하는 평면 좌표 및 종단 계획고(計劃高)를 제시하고 북측 입장을 문의하는 한편, 비무장지대부터 우선적으로 시

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북측 연결구간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차관방식으로 공사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동해선 철도는 온정리~저진 사이 구간을 단선으로 연결하고, 동해선 도로는 고성~송현리 사이의 구간을 2차선으로 연결하자고 제의하였다. 한편 서해선 (경의선) 철도는 기존철길노선을 따라 개성역~군사분계선까지 15.3km를 연결하고, 서해선 도로는 개성공단 부지의 남쪽 경계선에서 철길노선 우측(우리측: 좌측)을 따라 4차선으로 건설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철도·도로 접속지점은 쌍방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한 곳으로 하며, 북측 구간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설비는 1차분을 9월중에, 나머지 전량은 2002년 안에 제공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7차례에 걸친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의견접근을 보고,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및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하였다.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요지>**

- 9.18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 개최하며,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1일전 상호교환
- 철도는 단선, 경의선 도로는 4차선으로 연결하고, 동해선 도로는 2차선으로 연결하되 12월초부터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함.
- 철도·도로의 접속지점은 쌍방군사당국이 합의한데 따라 공동측량을 거쳐 결정
- 철도 분계역은 비무장지대 밖 자기측 구간 편리한 위치에 각기 건설
- 연결공사에 필요한 1차분 자재·장비는 9월안에, 나머지는 공정에 맞추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북측에 제공
-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열차와 차량의 운행문제 등 협의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요지>

-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 30년으로 하며 이자율 연 1.0%
- 남측은 1차분 자재·장비를 9월안으로,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
- 차관금액은 남측의 자재 실구매금액 및 장비의 실구매금액 또는 임대료 등을 합산한 금액
- 자재·장비의 인도·인수를 위해 남측은 인도회사를, 북측은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
- 북측은 자재·장비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
- 북측은 필요에 따라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 허용

나. 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1차분 자재·장비 제공에 대한 합의서▲인도·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동측량 일정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도 합의 기한내 남북철도·도로연결을 완료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밝히면서, 가급적 1차분 자재·장비를 확보하고자 주력하였으며, 인도·인수 절차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남과 북은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과 인도·인수 절차를 집중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개요▶

- 자재 33개 품목(유상공여), 장비 45개 품목(유상공여 : 20, 유상 임대 : 25) 총 78개 품목
 - 굴착기 등 일부 품목 및 수량, 규격을 조정
 - 폭약, 뇌관, 도화선, 천막 등 제외
 - 시멘트, 휘발유, 디젤유 등 공사진행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재 제공
 - 연유운반자동차 4대 및 화물자동차(15 t, 10 t, 6 t) 238대 제공

* 상기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은 향후 공사진전에 맞추어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자재 · 장비 인도 · 인수 절차 요지>

- 포장 및 표지 관련
 - 자재 · 장비를 포장할 경우, 품목 · 수량 · 물품내역 등과 함께 제공측의 표지를 함.
- 첫 자재 · 장비 제공 전달일정 확정
 - 인도 · 인수 절차 문건 교환 이후 5일 안에 첫 자재와 장비를 장전항과 해주항을 통하여 동시에 북측에 전달
- 수송경로 관련
 - 우선 북측의 원산항 · 장전항과 해주항을 수송경로로 하며 차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육로 및 항구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진행
- 인수 및 사용결과 통보
 - 자재 · 장비의 사용지역, 수량 등을 포함한 인수 및 사용결과를 인수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문건으로 통보
 -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 허용

다. 제2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접촉

제2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접촉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공동측량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측량일정 ▲열차 및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자재 · 장비의 품목 및 수량 조정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문제 등을 합의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3국 철도상 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 · 북, 북 · 러, 한 · 러간

양자협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자재·장비의 전체 제공분에 대해서는 레일·침목·고정장치 등에 대한 규격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는 선에서 대처하였다.

반면에 북측은 ▲전체 제공분 자재·장비제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품목·수량 확정 ▲차량 운행합의서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4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동측량절차와 방법을 합의하였다. 차량운행에 관련한 기본합의서와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에 관한 합의서는 추후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요지>

○ 공동측량구간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으로 200m 길이와 철도·도로 연결 남북관리구역 폭으로 함.

○ 공동측량기간

- 동해선 11.26~11.27간, 경의선 11.29~30간, 매일 09:00부터 15:00까지 진행

○ 공동측량인원

- 쌍방 철도 및 도로전문가 각각 10명, 지원인원 5명 이하로 구성
* 공동측량인원 명단은 측량 하루 전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통보

○ 현지측량자료 상호 교환 및 공동측량결과자료는 측량후 최단기간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상호 통보 확정 등

라.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이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의 경우 우리측 구간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의지를 북측에 확인시켜 주면서 남북간 연결을 늦어도 2003년 1월 15일까지 완료한다는 것을 합의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레일·침목 등 궤도부설 관련 2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에 대한 협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마무리와 열차운행합의서에 대한 협의 ▲경의선 임시도로 개통문제 등을 합의하도록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통신·신호·궤도 등 전체 제공분 자재·장비 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품목·수량 확정에 역점을 두고, 특히 공사 기일이 촉박함으로 교량상판 제공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열차운행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열차운행합의서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쌍방 철도당국간 공동위원회를 구성,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의선 임시도로의 개통문제는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자재·장비문제만 해결되면 개통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수석대표접촉과 궤도, 신호·통신, 도로 등 관련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차량운행합의서와 임시도로개통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여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사이의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2002년 12월 31일 북측이 서명본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하였고 2003년 1월 4일 우리측 서명본을 북측에 전달함으로써 교환절차가 종료되어 현재 우리측 내부의 발효절차를 거치기 위해 관계부처간에 협의 중이다.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전까지 개통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를 해당 부문에 각기 제기함.
- 남과 북은 차량운행기본합의서를 필요한 서명·교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시키며,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2003년 1월 중순에 평양에서 개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설치
-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자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
-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함.
 -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 가능
 -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 변경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자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
-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 납부
- 손해배상
 -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

마.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2003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일정 ▲궤도부설 및 전체 제공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을 타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경의선 철도는 2월 중순에 연결하여,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 분계역인 군사분계선-판문역간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북측에 제공하고, 나머지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시도로를 우선 개통하고, 경의선 철도를 연결한 후에 열차와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 조속히 열차운행기본합의서를 타결하며, 남북간 열차·차량운행사무소도 개설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양측 분계역간 연결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동시에 개통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열차운행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면서도, 경의선·동해선 동시연결문제가 합의된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남북 쌍방은 경의선 철도 개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자재·장비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합의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요지>

-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
 - * 각 구간별 연결시점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협의·해결
- 궤도부설 자재·장비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 1차분 및 궤도부설용 자재·장비 등은 해상과 육로를 통해 제공
- 남과 북은 열차운행합의서를 상호 교환,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 등은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앞으로 진행되는 실무 접촉을 통해 협의·확정

4.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에 따라, 「임남댐 공동조사 실무접촉」을 200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량장균(건설건재공업성 국장)
대표	박경석(통일부 과장)	최정조(평양전력설계사업소기사장)
	심완섭(국무총리실 과장)	림재학(건설건재공업성 과장)

우리측은 공동조사와 관련한 조사방법, 조사일정, 공동조사단의 구성·운영 등 실무절차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임남댐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남댐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여 북측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킨 데 대한 보상과 임남댐 공동조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임남댐 공동조사 합의서(안)」과 「조사대상 및 항목에 관한 합의서(안)」, 「사전제공 요구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기술적·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북측에 설명하였다. 또한 북측의 보상요구 주장이 남북간에 합의된 바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공동조사가 급선무라는 입장을 재강조 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데 합의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5.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가.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대표	김중태(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윤영선(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장)	김명철(광명성총회사 대외사업부) 박응철(대외경제위원회 합영지도국)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쌍방당국의 역할문제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공단건설 착공시기, 외부기반시설 건설문제 등에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먼저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들을 신속하게 제정·공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공단 건설과정에서 많은 장비와 자재, 인력이 왕래해야 하는 만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통신, 통관 및 검역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개성공단 착공에 따른 기본방향을 정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과 동시에 진행되는 전력, 통신, 용수 등 하부구조망 건설을 당국이 책임지고 추진하며, 개성공업지구 토지에 대한 임대비와 기존시설물 철거비용은 남측 개발자가 당국의 지원 밑에 부담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 양측은 3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7개항에 이르는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건설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요지>

-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며,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
-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하고, 규정·세칙 등도 빠른 시일내에 제정, 공포
-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 남측은 전력·통신·용수 등 외부기반시설 건설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최대한 적극 협력
 - 구체적 문제는 사업자간 실무접촉을 조속히 개최하여 협의
- 통행·통관·검역·통신문제는 철도·도로 최초 연결시기에 맞추어 남북 경추위 또는 실무접촉을 통하여 협의·확정
-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 설치
- 실무협의회 2차 회의는 2002년 12월중 서울에서 개최
- 쌍방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

나.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은 200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대표	김중태(통일부 교류총괄과장)	박성일(세관총국 심의원) 최명남(체신성 부국장)

남과 북은 12월 중 개성공단 착공과 관련한 착공식 날짜,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통, 통신·통관·검역 등 제도적 보장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다.

먼저 우리측은 개성공단 조성원가 절감을 위한 북측의 협력을 재강조하며,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 및 세칙의 신속한 제정·공포를 촉구하였다. 또한 공단개발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착공에 필요한 임시통행로 개통 등을 합의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내외 여론악화에도 불구하고 공단개발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반면에 북측은 착공식 날짜 확정, 개발구역안의 하부구조망 건설 추진문제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남북이 12월 25일경 공동으로 착공식을 개최하되, 규모·형식·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자고 요구하였다. 또한 남측 정부가 지체없이 기반시설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기를 촉구하고, 통신·통관·검역합의서는 착공식 날짜를 확정시킨 후에 논의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측은 임시통행로 개통은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법 관련 11개 하위규정은 12월말이나, 2003년 1월초에 공포할 계획임도 설명하였다.

쌍방은 2차례 전체회의와 수차례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과 착공식 일정, 착공전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 개통 등에 합의하고 공동보도

문을 발표하였다.

—<제1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
 - 이를 위하여 북측은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열고,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
 -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 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전력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요지>—

-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간주하고,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하며, 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북측은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며, 세부 절차는 남과 북이 협의하여 확정
-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 우편 및 전기통신에 대한 상대방의 관련법 및 국제협약·국제관행 존중 및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상호 제공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 공업지구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세관과 시설·장비를 공업지구 내에 설치
- 차량을 지정된 기관(남측:세관, 북측: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
- 물자와 우편물은 공업지구세관, 출입 인원의 휴대품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 검사
- 반출입시 사전에 공업지구 세관에 신고서류를 제출, 출입관세 및 수수료 면제

— <개성공업지구검역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접경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 검역대상 물자·검역기준 및 검역방법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양측 당국이 협의하여 확정
- 북측은 검역소를 공업지구내에 설치
- 검역절차를 신속히 수행하여 물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직원을 파견하여 검역업무 공동 수행 가능
-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

6.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한은 공동조사와 산림조성, 강하천 정리, 홍수조절 댐 건설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하였다.

나.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1차 회의가 개최된 지 1년 8개월 만인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병철(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대표	박경석(통일부 과장) 심완섭(국무총리실 과장)	전병환(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최태룡(기상수문국 과장)

우리측은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임진강 유역현황에 대한 자료를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임진강 상류지역의 기상·수문자료 등을 11월 10일까지 제

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묘목제공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조림지역의 토양 등에 대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현지조사를 공동조사와 단독조사로 분류하고 공동조사는 남북공동으로 상대방지역을 조사하고, 이후 조사는 자기측 지역을 각자 조사하는 단독조사를 주장하였다.

묘목제공과 관련해서는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남측에서 제공하고 우선 그 일부를 11월중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동조사 문제, 기상·수문자료 통보문제, 홍수예보시설 설치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었다.

그러나 묘목제공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공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묘목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합의된다면, 구체적인 제공시기, 규모는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의 묘목제공이 어렵다면 현재 북측의 임진강 유역 10개 시·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쌍방은 제기된 사안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후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과 한강 하류에 대한 현지조사, 기상·수문 자료 통보, 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
- 쌍방은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대화와 접촉으로 협의·해결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차 회의는 2003년 1월 중 서울에서 개최

7.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는 200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성진(재경부 경제협력국장)	김춘근(민경련 서기장)
대표	엄종식(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구본민(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윤선호(법률가위원회 참사) 김기문(출입국사업국 부국장)

우리측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4개 경협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합의서 및 원산지확인합의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측은 통행합의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포함하여 남북간 통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통행 절차뿐만 아니라 신변

안전 및 무사귀환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원산지확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확인요청기관은 세관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되, 먼저 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를 채택한후 4개 합의서와 함께 발효시키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에 한정하여 출입절차를 규정한 통행합의서를 제시하고, 청산결제 등 남북간 결제업무는 한 개의 은행이 담당토록 하며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문제는 4개 경협 합의서 발표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측은 원산지확인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원산지증명기관의 지정은 내부적인 문제로서 상대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담당기관으로 고집하였다.

쌍방은 통행합의서에 규정될 신변안전보장의 구체적 수준,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방법 및 시기, 일반결제은행 복수지정 문제, 원산지증명기관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8.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가 . 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제1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은 2002년 11월18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강무현(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표	서 호(통일부 과장) 김진홍(국무총리실 과장)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조정철(육해운성 부원)

* 1·2차 양측 대표단 동일

우리측은 ▲남북간 항로개설 ▲운항선박의 안전 및 통신보장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항들과 북측항들 사이의 해상항로설정과 그 운영문제 ▲남과 북의 민간선박들이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목적항까지 가장 가까운 항로를 따라 운항하도록 하는 문제 ▲남과 북의 해운부문 사이의 통신보장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측은 민간선박들의 영해통과문제가 제8차 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인 만큼 해운합의서 본문에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합의서 조항별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민간선박의 영해통과와 관련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해운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난 구조 등 남북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진지하게 협의
- 이번 접촉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제2차 실무접촉에서 계속 협의
- 남북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중 금강산에서 개최

나 .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제2차 남북 해운협력실무접촉은 2002년 12월 25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1차 접촉에서 이미 제시했던 남북해운협력합의서안을 중심으로 협의하되 ▲해상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항구를 추가하는 문제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기하였다.

부속합의서에 포함될 사항에 관해서는 개략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간 해운협력제도의 단계적·점진적 발전방향에 대한 북측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영해통과와 쌍방 항구간의 해상항로설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부속합의서에 관해서도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3차례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수석대표 및 대표접촉을 통해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 구난 등 15개항에 이르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3월중 3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항로대 설정, 통과절차 등 해운합의서 이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들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해운합의서 요지>

○ 적용범위

-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 남북 해상운송 및 항로 개설

-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 보장
-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

○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 남과 북은 일방의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

○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재난이나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및 인명·재난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응급조치
-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 실시

○ 선박의 통신

-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제5절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차례의 적십자회담과 3차례의 적십자실무 접촉을 개최하였으며, 2차례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쌍방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5회), 생사·주소확인(2회), 서신교환(1회) 등에 합의·추진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는 북한이 참가하여 아시아의 43개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회원국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대회가 되었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세계에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 제1차~3차 남북적십자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1차 회담은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2차 회담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차 회담은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박기륜(대한적십자사사무 총장)	단장	최승철(북한적십자회중앙 위원회 상무위원)
대표	고경빈(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김장균(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대표	리금철(북한적십자회중앙 위원회 상무위원) 최창훈(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

* 우리측은 제2차 회담시 김장균 대표를 최기성 이산가족대책 본부 실행위원으로, 제3차 회담부터 박기륜 수석대표를 이병응 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별보좌역으로 교체, 북측도 최승철 단장을 김경락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최창훈 대표를 리호림 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으로 교체

금강산에서 진행된 3차례 회담을 통해 쌍방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시범적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

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제4차 적십자회담은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 회담은 역사상 처음으로 쌍방 적십자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의미가 있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서영훈(대한적십자사 총재)	장재언(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표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보) 김경웅(대한적십자사 남북 교류전문위원) 송우섭(대한적십자사 남북 교류전문위원) 민병대(대한적십자사 남북 교류국장)	리금철(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일훈(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학철(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리호림(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서기장)

우리측은 이 회담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과제로서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파 서신교환 확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및 면회소 설치·운영 ▲남북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를 제의하였다.

북측은 ▲면회소 설치문제,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 방문단 정례화를 위한 기본합의서 채택문제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확인 문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문제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자기측의 기본입장을 밝혔으며, 입장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계속 협의하였다.

쌍방은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 및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아울러 상호 쟁점이 되었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 등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고, 사전에 서로 명단을 교환하였던 제5차 이산가족상봉문제도 확정되었다.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문 요지>

- ①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 우선 금강산지역에 설치하고,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 협의·확정
 - 금강산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는 남북이 공동 건설하며 자재·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
 - 금강산 면회소 완공 후 면회 정례화
- ②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 협의
- ③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
- ④ 면회소 설치·운영 등 본회담 합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
- ⑤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여 9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진행

나. 제1~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0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차례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	리금철(조선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위원)
대표	윤미량(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위원) 유광수(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위원)	함동혁(설계실무자) 류성수(건축실무자)

* 북측은 제3차 실무접촉시 함동혁 대표를 황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교체

제1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쌍방 적십자사 책임자들이 합의한 금강산 면회소 설치·운영문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문제를 협의하고 아울러 전쟁 이후의 남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북측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중 금강산면회소 설치에 관련된 방안들을 집중 제시하였다.

우선 면회소 장소와 관련해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논별구역이라는 구체적 위치를 제시하였고, 면회소의 크기는 약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밖에 지질조사 및 설계문제,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노동력 제공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밖에 면회소 건설을 위해 관계자들을 금강산에 상주시키면서 실무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쌍방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상호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측은 합의사항 전반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만 문제를 국한시킴으로써 실무접촉의 성격을 제한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도를 표출하였다.

몇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남과 북은 기본설계 주체문제, 기존 건물을 이용한 면회 실시 문제를 제외한 면회소 건설문제의 전반에 대해 대략적으로 의견이 접근하였다.

그러나 면회소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났다.

우리측은 금강산의 기존시설을 이용한 면회 실시문제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들도 합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몇 차례의 수정안을 제시, 우리측과 타협점을 모색하였으나 구체적 일자 및 해결방안들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남과 북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제2차 실무접촉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제2차 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은 설을 계기로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규모문제에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측은 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회소 규모는 면회를 실시하면서 증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북측은 처음부터 대규모의 종합건물을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쌍방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남과 북은 제2차 실무접촉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사안에 대해 제3차 실무접촉을 열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2003년 음력 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
- 면회소 규모,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는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
- 2003년 1월중 제3차 실무접촉 개최

2003년 1월 20일 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제3차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제1, 2차 실무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던 면회소 규모 문제에 협의를 집중하였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면회소는 1,000명 정도의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충분하며, 구체적인 평수는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에서 설계문제를 논의하면서 협의·확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북측은 면회소를 대규모로 건설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남과 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쟁점사항들을 토의하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제6차 이산가족 상봉실시에 합의하고, 이산가족 및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문제는 차기 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는 등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2000.6.27~30)에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2년여만에 구체적 이행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요지>—

1.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운영

- 금강산면회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함.
- 면회소는 종합센터 형식의 건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되, 연건평 규모는 건설 실무자들이 협의·확정
-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
-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설계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함.
- 면회소 건설은 1년내 완공, 착공식은 4월중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함.
-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 각기 10명 정도씩의 관계자들로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접촉을 2월 10일 금강산에서 진행
- 면회소 운영문제는 면회소 완공 1개월전까지 확정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 제6차 이산가족상봉을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
 - 규모, 절차 등 실무적 문제는 전례를 준용
- 면회소 완공 이전에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

3.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

4.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

3.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가. 제1차 실무접촉

2002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1차 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백기문(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조상남 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대표	박종문(문화관광부 체육국장) 윤강로(대한체육회 사무차장)	리선호(북한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안명국(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대회 준비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 참가종목과 선수단 규모를 확정해 줄 것 ▲성화는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동시에 채화, 판문점에서 합화하고 생중계를 실시하며 ▲개·폐막식에는 개별입장을 하기로 하고 북측 선수단 경비지원은 긍정적으로 고려하되 기타 참가단 경비는 북측이 부담한다는 내용 등의 우리측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개·폐막식 입장은 시드니 올림픽과 같이 남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하고 ▲성화는 북측이 백두산에서 채화하여 금강산 현대아산측을 통해 남측에 전달하며 ▲선수단 및 응원단의 왕래·체류에 따르는 경비는 남측이 보장해야 한다는 북측의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의 쟁점사항은 ▲개·폐막식 공동입장문제 ▲백두산 성화 채화·봉송문제 ▲응원단 비용지원 문제였는바, 북측은 남북공동입장은 6.15공동선언 취지에도 부합되는 문제임으로 양보가 불가하고, 성화채화도 촉박한 일정을 감안, 북측에서 채화하여 남측에 전달하며, 응원단 비용은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남측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대회가 외국이 아닌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개별입장이 바람직하며, 성화는 조직위 관계자 참관하에 우리측 방송진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채화하고 금강산에서 조직위 관계자에게 인계하며, 응원단 경비지원은 최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조정하자고 대응하였다

남북은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전날의 쟁점사항인 3개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재차 실시하였으나 북측이 본질문제라고 주장하는 개·폐막식 공동입장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제1차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나. 제2차 실무접촉

제2차 실무접촉은 2002년 8월 26일부터 28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남북한은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북측은 공동입장 및 단일기 사용을 재차 강조하였다. 백두산 성화 채화와 관련, 남측의 방송진이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채화된 성화 전달도 금강산을 통해 조직위 관계자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선수단 및 응원단 공동입장과 관련, 남북선수단은 단일복장으로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와 각각의 국기·국호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측은 시드니 올림픽 입장 방식을 고집하고, 응원단 공동입장도 남측이 주최국으로서 OCA와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 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접촉을 통해 쌍방 의견을 조율한 후 전체회의를 개최,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서 제2차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합의서 요지>**

- 북측 선수단, 북측 항공기로 이동, 305명 규모의 선수단 파견
- 남북선수단, 개·폐회식 행사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 선수단 표지판은 「코리아」, 영어로는 KOREA, 복장은 시드니 올림픽 전례를 따름
- 남북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 시상식 시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연주
- 북측은 취주악대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355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고, 응원단은 <만경봉-92호>를 타고 원산에서 부산으로 이동, 배에서 숙식하며 경기응원 참가
- 북측은 9.5일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 9.6일 금강산에서 조직위 관계자에게 성화 인계. 또한 10여명의 남측인원이 채화과정 녹화 및 참관이 가능토록 적극 편의제공
- 북측 선수단 체류경비 남측이 부담, 응원단 체류경비는 방문자측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남측이 최대한 편의보장
- 북측의 국기 게양문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과 국제관례에 따름
- 이후 구체적 실무절차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제1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 개 관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3. 개성공단 개발사업
4.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5.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및 임남댐 공동조사
6.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7. 대북 식량차관 제공

제2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 교역
2. 위탁가공교역

제3절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1. 개관
2.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3.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4. 다양한 남북공동행사 개최

제4절 남북한 인적 교류

1. 남북한 왕래
2. 북한주민접촉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영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제3장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왔다. 그 동안 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으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여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경협 활성화 조치 등 교류협력을 근간으로 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게 됨으로써 활성화 차원을 넘어 안정 구축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교류협력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있어 국회에 사전보고를 충실히 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에도 역점을 두어 왔다.

2002년에는 서해교전 등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우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대북 식량차관 제공 등 당국과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경제협력이 추진되었다. 사회문화교류 또한 북한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평양 현지 생방송 실시 등 다각적인 성과가 있었다. 한편, 4개 경협합의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교류협력 추진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제1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 개 관

가. 경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19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52건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과 25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18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있었다. 2002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IMRI 등 2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1) 제조업분야

2000년 이후 일부 제조업분야에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제품 생산 및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녹십자는 2001년 7월 유로키나제 반제품을 최초로 반입한 이래 2002년에는 11차례에 걸쳐 약 17만불 가량의 제품을 반입하였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2년 4월 남포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준공하고 「회파람」 자동차 129대를 생산하였으며 자동차 전시장, 주유소 및 광고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물값 조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태창의 금강산생물개발사업은 2002년 9월 북한과 재개에 합의하여 앞으로 육로운송을 통한 사업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2) 정보기술(IT) 분야

2000년 3월에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삼성전자의 5개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어, 2002년 8월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통해 13개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추가하여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하나비즈닷컴, 엔트랙 등의 업체가 북한과 IT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도 IT분야에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농·어업분야

농·어업분야 경제협력사업은 인적·물적 교류의 유발효과가 크고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바람직한 협력형태이나, 북측의 농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민간차원의 협력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옥수수재단」은 옥수수신품종 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2002년말까지 27차례나 방북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임가공사업에 이어 인삼 및 잎담배 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면서 1회용 주사기공장 건립 지원 등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지역 영농사업은 2000년 2월 첫 농산물을 출하한 이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품질도 좋아지고 있으나, 금강산관광객의 감소로 잉여생산물의 판로개척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000년 12월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어업분야에서 협력을 제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의 단순교역과 달리 협력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승인취소된 기업▷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우 (합영)	삼천리 총회사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남포	512만불	'92.10.5 ('95. 5.17)
고합물산 (합영,합작)	광명성 총회사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남포,나진, 선봉,평양	686만불	'95. 5.17
한일합섬 (합영,합작)	조선은하 무역총회사	웨타, 봉제, 방직 등 4개 사업	”	980만불	'95. 6.26
국제상사 (합영,합작)	”	신발	”	350만불	'95. 6.26
▲ 녹십자 (합작)	광명성 총회사	의약품(유로키나제) 제조	평양 통일구역	311만불	'95.9.15 ('97.11.14)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추 진위원회	시멘트 싸이로 건설	나진,선봉	300만불	'95. 9.15
동룡해운 (단독투자)	해양무역회사	하역설비(크레인 등)	”	500만불	'95. 9.15
삼성전자 (합작)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통신센타	”	700만불	'96. 4.27
▲ 태 창 (합영)	릉라888무역총 회사	금강산 샘플 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불	'96.4.27 ('97.5.22)
대우전자 (합영)	삼천리총회사	TV 등 가전제품 생산	남포	640만불	'96. 4.27
▲한국전력 공사	원자력총국	경수로건설지원사업	신포	4,500만불→ 11,430.8만불	'96. 7.15 ('97.8.16→ '99.8.10변경)
▲ 미흥식품 (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	청진,함흥, 원산,남포	47만불	'97. 5.22 ('98. 3.13)
* 신일피혁		피혁, 의류봉제	나진,선봉	300만불	'97. 5.22
한 화 (합작)	청운산 무역회사	PVC장판 제조	평양,남포	90만불	'97. 5.22
LG전자 /LG상사 (합영)	광명성 총회사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평양	450만불	'97. 5.22 '97.10.14 (변경승인)
▲ K T	체신성	경수로 건설 통신 지원사업	신포	14만불	'97. 8. 1 ('97.8.1→ '01.2.5, '02.5.28변경)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삼성전자 (합영)	조선체신회사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 설비생산	나진,선봉	500만불	'97. 8. 1
코오롱상사 (합작)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	평양,남포	400만불	'97. 8. 1
신 원 (합작)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의류·봉제사업	평양	100만불	'97. 8. 1
파라우수산 (합영)	조선은파산 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해주	300만불	'97. 8. 1
금오식품 (합작)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 8. 1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나진·선봉지대 시범공 단 조성	나진,선봉 (유현지구)	.	'97.10.14
대상물류 (단독투자)	”	나진·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운영	나진,선봉 (동명지구)	420만불	'97.10.14
삼천리자전거 /LG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자전거 조립·생산	나진, 선봉	800만불	'97.10.14
▲태영수산/ LG상사 (합영)	”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65만불	'97.10.14 (’98. 8.28)
▲한국의환 은행	경수로사업 대 상국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금호	.	'97. 11.6 (’97.11.6)
▲(주)아자커 뮤니케이션 (합영)	금강산국제관 광총회사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평양, 기타 지역	편당 25만불	'97.11.14 (’98. 2.18)
(주)에이스 침대(합작)	청류무역회사	침대 및 가구 제조 ·판매	평양 락랑 구역	425만불	'98. 1. 9
롯데제과 (합영)	광명성총회사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	평양	575만불	'98. 1. 9
(주)광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옥외광고(아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간판, 내 부벽면 부착광고 등)	평양, 나진, 선봉	250만불	'98. 2. 18
안 흥 개 발 (합작)	조선56무역 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 3.13
▲두레마을영 농조합법인 (합작)	라선경제 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선봉	200만불	'98. 4. 8 (’98. 7.27)
▲ 국제 옥수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 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 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발 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 6.18 (’98.6.18→ '01.6.20변경)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지승인일 (사업승인일)
*주세원커뮤니케이션		북한올림픽위원회스포츠서첩대행		미정	'98. 8. 6
▲(주)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98.9.7) →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99.1.15)	금강산	9,583만불 →1억33만불('99.1.15) →1억8,739만불('01.1.20) →20,532.9만불('03.1.10)	'98. 8. 6 ('98.9.7→ '99.1.15변경 '99.4.16변경 '01.1.20변경 '01.6.23변경 '03.1.10 변경)
▲(주)코리아랜드(합영)	묘향경제연합체	북한부동산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	평양	60만불	'98. 8.28 ('98. 8.28)
*성화국제그룹		원정국제자유시장 건설·운영 및 평양지역내 백화점운영	나진, 선봉, 평양	190만불	'98. 9.14
*아이엠시스템		방송용 광고제작			'98. 10.17
▲백산실업(합영)	선봉군 은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현대시스코, KT, 온세통신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금강산 관 광지역 및 평양	13만불	'98.11.11 ('98.11.11→ '00.11.20 변경 '01.10.4 변경 '02.5.28변경)
(주)해주(합작)	광명성총회사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 1. 8
▲(주)평화자동차(합영)	조선련봉총회사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남포	5,536만불	'99. 8. 31 ('00. 1. 7 →'00.10.21변경 '02.2.20변경)
▲한국전력공사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TKC)	금호지구	40.8억불 (PWC금액 포함)	('99.12.15)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북경	72.7만불 →154.4만불 →226.7만불	'00. 3.13 ('00. 3.13→'01. 6.16 변경 '02.8.21변경)
▲(주)하나비닷컴(합영)	평양정보센터	남북 프로그램 공동 개발	단동	200만불	'01. 4.28 ('01. 7.18)
▲(주)엔트랙(합영)	광명성총회사	정보기술·공동제품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고려정보기술센터」 건립	평양	400만불	'01. 4.30 ('01.8.22)
▲(주)G-한신	광명성총회사	북한내 유리제품 생산시설 설립운영	평양	290만불	'01. 7.18 ('01.10.16)
▲(주)아이엠알아이	삼천리총회사	발포성수지 생산공장 설립	평양	70만 불	'01.10.16 ('02.8.7)
▲국양해운	개선무역총회사	해상운송사업 및 하역시설개선사업	남포	61.9억 원	'01.11.21 ('01.11.21)
▲(주)훈넷	범태, 조선장생무역총회사	인터넷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	평양	20만불	'01.12.29 ('01.12.2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핵안전감독위원회	경수로 건설 관련 핵안전 규제사업	-	-	'02. 3. 7 ('02. 3. 7)
(주)서전어패럴	광명성총회사, 조선봉화총회사	피복제조	남포	41.2만불	'02. 5.13
한국토지공사, (주)현대아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경련, 삼천리총회사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	개성	18,500만불	'02.12.27

나. 해운 · 항공 · 통신 협력

2002년 12월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간 교역물자 수송을 위해 인천-남포간 · 부산-나진간, 금강산 관광을 위해 속초-장전간, 경수로 인력 수송을 위해 속초-양화간 등 4개 항로의 정기선이 운항중에 있다.

2002년 남북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1,827회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는 798회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는 1,029회로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다. 우리 국적선의 운항횟수는 278회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2002년 남북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1,092,101톤으로 전년대비 70.2%가 증가하였다.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남→북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798	3,811
북→남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1,029	5,174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8,985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남북 직항로를 최초로 운항한 이후 2000년 43회, 2001년 19회가 운행되었으며, 2002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로 크게 증가하여 남→북 33회, 북→남 34회, 총 67회가 운행되었다. 특히 경수로사업을 위해 양양-선덕간 항공로가 개설되어 2차례 운행되기도 했다.

<남북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2000	2001	2002	계
남→북	20	8	33	61
북→남	23	11	34	68
계	43	19	67	129

남북간 통신망 연결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

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만에 전화연결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남북 상황실간에 2회선의 직통전화 가설되었고,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통신합의서가 체결되었다.

2002년 12월말 현재 남북한간에 직접 연결된 전화는 31회선이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27회선이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된다. 제3국을 경유한 간접연결전화는 경수로사업용 16회선, 금강산 관광용 8회선 및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용 3회선이다. 한편, 북한의 신포 경수로부지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 현황>

(2002.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1971. 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19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1972. 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1984.12.21
관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1971. 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1992. 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관문점경유)	2	1997.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1998. 2.17
남북군당국간 직통전화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2. 9.24
합	계	31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 현황>

(2002.12.31 현재)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8	1997. 8. 4
		2	2000. 7.26
		6	2001. 5.23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온정~장전	6	1998.11.17
		2	1999. 5.18
평양실내종합체육관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온정~장전	3	2000.11.21
합	계	27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분단된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중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구축될 경우 한국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정부는 우선 2000년 8월 8일,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남북철도연결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철도·도로연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마쳤다. 이어 2000년 9월 18일 우리측 지역 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 철도·도로의 비무장지대 공사를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개최기로 하였다. 이어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비무장지대 공사와 관련한 군사보장합의서’를 교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1년 2월 11일 북측은 ‘행정상의 이유로 이 합의서의 서명·교환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내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측은 비무장지대 이외 지역의 공사를 진척시켜, 2001년 12월말 경의선 철도는 문산역에서 도라산역까지 10.2km, 도로는 통일대교 북단에서 비무장지대 앞까지 3.3km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2002년 2월 12일, 정부는 설날을 맞이하여 실향민의 망배행사를 도라산역에서 가졌으며, 2월 20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시 한·미 정상은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남북간 평화정착과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의지를 전세계에 표명하였다.

2002년 4월 11일부터 일반인과 외국인에게 도라산역까지 열차를 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현재 1일 평균 200여명이 도라산역을 찾고 있다. 지난 1950년 경의선 운행이 중단된 이후 52년만에 재개된 임진강역과 도라산역 사이의 기차 운행은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

한편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으로 인하여 남북간 연결공사가 늦어지던 단계에서 우리측 제의에 따라 대통령 특사가 방북(2002.4.3~4.6)함으로써 남북간에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사는 방북 기간중 남북이 동부지역에서 새롭게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서부지역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연결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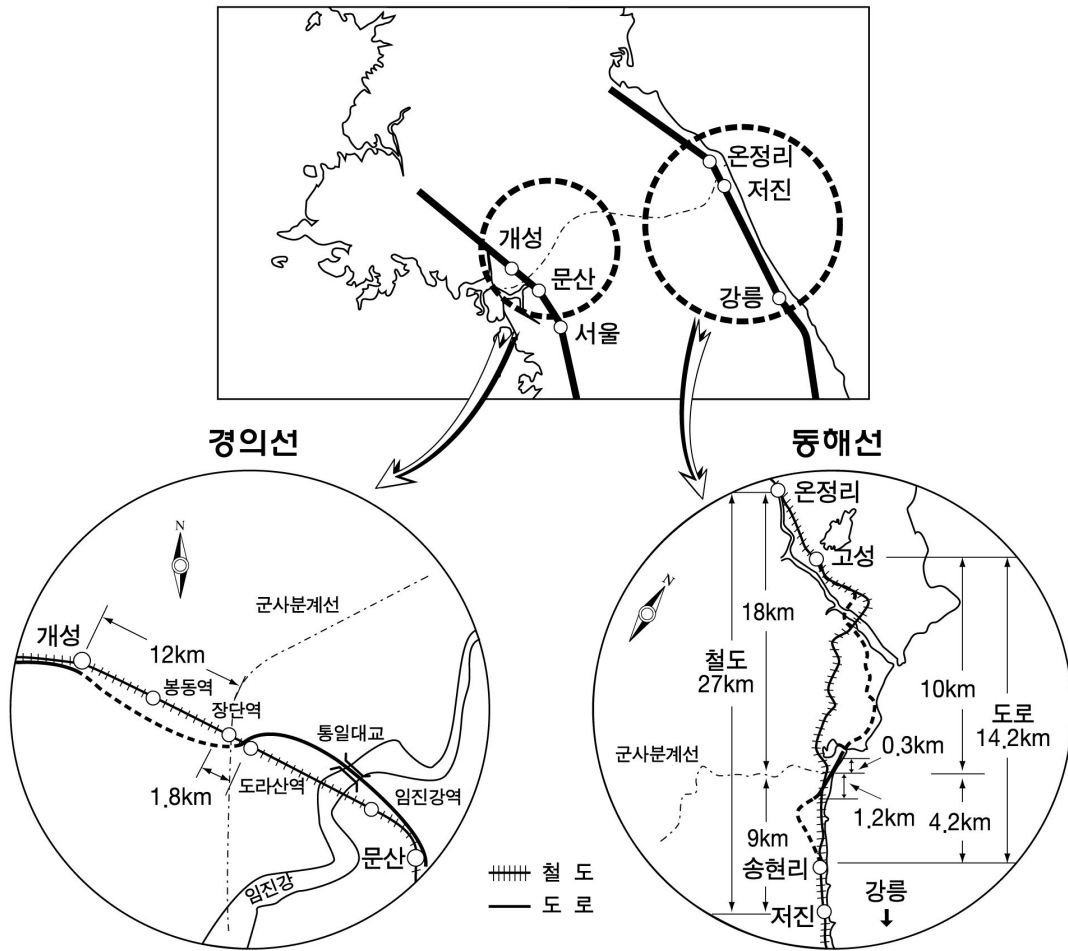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8.27-8.30, 서울)에서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착공식 개최 일자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시기에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철도·도로의 구체적 연결 시기는 다음과 같았다. 경의선 철도는 2002년 말, 도로는 2003년 봄, 동해선 철도의 저진-온정리 구간과 도로의 송현리-고성 구간은 2003년 9월, 금강산육로관광 등을 위한 동해선 임시도로는 2002년 11월말이다.

2002년 9월 18일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경의선 비무장지대 통과지점인 도라산역 부근 남방한계선 제2통문 앞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실향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고, 동해선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 실향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각각 착공식 행사를 하였다.

북측은 경의선 개성 남쪽 봉동역에서 조창덕 내각 부총리 등 2,500여명이 참석하고, 동해선 고성군 금강산청년역에서 홍성남 내각 총리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 착공식 행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 착공식 행사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선언적 단계」에서 「실천적 단계」로 변모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의 장벽이 제거된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



※ 경의선 공사 구간

- ▶ 철도 : 13.8km(도라산역 - 장단역 : 1.8km, 장단역 - 개성 : 12km)
- ▶ 도로 : 13.8km(도라산역 - 군사분계선 : 1.8km, 군사분계선 - 개성 : 12km)

※ 동해선 공사 구간

- ▶ 철도 : 27km(저진 - 군사분계선 : 9km, 군사분계선 - 온정리 : 18km)
- * 저진 - 강릉 구간 118km(7년 내외 소요)
- ▶ 도로 : 14.2km(송현리 - 군사분계선 : 4.2km, 군사분계선 - 고성 : 10km)

※ 동해선 임시도로 : 1.5km(군사분계선 이남 : 1.2km, 군사분계선 이북 : 0.3km)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요>

노선	종류	규모	구 간	거리 (km)
경의선	철도	단선	개성역(북)-도라산역(남)	17.1
	도로	4차선	개성공단터(북)-도라산역(남)	8.8
동해선	철도	단선	온정리(북)-저진(남)	27.5
	도로	2차선	고성(북)-송현리(남)	14.2
	임시도로	1차선	고성-군사분계선	1.5

한편, 2002년에 들어 수 차례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그 동안 서명·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군사보장합의서에 대해 다시 논의하였고, 마침내 2002년 9월 17일 이를 서명·교환함으로써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었다.

41개 조항의 군사보장합의서는 비무장지대에 철도 노반을 중심으로 폭 250m(경의선), 100m(동해선)의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지뢰제거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12월 3일 동해선 비무장지대와 12월 6일 경의선 비무장지대의 남북 연결구간에서 지뢰제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군사보장합의서 발효와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라는 측면 뿐 만 아니라 '남북간에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다.

이어 개최된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2002. 9.13-17, 금강산)에서는 연결도로의 구조, 공동측량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요지》

1. 자재·장비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2. 남측은 육로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수송하며, 해로의 경우 북측의 원산항과 해주항 등으로 한다.
3. 자재·장비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의 자재 실구매 금액 및 장비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차관금액과 임대기간은 쌍방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4. 자재·장비의 인도·인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자재·장비인도회사를, 북측은 자재·장비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5. 북측은 자재·장비 제공을 위해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이들 인원 및 선박·차량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0.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을 허용한다.

우리측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에 따라 북측 연결구간 철도·도로 공사를 위한 자재·장비인 굴착기, 트럭, 시멘트 등을 10월 19일 설봉호를 통해 처음으로 북측 장전항으로 전달하였고, 2002년 12월말 현재 동·서해로 각각 11항차의 자재·장비를 전달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2차 실무접촉(2002.11.18~20)에서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접속지점 및 계획고 등에 합의하였다. 이어 접속지점 및 계획고의 확정을 위한 공동측량을 11월 26일 동해선에서, 11월 29일 경의선에서 각각 진행하였다.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 측량전문가 20명이 함께 공동측량을 통해 정한 접속지점은 앞으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정부는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2, 3차 실무접촉을 통하여 철도·도로가 연결된 후 열차·차량이 원활히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남북간 열차 및 차량운행합의서를

북측과 협의하였다. 차량운행합의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였으며, 열차운행합의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다. 차량운행합의서는 남북간에 개통되는 도로를 이용해 운행하는 차량의 남북왕래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3년 대통령 특사방북(1.27~29)에서는 경의선 철도연결 공사를 2월중 완료하기로 합의하여 남북간 철도연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요지》

□ 기본 원칙

- 쌍방은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의 신변안전 및 편의보장
-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쌍방은 상대측 운전사와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

□ 차량의 운행절차 및 방법

- 상대측 지역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 운행하여야 함.
-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법규,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동위원회에서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함.
- 쌍방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음. 취소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운전사와 차량을 돌려 보냄.
-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정지이유가 소멸된 경우 운행재개 허용

□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 쌍방은 사고 발생시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 보장
- 차량사고의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고,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함.
- 합의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조사결과는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함.

철도·도로를 이용한 인적·물적 왕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활한 세관(C)·출입심사(I)·검역(Q)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 실무자로 경의선 출입관리시설(CIQ) 실무지원팀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계획마련과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남북간을 왕래하는 인원, 물자의 출입, 세관, 검역에 대비하여 본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CIQ시설을 통일전망대 부근에 설치하였다. 경의선은 도라산역사 내에서 CIQ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2002년말 현재 보완 공사중에 있다.

한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은 지난 50여년간 인적왕래가 없었던 지역으로서 정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및 생태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생태계보전공동조사단’을 발족하였다. 이 조사단은 지형·지질·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 동·식물 생태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간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이었던 물류비를 크게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계를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축으로 부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철도망이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로의 연계수송도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북한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 내지 2억 달러의 통과운임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연구기관 등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hub)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동해선은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값싸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 일본 등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돼 유럽연합(EU) 같은 거대한 경제권 구축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성공단 개발사업

우리기업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 북한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그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북한 개성직할시의 개성시와 판문군 평화리 일대 약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우선 1단계 100만평 규모의 시범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개성공단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크게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 기대효과>

구 분 (건설기간)	면 적 (만평)	유치 업종	업체수	고용인원	연간수출 (백만불)	연간북측이득 (백만불)
제1단계 (착수후3년)	100	노동집약형	250	2.3만명	2,416	49
제2단계 (착수후 5년)	200	경공업, 중화학	450	2.4만명	3,372	59
제3단계 (착수후 8년)	500	첨단산업	900	5.3만명	9,631	149
합 계	800		1,600	9.9만명	15,419	257

* 출처 : 국토연구원 용역결과(공단 활성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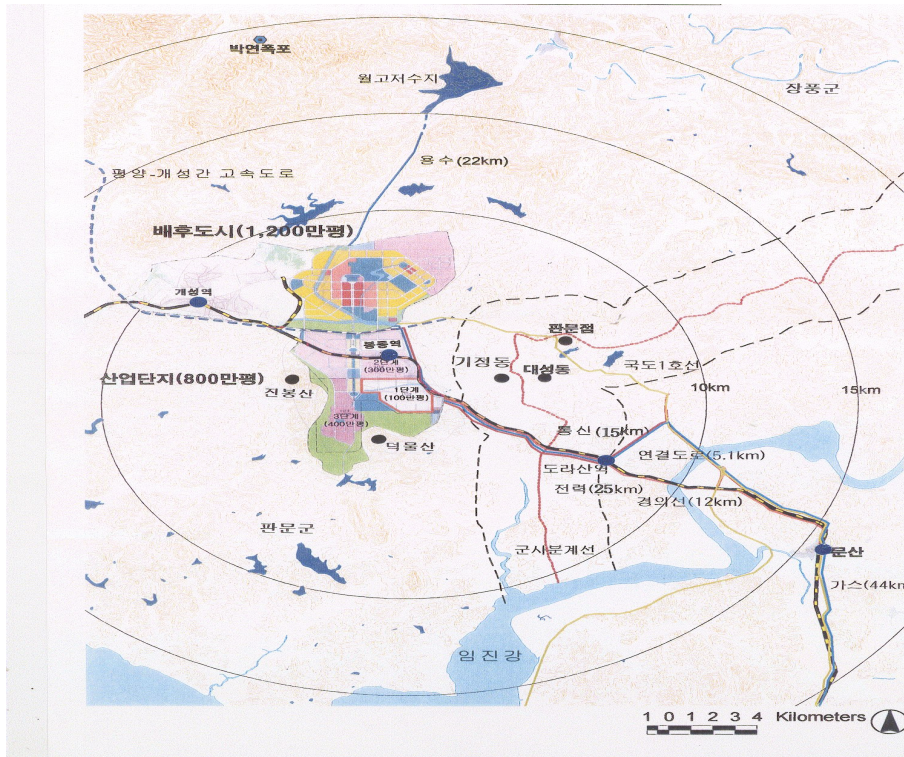
개성공단 개발은 1999년 10월 1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의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비롯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현대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의향서 수준의 합의를 채택하였다.

현대는 2000년 8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9일에는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합의하였으며, 현대-아태간에 관련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11월에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협약을 맺어 공단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키로 합의하는 한편, 개성공단 예정지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2000년 12월 2일에는 개성공단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경제지대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2001년 1월 금강산지역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개성공단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개성공단개발 구역도>



한편, 2001년 9월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전반적인 남북관계 소강국면과 맞물려 정체기를 맞았다.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대통령 특사 방북시 개성공단 건설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2002년 8월 말에 개최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는 개성공단 건설이 연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10월 하순에 개최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과 11월 초순에 개최된 제3차 경추위에서는 연내 착공을 재확인하는 한편 실무적 사항 논의를 위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 개최에 합의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과 경추위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된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는 1단계 100만평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실무접촉에서는 12월 26일~30일 사이에 착공식을 거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 통관·통신·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하여 착공을 위한 제도적 보장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요지

-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간주,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내용 비밀 보장
- 북측은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며, 세부절차는 남과 북이 협의하여 확정
- 우편 및 전기통신에 대한 상대방의 관련법 및 국제협약·국제관행을 존중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상호 제공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요지

-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세관을 공업지구내에 설치
- 차량을 지정된 기관(남측:세관, 북측: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
- 반출입시 사전에 공업지구 세관에 신고서류를 제출, 출입관세 및 수수료 면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요지

- 검역대상 물자·검역기준 및 검역방법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양측 당국이 협의하여 확정
- 북측은 검역소를 공업지구내에 설치
-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에 협조 가능
- 검역대상물자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지구검역소에 검역대상물자를 입고시키고 검역신청

남북당국간 협의의 진전에 따라 사업자간 논의도 재개되었다.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리고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방북하여 북측이 제정하기로 한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현대·한국토지공사 및 아태·민경련간 4자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들은 12월 21일 재차 방북하여 착공식 및 하위규정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개성공단 개발사업 실현이 가시화 되어가자 우리측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2000년 11월 체결한 협약서를 변경하여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기존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하였다. 아울러 2002년 12월 27일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북측 역시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간 합의 및 협조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2002년 11월 27일 우리측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였다. 총 5장 46조와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관리, 기업 창설·운영,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자 추천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구성하고 이 기관이 공단관리운영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당국과 사업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공단 개발·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내에 기업설립 등 경제활동 자유 보장, 투자자 재산 및 상속권 보호, 토지 임대·양도 허용 등을 규정하여 개성공단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통 및 착공식 관련 편의제공 등에도 성의를 나타냄으로써 2002년 12월 30일 착공식에 합의하였고 양측 사업자들이 착공식 준비에 들어갔으나 군사분계선 통과에 관한 군사보장합의서가 체결되지 못하여 12월 30일 착공식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적 보장문제 타결(2003.1.27)에 따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착공식 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사업자간 하위규정 협의 및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동안 남북관계 상황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신뢰형성에 기여해 왔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미지를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와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해 온 바가 크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0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금강산관광사업에관한계약서」를 체결하고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를 첫 출항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1999년과 2000년에 「봉래」·「풍악」·「설봉」호가 추가투입되어, 2000년에는 월평균 15,000여명 이상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단조로운 관광일정,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관광객이 월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설봉호」 1척만 운항하게 되었다.

현대그룹의 어려움 등과 함께 금강산관광이 침체에 빠지면서, 현대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매월 1,200만불씩 지급하던 관광대가를 관광활성화시까지 관광객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로 관광 실시와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관광활성화 조치에 합의하였다.(2001.6.8)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2001. 6.20)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아 현대가 건설한 금강산내 시설물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육로관광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금강산관광 제1차 당국회담이 개최되는 등 당국간 그리고 사업자간 관광활성화조

치 이행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2년 1월에는 관광객이 1천명 수준으로 줄어, 더 이상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조치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 온 측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통해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이를 남북화해협력 증진, 분단고통 완화, 통일교육효과 제고 등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2002년 1월 23일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월 31일에는 관광공사에 대출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2월 20일에는 금강산지역에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를 허용하였다.

또한 3월 28일에는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통일부고시)을 제정하여 학생·교사·이산가족·국가유공자·장애인·통일교육강사 등의 금강산 관광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지원조치가 실시된 이래, 2002년 4월부터 학생·교사 등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사업자는 학생 등의 단체관광객이 늘어나는데 맞춰, 「금강빌리지」·「온천빌리지」 등 단체용 숙소를 확충하고 관광선 운항횟수를 늘렸으며 여름철에는 야영장과 해수욕장을 개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46.4%가 증가한 총 84,727명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등 관광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나. 관광특구 지정·육로관광 추진

관광특구 지정·육로관광 실시 등 관광활성화 조치 이행을 위해 당국간, 사업자간 협의가 계속되었다. 2002년 9월에는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이 개최되어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실시시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역할에 대한

입장차이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정부와 사업자가 북측의 관광활성화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가운데, 2002년 11월 13일에는 북측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정령 제3,413호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11월 25일 방송을 통해 법 제정 사실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 강원도 고성·해금강·삼일포·통천 일대를 금강산 관광지구로 지정하고 지구의 운영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간소한 출입 절차 및 투자·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금강산관광지구 법에 따라 금강산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현대아산은 금강산지역에서 50년간 토지이용권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 상반기 중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002년 12월 11일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현대는 북측 아태와 2002년 12월 중 육로관광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곧이어 시범 육로관광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해선 임시도로의 비무장지대 통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군사당국간 협의에 시간이 사전답사와 시범 육로관광은 2003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003년 1월 27일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동·서해 지구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2003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답사가 이루어졌다. 사전답사는 남북출입관리연락사무소(CIQ)운영, 비무장지대 출입절차, 소요시간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 아산·한국관광공사·정부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이어 시범적인 육로관광이 2003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계인사 400여명이 참가하여 실시됨으로써 육로관광의 물꼬를 텃다. 금강산 임시도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판문점 이외의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최초의 남북간 도로라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특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육로를 이용한 금강-설악권 연계관광이 실시되면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관광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정부는 사업자의 개발계획이 금강산의 환경보전 및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강산관광지구법 요지〉

- 지구성격 : 북한 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국제적인 관광 지역
- 지역 : 고성군 고성읍·온정리·성북리·삼일포·해금강 통천군 일부
- 적용범위 : 남한·해외동포·외국인의 관광, 관광업, 기타 경제활동
- 운영체제
 - 「중앙관광지도기관」 : 북한 독립행정기관, 구성 등은 미정
 - 관광지구관리기관 및 개발사업 지도, 관광지구법규 시행세칙 작성 등
 - 「관광지구관리기관」 : 개발사업자, 중앙관광지도기관 추천인사로 구성
 - 관광계획 작성·관광운영, 투자유치 및 기업창설 승인·등록·영업허가, 남한 출입인원·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등
- 개발업자의 권한
 - 개발업자는 토지이용증을 받고, 일정기간 관광지구 개발 및 관광사업 (북한 국토 환경보호성이 현대에 2052.11.13까지의 토지이용증 발급)
 - 개발업자의 개발·영업활동 세금면제, 사업권의 양도·임대 허용
 -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개발 총계획」 수립, 중앙지도기관은 1월내 심의
- 관광객 출입절차·준수사항
 - 남한관광객·수송수단은 관광지구관리기관 출입증명서로 사증없이 출입
 - 금강산관광지구내 단독 또는 단체로 자동차·도보 등의 자율통행 보장
 - 관광객 휴대금지 품목, 준수사항 규정(기존의 관광세칙과 유사)
- 투자자의 권리·기타
 - 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허용 및 투자재산 보호
 - 관광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투자허용, 환경훼손 산업 투자금지 등
 -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 관광 가능
 - 전환성 외화 허용 및 외화의 반출입 보장
 - 분쟁발생시 협의해결 원칙,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 및 재판절차 해결

5.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및 임남댐 공동조사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유하천은 임진강과 북한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인 임진강 유역은 최근 수년간 홍수로 인해 남북 모두 많은 피해가 발생해 왔으나, 이에 대한 방지노력은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임진강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임진강 유역 남측 피해발생 현황>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재산피해(억원)	2,023	3,882	260	276
인명피해 (명)	139	13	1	3

* 출처 : 건설교통부(북한은 통계자료 미발표)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이 협력하여 수해방지를 추진해 나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1999년 8월 11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남북은 2000년 8월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처음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추진에 합의하였고, 김용순 특사 방문시(2000.9.11~14)에는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0년 12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논의를하기로 함에 따라, 2001년 2월 평양에서 제1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공동조사단 구성 및 대상, 방법 등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이후 남북관계 전반의 소강상태에 따라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였으

나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북측의 임진강 상류 기상수문 등에 관한 자료 통보 및 우리측의 임진강 상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 제공, 11월 임진강 유역 현지조사 착수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평양에서 제2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임진강 유역과 한강하류에 대한 현지조사, 기상수문자료 통보, 홍수예보시설 설치 문제 등 대부분의 사항에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묘목제공과 관련하여 다소 이견이 있어 향후 개최될 제3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차기 실무협의회가 개최되는 대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남북 수자원 협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또 하나의 남북공유하천인 북한강 유역에 북한이 1986년부터 건설중인 임남댐(일명 금강산댐)에 대해 2002년 4월 이후 국내외로부터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북한은 2002년 5월 31일 임남댐 수위조절의사를 사전통보하고 6월 3일부터 6월26일간에 걸쳐 약 3억톤의 물을 방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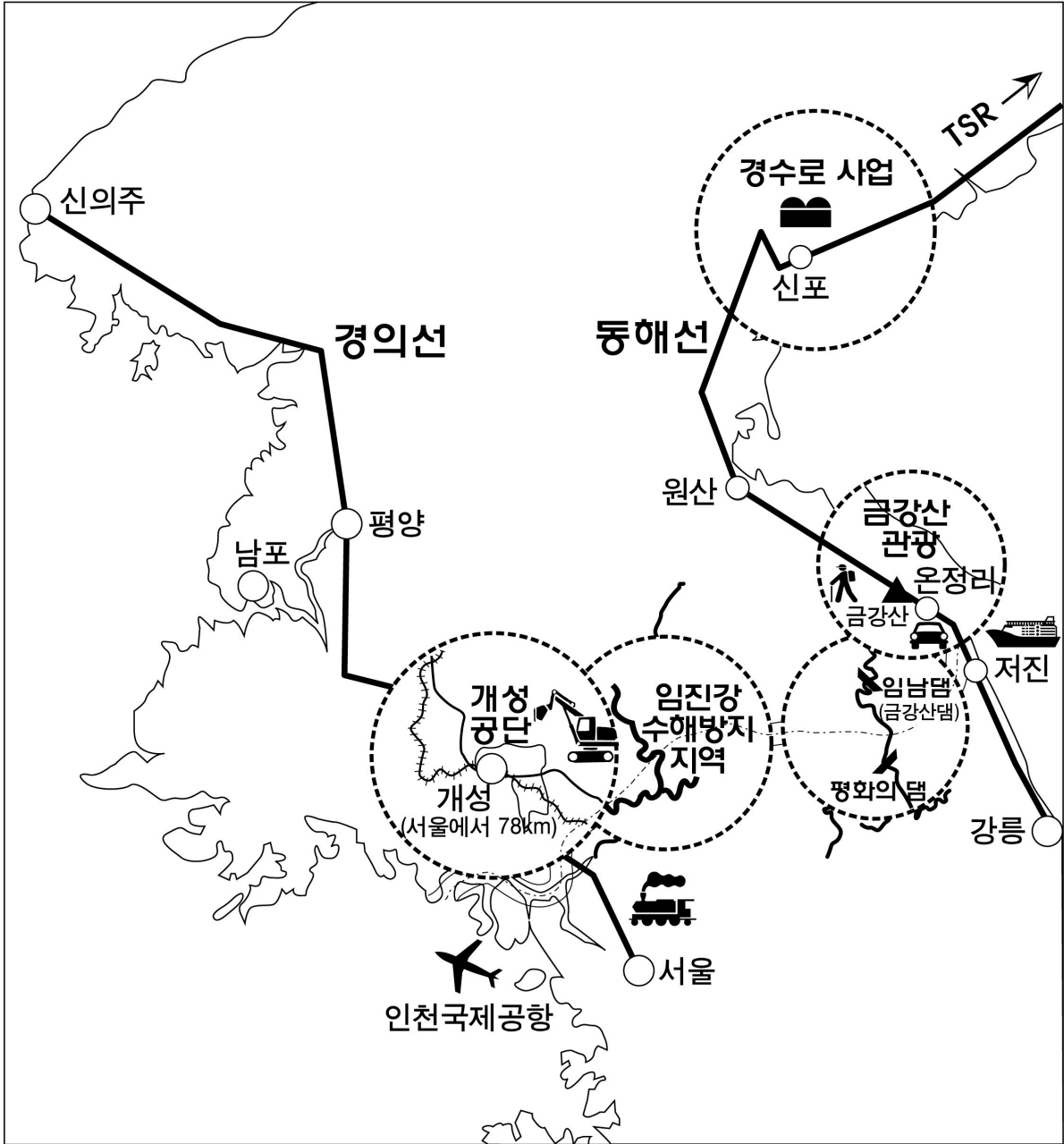
정부는 2002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임남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조사 등의 협의를 촉구하였고,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은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 금강산에서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임남댐 공동조사의 필요성과 원칙에 공감하였으나 북측이 공동조사 실시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하여 추후 계속 협의키로 하였다.

정부는 북측 임남댐 안전과 관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항구적인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002년 7월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2002년 9월부터 착수한 ‘평화의 댐’ 증축공사는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및 임남댐 공동조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남북공유하천의 공동이용 등 수자원협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남북협력사업 지역



 부분은 바탕지도보다 150% 확대된 것입니다.

6.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8.30) 합의에 따라 북한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시찰단 18명이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8박 9일 동안 전국 18개 지역 38개 산업시설, 관광지, 유통시설, 연구소 등을 돌아보았다.

시찰단은 내각 5명, 당 3명, 경제계 3명, 학계 2명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과 경제관련 고위간부들로 구성되어 시찰결과를 향후 경제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 경제시찰단 구성 >

성명	직책	성명	직책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철호	김일성대 컴퓨터과학대 부학장
김히택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고창립	수도건설위원회 기술국장
박봉주	화학공업상	림명옥	농업성 건설국장
송호경	조선 아태 부위원장	원동연	조선 아태 실장
박규홍	락원무역총회사 총사장	김세완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문경덕	조선대양회사 총사장	리 현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광린	국가계획위원회 책임참사	리성철	체신성 부원
박순철	조선보험그룹 부총사장	김일연	내나라 비디오 촬영가

방문기간중 북측 시찰단은 방문대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숙지해 온 듯 각 시찰지별로 필요로 하는 수집대상 자료를 사전 체크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시찰지마다 브리핑 내용을 상세히 메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우리 경제 실상과 발전 경험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시찰성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남북경협 확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경제시찰단의 방문은 지난 1992년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방문이후 2번째 방문으로 북한 최고위층의 특별한 관심 속에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시찰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책임있는 북한

고위 관료들이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우리 경제 각 분야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경제시찰단은 남한 방문에 이어 11월3일부터 11월14일까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산업시설 시찰 및 경제장관 면담 등을 통해 경험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11월17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남과 북은 2002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시찰단 교류확대를 위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방문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주요 시찰내용 >

구 분	지 역
산업시설(17)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남해화학, 고리원자력발전소, 삼성전자, LG전자, 이레전자, 소니전자, 엠코테크놀로지, 롯데제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태광실업, 범상공(섬유), 마니커(육계가공)
교통·유통 시설(7)	고속철도, 부산컨테이너항, 교통정보센터, 서울지하철, 코엑스, 현대백화점, 두산타워
연구시설(5)	대덕연구단지(생명공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SK텔레콤연구소, 포항공대
관광지(9)	창덕궁, 경복궁, 남산타워, 롯데월드, 에버랜드, 보문단지, 한림공원, 중문단지, 서귀포월드컵경기장

7. 대북 식량차관 제공

정부는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준다는 인도적 측면을 감안하여 2000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차관방식으로 식량을 제공하였다.

차관형식의 식량제공은 상거래적 의미를 띠고 있어, 남북간 경제적 거래관계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서 남북간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식량차관 제공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협력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000년 식량차관 제공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북측이 식량차관 제공을 요청해 온 이래,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차관제공합의서를 체결(2000.9.26)함으로써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을 제공하였다. 식량차관 제공이 비록 유상이지만 분배투명성 보장을 위해 식량포대에 「Republic of Korea」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제2차 경협실무접촉(2000.11, 평양)에서 우리측 대표는 북측으로부터 제공식량 분배내역을 접수하고, 평양 인근 모란봉구역을 방문, 분배과정을 확인한 바 있다.

2002년 들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8.30)에서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쌀 40만톤을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대북 식량차관 제공이 재개되었다. 제공되는 식량은 2000년과는 달리 국내산 쌀로 구성되어 우리 농민들의 정성을 북한 동포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량차관으로 제공한 물량은 1999년산 25만톤과 2000년산 15만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질의 국내쌀을 북측에 제공함으로써 북측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식량차관은 우리의 식량수급상황, 북한의 식량사정과 요청, 차관이라는 제공 형식, 남북관계 개선에의 기여도,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관관리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 측면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도 충분히 논의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식량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부는 식량차관의 재원과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민

족공동체 회복지원(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1억 1천만불 범위내에서 협력기금을 대출하도록 의결하였다. 식량차관금액은 2001년도 중국산 쌀의 국내 도입가인 톤당 미화 265불을 기준으로 북측과 합의한 1억 600만불과 하역비용 등 북측이 부담하는 400만불을 포함한 금액이다.

식량차관 제공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간 체결한 차관계약(2002.9.16)을 통해 확정하였다. 우리측은 식량인도회사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로 수매양정성 산하 청길무역회사를 각각 선정하여 각각 인도·인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2년 차관의 경우에도 제공조건은 2000년과 동일하게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로 합의하였으며, 2002.9.19일 첫 항차가 출발한 이래, 2003년 1월 중순에 완료하였다.

한편, 정부는 제공되는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북측은 쌀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하며, 분배문건 통보시점에 남측 인원들이 북측의 쌀 분배과정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아울러, 식량포장에는 '쌀', '40kg'과 함께 '대한민국'을 한글로 표기하여 2000년 차관제공시표기인 「Republic of Korea」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북한은 12개 시·도, 195개 시·군·구역에 대한 분배결과를 통보하여 왔으며, 우리측은 남포 인근지역을 방문하여 분배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남북간 식량차관제공합의서 요지(2002.8.30)>

남과 북은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미화 이백육십오달러(US\$265)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채선료 등을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북측은 남측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남북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의 1993년 NPT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1994년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등에 힘입어 1995년부터는 남북교역규모가 2억달러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의 반출 증가 등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3억달러를 돌파하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교역량이 전년보다 28% 감소한 2억 2,194만달러에 그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금강산 관광사업 및 경수로 건설사업 등 경협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달러를 넘어섰다.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섰고, 2001년에는 국내경기 침체, 남북간 운송여건 등으로 2000년에 비해서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4억달러선을 계속 유지하였다.

2002년에는 거래성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비거래성교역인 대북 식량차관,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 지원 등에 따라 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6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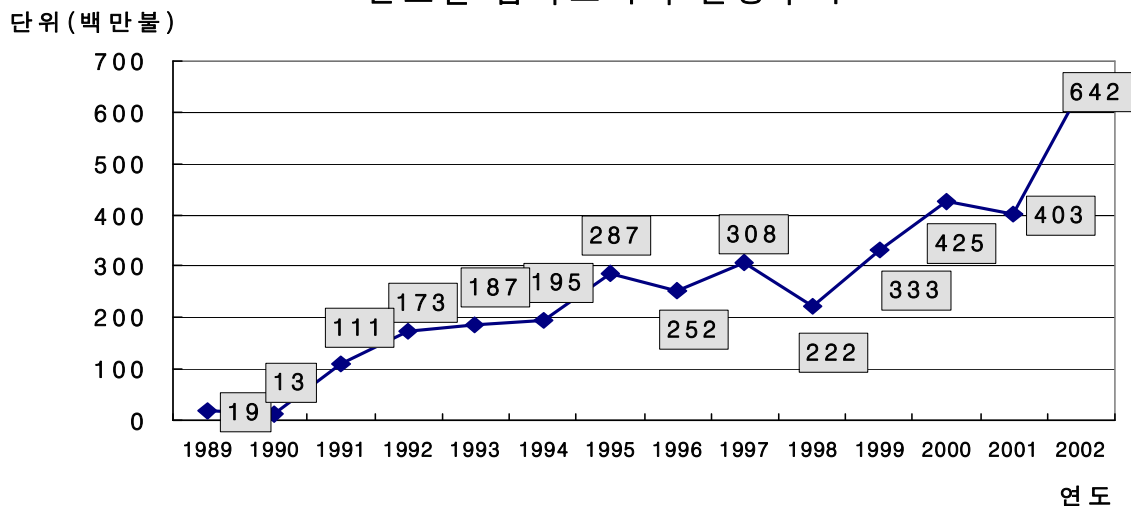
< 남북교역 현황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3	105,719	23	16	5,547	323	57	111,266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572	92	173,426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698	103	186,592
1994	827	80	176,298	495	87	18,249	1,322	158	194,547
1995	1,124	109	222,855	2,720	166	64,436	3,844	243	287,291
1996	1,648	128	182,400	2,980	166	69,639	4,628	256	252,039
1997	1,806	142	193,069	2,185	281	115,270	3,991	362	308,339
1998	1,963	135	92,264	2,847	376	129,679	4,810	445	222,943
1999	3,089	171	121,604	3,421	404	211,832	6,510	487	333,437
2000	3,952	204	152,373	3,442	526	272,775	7,394	576	425,148
2001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7,754	545	403,957
2002	5,023	202	271,575	3,773	493	370,155	8,796	568	642,730
계	25,708		2,066,292	25,804		1,504,613	50,792		3,570,905

* 19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나. 남북간 교역수지

전체 교역 규모면에서 볼 때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남북교역이 남한의 반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98년부터는 남한의 반출우위의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1995년부터 KEDO중유 및 인도지원물자의 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경수로건설사업,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 1999년에는 비료지원, 2002년에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와 식량차관 등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교역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선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인도지원, 경수로, 금강산관광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면에서 연평균 1억 2,281만달러의 교역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역수지 추이는 북한경제의 반입 여력이 확보되고, 청산결제 등을 통해 상호 균형적인 남북교역이 활성화 될 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수지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1989	18,655	69	18,724	-18,586	-
1990	12,278	1,188	13,466	-11,090	-
1991	105,719	5,547	111,266	-100,172 (-100,172)	1991~2002 연평균 -44,333 (-122,806)
19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152,300)	
1993	178,167	8,425	186,592	-169,742 (-169,742)	
19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158,049)	
1995	222,855	64,436	287,291	-158,419 (-169,414)	
1996	182,400	69,639	252,039	-112,761 (-127,016)	
1997	193,069	115,270	308,339	-77,799 (-133,049)	
1998	92,264	129,679	221,943	37,415 (-40,629)	
19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53,929)	
2000	152,373	272,775	425,148	120,402 (-61,315)	
2001	176,170	226,787	402,957	50,617 (-110,639)	
2002	271,575	370,155	641,730	98,580 (-197,419)	
합 계	2,066,292	1,504,613	3,570,905	-561,676 (-1,503,349)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다. 교역형태·품목

남북교역 초기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교역당사자간에 직접 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이후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대남경협사업을 담당하고 베이징·단둥대표부를 설치하면서 직접교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4%의 반입 비중을 보이던 광산물은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초기부터 연평균 40%이상의 반입비중을 보이던 철강·금속제품은 1999년부터 10%대로 하락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섬유제품의 비중이 1996년부터 20%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림수산물은 초기부터 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1999년 39.4%, 2000년 47.2%, 2001년에는 51.0%로 각각의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물과 섬유류의 반입비중이 1999년 76.8%, 2000년 82.4%, 2001년에는 82.2%로써 높은 편중도를 보이고 있다. 2002년의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 36.8%, 섬유류 31.6%, 철강금속제품 6.9% 등이다.

< 연도별 반입품목 현황 >

(단위 : 천달러)

연 도	농 립 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제 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 제 품	기계류	전자전기 제 품	잡제품	합 계
1989	2,334 (12.5)	1,094 (5.9)	104 (0.6)	4 (0.0)	5 (0.0)	0 (0.0)	15,072 (80.8)	24 (0.1)	0 (0.0)	19 (0.1)	18,655 (100.0)
1990	5,572 (45.4)	58 (0.5)	1,730 (14.1)	0 (0.0)	0 (0.0)	87 (0.7)	4,529 (36.9)	14 (0.1)	0 (0.0)	289 (2.4)	12,278 (100.0)
1991	9,910 (9.4)	21,966 (20.8)	5,732 (5.4)	0 (0.0)	0 (0.0)	171 (0.2)	67,303 (63.7)	17 (0.0)	0 (0.0)	620 (0.6)	105,719 (100.0)
1992	16,880 (10.4)	44,007 (27.0)	12,865 (7.9)	0 (0.0)	3,385 (2.1)	657 (0.4)	83,514 (51.3)	539 (0.3)	4 (0.0)	1,012 (0.6)	162,863 (100.0)
1993	11,787 (6.6)	87,145 (48.9)	1,182 (0.7)	0 (0.0)	8,329 (4.7)	754 (0.4)	63,147 (35.4)	0 (0.0)	80 (0.0)	5,744 (3.2)	178,167 (100.0)
1994	15,189 (8.6)	75,531 (42.8)	1,246 (0.7)	0 (0.0)	17,923 (10.2)	2,162 (1.2)	63,069 (35.8)	0 (0.0)	0 (0.0)	1,178 (0.7)	176,298 (100.0)
1995	21,270 (9.5)	86,412 (38.8)	343 (0.2)	3 (0.0)	28,639 (12.9)	2,633 (1.2)	81,467 (36.6)	9 (0.0)	6 (0.0)	2,074 (0.9)	222,855 (100.0)
1996	23,177 (12.7)	64,714 (35.5)	394 (0.2)	58 (0.0)	44,459 (24.4)	3,169 (1.7)	44,260 (24.3)	91 (0.0)	1,697 (0.9)	382 (0.2)	182,400 (100.0)
1997	27,458 (14.2)	62,682 (32.5)	130 (0.1)	665 (0.3)	47,091 (24.4)	2,614 (1.4)	47,946 (24.8)	1,002 (0.5)	3,140 (1.6)	342 (0.2)	193,069 (100.0)
1998	21,843 (23.7)	2,368 (2.6)	172 (0.2)	45 (0.0)	38,802 (42.1)	3,852 (4.2)	20,254 (22)	698 (0.8)	3,518 (3.8)	711 (0.8)	92,264 (100.0)
1999	48,066 (39.5)	2,230 (1.8)	480 (0.4)	1 (0.0)	45,741 (37.6)	3,933 (3.2)	16,120 (13.3)	1,557 (1.3)	2,850 (2.3)	626 (0.5)	121,604 (100.0)
2000	71,834 (47.1)	262 (0.2)	620 (0.4)	180 (0.1)	53,693 (35.2)	3,339 (2.2)	11,747 (7.7)	1,754 (1.2)	8,251 (5.4)	693 (0.5)	152,373 (100.0)
2001	90,028 (51.1)	3,641 (2.1)	51 (0.0)	573 (0.3)	54,937 (31.2)	5,413 (3.1)	9,887 (5.6)	2,285 (1.3)	8,752 (5.0)	604 (0.3)	176,170 (100.0)
2002	99,901 (36.8)	8,600 (3.2)	603 (0.2)	548 (0.2)	85,849 (31.6)	3,463 (1.3)	18,821 (6.9)	1,806 (0.7)	9,534 (3.5)	42,450 (15.6)	271,575 (100.0)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1993년부터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로 섬유류가 늘어나 지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식량지원 등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증가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가 1997년부터 10%이상, 화학공업제품도 1999년 20.2%, 2000년 35.0%, 2001년 28.2%로 반출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경수로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의 반출과 비료지원으로 인한 것이다. 2002년의 주요 반출품목은 농림수산물 29.8%, 화학

공업제품 24.2%, 섬유류 18.2%, 기계류 10.2%, 철강금속제품 7.1%, 전기전자제품 6.0% 등이다.

< 연도별 반출품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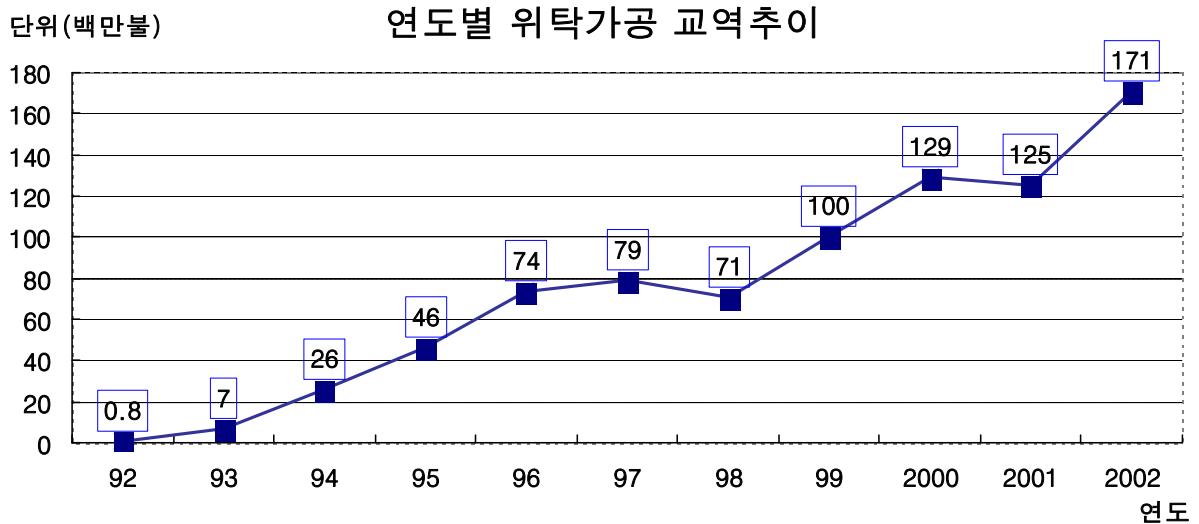
(단위:천달러)

연 도	농 림 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제 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 제 품	기계류	전자전기 제 품	잡제품	합 계
1989	0 (0.0)	0 (0.0)	0 (0.0)	0 (0.0)	6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69 (100.0)
1990	10 (0.8)	0 (0.0)	0 (0.0)	0 (0.0)	83 (7.0)	0 (0.0)	0 (0.0)	1,095 (92.2)	0 (0.0)	0 (0.0)	1,188 (100.0)
1991	1,607 (29.0)	1,392 (25.1)	1,819 (32.8)	216 (3.9)	66 (1.2)	0 (0.0)	0 (0.0)	0 (0.0)	447 (8.1)	0 (0.0)	5,547 (100.0)
1992	64 (0.6)	0 (0.0)	5,348 (50.6)	2,348 (22.2)	738 (7.0)	85 (0.8)	1,957 (18.5)	22 (0.2)	0 (0.0)	0 (0.0)	10,563 (100.0)
1993	69 (0.8)	0 (0.0)	920 (10.9)	313 (3.7)	5,886 (69.9)	64 (0.8)	260 (3.1)	0 (0.0)	584 (6.9)	330 (3.9)	8,425 (100.0)
1994	3,302 (18.1)	0 (0.0)	1,584 (8.7)	71 (0.4)	11,835 (64.9)	353 (1.9)	274 (1.5)	67 (0.4)	149 (0.8)	613 (3.4)	18,249 (100.0)
1995	9,294 (14.4)	12,264 (19.0)	1,465 (2.3)	1,594 (2.5)	35,012 (54.3)	2,289 (3.6)	185 (0.3)	1,548 (2.4)	262 (0.4)	521 (0.8)	64,436 (100.0)
1996	6,713 (9.6)	12,783 (18.4)	3,394 (4.9)	1,757 (2.5)	37,648 (54.1)	3,089 (4.4)	290 (0.4)	932 (1.3)	2,200 (3.2)	833 (1.2)	69,639 (100.0)
1997	16,988 (14.7)	29,322 (25.4)	3,977 (3.5)	4,774 (4.1)	35,055 (30.4)	4,074 (3.5)	3,951 (3.4)	12,986 (11.3)	3,559 (3.1)	585 (0.5)	115,270 (100.0)
1998	19,634 (15.1)	20,551 (15.8)	6,330 (4.9)	3,540 (2.7)	29,675 (22.9)	4,319 (3.3)	9,475 (7.3)	28,903 (22.3)	5,708 (4.4)	1,544 (1.2)	129,679 (100.0)
1999	17,037 (8.0)	42,629 (20.1)	51,409 (24.3)	3,204 (1.5)	38,005 (17.9)	6,363 (3.0)	17,017 (8.0)	26,749 (12.6)	7,480 (3.5)	1,939 (0.9)	211,832 (100.0)
2000	26,067 (9.6)	16,204 (5.9)	100,363 (36.8)	4,221 (1.5)	43,259 (15.9)	6,389 (2.3)	14,002 (5.1)	32,242 (11.8)	27,951 (10.2)	2,079 (0.8)	272,775 (100.0)
2001	32,520 (14.3)	5,760 (2.5)	69,932 (30.8)	3,399 (1.5)	52,615 (23.2)	2,751 (1.2)	16,697 (7.4)	26,466 (11.7)	15,272 (6.7)	1,375 (0.6)	226,787 (100.0)
2002	110,197 (29.8)	5,103 (1.4)	89,617 (24.2)	4,115 (1.1)	67,257 (18.2)	5,507 (1.5)	26,365 (7.1)	37,867 (10.2)	22,116 (6.0)	2,011 (0.5)	370,155 (100.0)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한 후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다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위탁가공교역으

로 생산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년보다 40.3%, 2000년에는 29.7%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3.3%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34.8% 증가하였다. 2002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7,118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26.7%, 거래성 교역액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96년부터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모니터 부품,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세트테이프 등이, 2000년에는 라디오 카세트, 유선전화기, 컴퓨터모니터, 당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들어갔다. 2001년에는 조제과실, 잎담배, 유아복, 방송통신기기, 전산기록매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위탁가공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방북은 1995년에 대동화학의 기술진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 그 이후 중단되었다가 1998년에 (주)엘칸토 등 7개 기업 50명, 1999년에 성남전자공업(주) 등 6개 기업 57명, 2000년에는 (주)IMRI 등 10개 기업 81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다. 또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기관인 기술표준원 관계자 2명이 최초로 현지공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1년에는 성남전자공업(주) 등 29개 기업 203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대한광업진흥공사 관계자 2명이 최초로 북한 광물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2년에는 32개 기업 241명이 방북하였으며, (주)엘칸토, 성남전자공업(주), (주)IMRI, 서전어패럴(주) 등 이미 진출한 위탁가공업체들은 정기적으로 방북, 기술지도를 하는 등 점차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 172건 3,204만달러로 2002년도에는 48건 623만달러 상당의 설비가 반출되었다. 2002년의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수는 108개에 이르고 있다. 설비 반출이 계속되고 참여업체수가 최근 4년 연속 100개 이상에 유지한다는 사실은 위탁가공교역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에도 의류, 전자·전기제품 등 가공설비의 유지·향상을 위한 설비가 꾸준히 반출되었으며, 제분용 기계, 산채류가공설비, 모래준설을 위한 선박 등도 반출되었다.

< 위탁가공교역 현황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76,170	72,579	226,787	52,345	402,957	124,924
2002	271,575	102,789	370,155	68,388	641,730	171,177
합계	2,066,292	460,690	1,504,613	368,081	3,570,905	828,771

< 연도별 위탁가공설비 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업체수(건수)	2(2)	3(6)	4(4)	6(6)	13(16)	20(35)	30(52)	18(48)	96(169)
금 액	532	670	490	1,380	5,234	7,653	8,993	6,232	31,184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

(단위 : 개)

년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제3절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1. 개 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대북포용정책 기조아래 사회문화교류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크게 진전되었다.

1990년대 초반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왕래행사가 재개되어 대규모 방북·방남 행사가 성사되었으며, 1998년이전 3건에 불과하던 협력사업은 1998년이후 28건으로 증가하였다. 내용면에서도 문화예술, 체육, 방송,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방남행사가 성사되면서 방북행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쌍방향 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2000년에 평양교예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조선국립교향악단 방남공연이 개최되었으며, 2002년에는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 태권도시범단 교환공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행사와 민간급 8.15남북공동행사에 북한이 참여하였다.

또한, 금강산가극단 한국공연, 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 3D애니메이션 공동제작, 6.15, 8.15 남북공동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성사되면서 교류행사가 일회성·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화·정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1년 8.15공동행사시 일부인사의 돌출행동 및 이로 인한 내부 갈등 표출 등의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문화교류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건전하게 추진되고, 내용면에서도 더욱 내실화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임.

(2002.12.31 현재)

사업자	복측상대방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 (사업승인)
※대한탁구협회	북한탁구협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1991.4.24~5.6)남북단일팀 구성 참가(일본)	1억6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3.21 (1991.3.21)
※대한올림픽위원회	북한올림픽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5.27~6.4)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포르투갈)	7억9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5.1 (1991.5.1)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6만달러	1997.12.10 (1997.12.10)
※연변과기대후원회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1999.6.29)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진선봉시행정경제위원회	나진 선봉내 과기대 설립 운영 (나진·선봉)	500만달러	1998.1.9 (1998.6.5)
문화방송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60만달러	1998.3.13
※한민족복지재단 (합영)	라선경제협조회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240만달러	1998.4.8 (1998.6.5)
※스포츠아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 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달러	1998.4.29 (1998.4.29)
※한국사진학회	조선사진가동맹중앙위원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 평양) 및 사진집출판(2,000부)	1억8천만원	1998.4.29 (1998.4.29)
※경향신문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 구소(합영)	금강산국제그룹 (회장:박경윤)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1998.5.11 (1998.6.20)
우인방커뮤니케이션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북한 명산 역사적 명승지 탐방관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 정	1998.8.6
※우인방커뮤니케이션/한국자동차경주협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래리	100만달러	1999.2.9 (1999.11.11)
※(주)CNA코리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19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 서울 공연	100만달러	1999.3.25 (1999.4.16)
MBC프로덕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CD 남북공동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	68만달러	1999.5.12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과학원(국토환경보호성 산하)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증진사업	미 정	1999.7.21
※SN21엔터프라이즈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75만달러	1999.8.5 (1999.8.5)
※현대아산·현대건설('00.3.8) o현대자동차등 13개사 참여('00.7.4)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체육 교류사업	3,420만달러 (남북한총투자액 : 5,750만달러)	1999.9.2 (99.9.20)→ 변경승인: '00.3.8, '00.7.4

사업자	북측상대방	사업내용(지역)	금액	사업자승인 (사업승인)
※(주)계명프로덕션	조선예술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달러	1999.9.22 (1999.9.22)
※(주)네오비전	조선백호7무역회사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50만달러	2000.2.3 (2000.2.3)
평화의 숲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종자·묘목· 장비 지원	4억원	2000.4.12
※기독교대한감리 회서부연회	조선기독교도연맹	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 지원	60만달러	2000.5.20 (2001.1.12)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550만달러	2000.5.23 (2000.5.23)
※경향신문 한민족 문화네트워크연 구소(단독)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50만달러	(2000.7.14)
※(주)시스젠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조선인포뱅크의 경제·산업 정보에 대한 국내 미러사이트 개설운영	60만달러	2000.9.1 (2000.9.1)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남북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100만달러	2000.10.14
(주)야미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미정	2000.11.29
※한국문화재단	금강산가극단	금강산 가극단 한국 방문 공연	1천만엔	2000.11.29 (2000.11.29)
※(사)춘양문화선 양회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100만달러(40 만달러 현물)	2001.1.12 (2001.1.12)
※(주)하나로통신	삼천리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19만달러→ 107,666달러	2001.3.23 (2001.3.23 →2001.12.26)
※(사)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	교육성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400억원	2001.6.5 (2001.6.5)
※남북교육문화 교류연구소 (동해대학교)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9만달러	2001.6.7 (2001.6.7)
※우인방커뮤니 케이션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통일염원 6.15금강산 갤러리	100만달러	(2001.7.25)
※(주)지스코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 한국공연	3천만엔 →2천만엔	2002.6.25 (2002.6.25 →02.11.29변경)
※(사)민족화해협 력범국민협의회	재일본조선역사 고고학협회	고구려문화전 개최	160만달러	2002.7.8 (2002.7.8)
※(주)하나로통신	삼천리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22만달러	(2002.7.26)
※한국청소년사 랑회	재일본조선인 총 연합회 교육국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초청공연	무상	2002.8.20 (2002.8.27)
※MBC	민화협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장면 등 취재 방송, 아시아경기대회 축하를 위한 남북합동공연	120만달러 (60만달러현물)	2002.9.7 (2002.9.7)
※KBS	민화협	방송물 공동제작 및 생방송	53만달러	2002.9.13 (2002.9.13)
※KBS	민화협	남북교향악단 연주회	45만달러	(2002.9.13)

2.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가. 교육학술 분야

교육학술 분야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남북간 교류가 시작된 이래 남북한 왕래행사가 5차례 실시되는 한편, 제3국 행사가 꾸준히 전개되었다. 남북간 학술교류는 역사, 한국학, 경제, 통일안보, 과학기술, 언어, 대학간 학술교류,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개되었으며, 특히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에 따라 1998년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2년 중에 성사된 남북학술행사를 살펴보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선양에서 「한민족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10.17-18)를 남·북·중 공동개최하였고, 한국아동학회는 엔지에서 21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 학술회의(5.30-6.1)를 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아태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TSR의 역할회의(7.24-25)에 후원 참가하였으며, 남북언어정보표준위원회는 베이징에서 남북언어정보 표준화 회의(8.4-6)를 개최하였다.

또한, 선문대학교는 선양에서 21C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조건과 구상 학술회의(10.16-18)를 개최하였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발 워크숍(12.13)에 후원 참가하였으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엔지에서 남·북·중 여성학 학술회의(12.23-24)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성사되었다.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전람회도 개최된 바 있었다. 독일 뮌헨 국제전람사는 평양에서 평양 국제기술·기간산업 전람회(9.17-20)를 열었으며 행사기간 중 유럽회사들의 한국지사 임원 17명이 방북하였다.

이외에도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은 7월중 방북하여 제1회 세계한국학대회(8월, 서울)에 북한 사회과학원장 등의 초청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의 사정상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은 6.12 착공식(2001.6.5 협

력사업 승인)을 실시한 뒤 부지정리 공사를 해왔다. 2004년 가을까지 박사원(석사과정) 개교에 필요한 건물 7개동이 먼저 건축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도 북한 김책공대와 2001년 5월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백남공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대학의 부지 위치와 건축규모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아직 구체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2년도의 교육학술분야의 성과 중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대북 IT 교육 실시이다. 한양대는 8주간(7.1~8.23) 김책공대·김일성대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IT교육을 성공리에 실시하고 한양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이외에 Global Knowledge Korea, 통일미래연구원, 재외동포연구원 등도 대북 IT교육 사업에 대해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교류협력이 증가할 전망이다.

나. 체육 분야

체육분야의 교류는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999년에 현대아산이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한편, 통일농구경기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상호개최함으로써 다시 활성화 되었다. 2000년과 2001년에 연이어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금강산지역에서 자동차질주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 개최된 시드니 올림픽개막식에는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입장한 바 있으며, 2001년 8월에는 금강산지역에서 국제모터사이클투어링이 개최되었다.

2002년에는 남북한을 오가며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류가 이루어졌다. 유럽-코리아재단 박근혜 이사 방북시(5.11~14)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데 따라 「2002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가 서울에서 개최(9.5~8)되었다. 대회에는 북한 이광근 무역상(축구협회장)을 단장으로 49명의 북측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8.12~14)에서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합의됨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구천서 회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태권도시범단 50명이 평양공연(9.14~17) 참가차 방북하였고, 이어서 조선탈권도위원회 황봉영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태권도시범단 41명이 서울공연(10.23~26)에

참가하였다. 한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에 북측이 대규모로 선수단 및 응원단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남북체육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다. 문화·예술분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8년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공연, 평양의 윤이상음악회 참가, 1999년의 평화친선음악회 방북공연,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에 이어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등 대규모 남한공연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민족옷전시회, 남북공동사진전,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화예술교류의 양적 질적 증대를 가져왔다. 200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예술단의 공연(8.16)이 남한지역에 생중계되고, 9월 평양에서 개최된 KBS 주관의 남북교향악단합동공연(9.16-22)과 MBC 주관의 이미자·윤도현 평양 특별공연(9.25-30)이 남북전역에 방영되면서 민족동질성을 확인하고, 상호 이질화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남한 대중가수 공연이 처음으로 북한지역에 생중계되고, 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응이 높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진일보된 문화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에 이어 금강산가극단의 한국공연(11.30-12.10) 및 KBS 교향악단의 평양답례공연(9.16-22)이 이루어지고, 2001년에 이어 3D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향후 남북간 문화예술 교류 정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강산가극단(11.30-12.10)은 부산·전주에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9.2-8)은 서울·전주에서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서울에 국한되었던 남북교류행사가 지역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만든 고구려 고분의 모사벽화와 진품유물들로 이루어진 고구려유물전시회('02.12.6-'03.3.5)는 공통된 역사와 민족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남북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라. 언론·출판분야

언론교류는 1997년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조사 사업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1998년 「남북통합문화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사업」과 2000년 「북한문화예술자료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 상황을 바탕으로 각종 방북 행사에 취재단이 포함되고, 개별 방송사 차원의 북한현지촬영 및 방송물 제작·방송도 이루어졌다.

2002년 KBS는 백두산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고인돌 관련 방송물을 제작하였으며, 9월에는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남북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아울러 KBS와 MBC는 2002년 9월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준비현장, 경제·생활상 등을 취재하여 서울-평양 이원생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2002년말 북한 조총련계 통신사를 통해 조선중앙통신사 기사자료를 제공받아 국내 언론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관영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출판분야에서는 2001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던 북한 기사자료의 국내잡지 등에 대한 게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월간지 「민족 21」은 통일신보사와 조선신보사의 기사를 반입하여 게재하고, 기타 중국 중개인을 통한 북한의 아동문학, 순수문학, 역사관련 저작물 등이 국내에서 출판되어 소개되고 있다.

마. 종교분야

종교분야 교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교차원의 관심과 대북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관심을 바탕으로 기독교, 불교, 민족종교 등 각 종단·교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더욱 활기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 성사된 주요 교류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계는 각 교단대표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 재일 대한기독교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제8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7.22-7.25)를 개최하고, 각 교단별 남북교회 교류협력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는 2001년 평양신학원 관련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97년이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을 매년 합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선교회·아세아선교회·광성교회·한국기독교공보사 등 교회관계자들은 북한방문 계기시마다 평양 봉수교회·칠골교회·가정교회에서 남북공동예배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조국통일기독교동지협의회는 2002년 5월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조국평화통일기원금강산 남북공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 주관하에 2000년부터 조선카톨릭교협의회와 중국 따렌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기념 남북공동학술세미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조선불교도연맹측과 함께 1997년이래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채택하여 남북공동법회를 개최해 왔다. 2002년 4월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와 남북불교도 공동법회를 개최하였으며, 불교계는 북한사찰 59개소의 단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도교 등 민족 종교는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2002년 10월 평양에서 개천절 공동행사 및 단군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정부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2002.9.29-10.14)에 북한의 참가가 남북간 체육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민족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회조직위원회 명의의 공식 초청서한을 발송(2001.10)하고 대통령 특사 방북(2002.4)시 대회참가를 제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2002.8.2-4)에서 북한의 대회 참가가 합의되었고,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대회참가를 공식통보하는 한편, 실무접촉을 제의(8.9)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간 실무접촉이 2차례(8.17-19, 8.26-28)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북한 선수단·응원단 규모, 개·폐회식때 남북 동시입장 등 실무절차 문제에 대한 최종합의(8.28)가 이루어졌다. 특히 실무접촉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를 금강산에서 대회조직위원회측에 인계(9.6)하여, 한라산에서 채화된 성화와 임진각 망배단에서 합화(9.7)함으로써 남과 북의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북한 선수단은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평양-부산 직항로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남한을 방문(9.23, 9.27)하였고, 응원단은 ‘만경봉-92호’ 편으로 원산에서 부산으로 방문(9.28)하는 등 총 705명의 인원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취주악대 150명, 예술단 35명 등 총 275명의 북한 응원단은 거리공연, 환송식장 공연 등 총 5회의 공연과 경기장내 응원 등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이들이 대회기간 중 생활한 ‘만경봉-92호’ 또한 집중적인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여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대회 말미에 개최된 마라톤에서 북한의 함봉실과 남한의 이봉주가 각각 여자와 남자마라톤에서 우승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하였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올 때와 같은 항공·해운 편으로 귀환(10.11, 10.15)하였다

남한에서 개최된 국제체육행사에 북한이 참가한 것은 분단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특히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 및 응원단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4. 다양한 남북공동행사 개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부문의 다양한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어 남북간 상호 이해 및 통일의지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1999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01년 5월에는 금강산에서 노동절 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되었고, 2001년 6월에는 금강산 통일대토론회, 7월에는 남북농민 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8월에는 8.15 남북공동행사가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02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돌을 기념하는 6.15 남북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다. 한편 8.15 남북공동행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북측 민간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합동문화공연, 미술·사진 전시회, 부문별 상봉모임,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10월에는 남북청년학생공동행사 및 남북여성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남북공동행사는 노동·농민·청년·여성 등 다양한 민간부문 단체들이 질서있게 대규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정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및 통일의지 함양에 기여하였다.

제4절 남북한 인적 교류

1. 남북한 왕래

가. 개 황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남북한 왕래는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4,066건(43,751명), 승인 3,885건(41,880명), 성사 3,660건(39,977명)이며, 1998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총 37,572명으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 방북인원 2,405명의 15배를 넘어서고 있어 남북간 인적교류 활성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2002년 북한 방문은 신청 802건(13,502명), 승인 774건(12,979명), 성사 753건(12,825명)으로 1989년 방북이 허용된 이래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이는 2001년도의 8,551명에 비교해서도 약 50%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이산가족·관광·대북지원 등 방북목적도 다양화되었다.

< 2002년도 분야별 방북 현황 >

(단위:명)

구 분	이산가족	경 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남북회담등)	계
인원(명)	1,479	1,754	1,193	1,008	4,108	1,975	1,308	12,825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현황을 보면, 2002년 한해 동안 1,052명이 남한을 방문함으로써 2001년의 191명과 비교하여 5배이상 증가되었다. 분야별로도 남북회담, 경제, 체육, 종교, 8.15남북공동행사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성사되었다.

< 2002년도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 >

(단위:명)

구 분	경 제	체 육	종교	남북 회담	기타	계
인 원	67	765	15	89	116	1,052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2002년에도 금강산관광 활성화 조치 등으로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외국인 1,168명, 영주권자 634명을 포함하여 총 514,243명 금강산을 관광했다. 2002년 한해에만 84,727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 분야별 방북 현황(누계)>

(1989.6.12-2002.12.31, 단위:명)

구 분	이산 가족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사업	경수로	대북 지원	기 타 (남북회담등)	계
인원(명)	1,990	3,798	3,390	9,465	12,311	4,576	4,447	39,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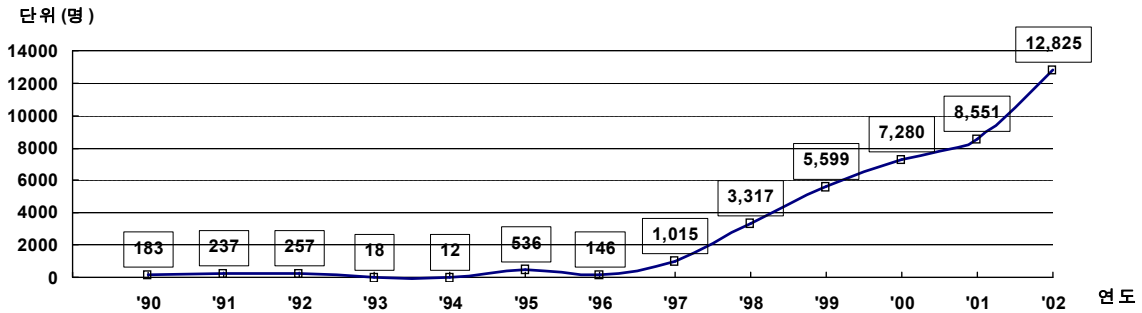
<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

(1989.6.12-2002.12.31, 단위:건(명))

연도	구분	신청	승인	성사
1989	북한방문	1(1)	1(1)	1(1)
	남한방문	-	-	-
1990	북한방문	7(199)	6(187)	3(183)
	남한방문	5(306)	5(306)	4(291)
1991	북한방문	12(244)	11(243)	10(237)
	남한방문	3(175)	3(175)	3(175)
1992	북한방문	17(303)	8(257)	8(257)
	남한방문	4(113)	3(103)	3(103)
1993	북한방문	6(21)	5(19)	4(18)
	남한방문	2(6)	2(6)	2(6)
1994	북한방문	12(78)	7(54)	1(12)
	남한방문	-	-	-
1995	북한방문	64(563)	58(543)	52(536)
	남한방문	1(7)	1(7)	-
1996	북한방문	50(249)	35(170)	28(146)
	남한방문	-	-	-
1997	북한방문	156(1,194)	149(1,172)	136(1,015)
	남한방문	-	-	-
1998	북한방문	402(3,980)	387(3,716)	340(3,317)
	남한방문	-	-	-
1999	북한방문	886(6,199)	862(5,997)	822(5,599)
	남한방문	1(62)	1(62)	1(62)
2000	북한방문	865(8,070)	845(7,737)	804(7,280)
	남한방문	10(706)	10(706)	10(706)
2001	북한방문	786(9,148)	737(8,805)	698(8,551)
	남한방문	5(191)	5(191)	5(191)
2002	북한방문	802(13,502)	774(12,979)	753(12,825)
	남한방문	13(1,120)	13(1,120)	13(1,052)
계	북한방문	4,066(43,751)	3,885(41,880)	3,660(39,977)
	남한방문	44(2,686)	43(2,676)	41(2,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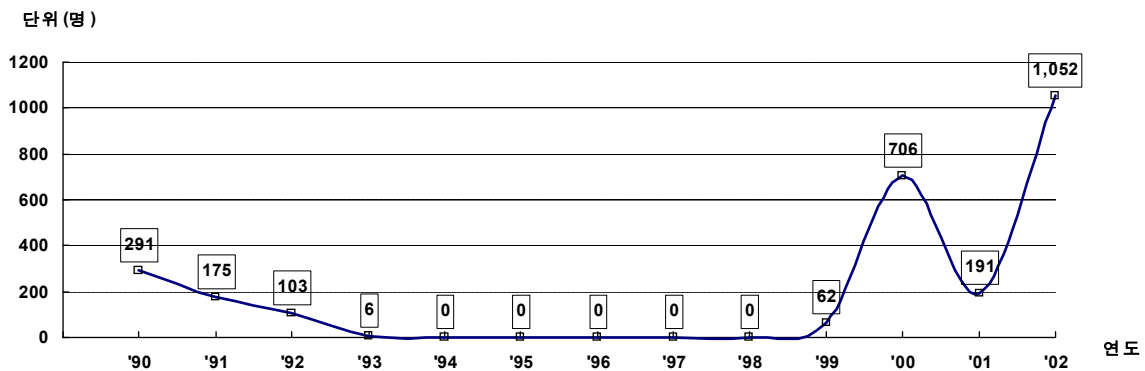
※ 금강산 관광객은 제외된 숫자임.

연도별 방북인원 변화추이



한편,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은 총 2,58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에는 291명이 방문하였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남한방문이 없었다. 1999년에는 62명이 방문하였고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706명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부진 등으로 인해 191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남북 당국간회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1,052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연도별 남한방문 추이



<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누계)>

(1989.6.12-2002.12.31, 단위:명)

구분	이산가족	경제	체육	문화예술	학술	남북회담	기타	계
인원(명)	427	105	976	369	15	559	135	2,586

나. 남한주민 방북

(1) 경제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경제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901건(4,560명), 승인 823건(4,207명), 성사 747건(3,798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255건(1,885명), 승인 247건(1,820명), 성사 235건(1,754명)으로 이는 2001년 방북인원 668명에 비하여 162.6%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1998년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허용되면서 같은 해 10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1999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해 북한의 고위층과 직접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 3회, 남북경협 실무접촉 2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2회,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3회,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2회,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1회 등 경제협력에 관한 각종 회담이 이어져 상호방문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의 추진과 협의를 위한 우리 경제인들의 북한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도에도 경제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임가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협의, 하나비즈닷컴·엔트랙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협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임가공사업 추진, 국제옥수수재단의 농업기술협력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장 건설사업, 로템의 철도화차 제작기술지원, 제일모직, LG 등 의류임가공사업 및 물자교역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방북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2) 사회문화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470건(4,175명), 승인 428건(3,894명), 성사 364건(3,390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110건(1,287명), 승인 101건(1,201명), 성사 100건(1,193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1년 방북인원 701명에 비하여 70.2%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대북 교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이 증가하였다. 특히, 제3국에서 주로 접촉해 오던 사회문화교류가 평양,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학술·체육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신청 219건(1,979명), 승인 210건(1,916명), 성사 183건(1,620명)이며, 2002년에는 신청 55건(422명), 승인 52건(394명), 성사 52건(394명)이 이루어졌다.

2002년도 주요 방북사례를 보면 김충환 강동구청장 등 8명이 선사문화학술회의 협의를 위해, 고려대 김정배 총장 등 2명이 개천절 남북공동 단군학술회의 협의를 위해 방북하였다. 한양대학교 이승철 국제대학원장 등 5명은 IT강좌 개설협의를 위해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측은 북한의 대회참가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유럽-코리아재단측은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 개최 협의를 위해 방북하였다. 구천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등 50명은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공연을 위해 방북하는 한편, 현대는 평양실내체육관 건설사업을 위해 관련인사와 건설근로자들이 방북하는 등 학술·체육분야에서 북한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 방북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61건(433명), 승인 53건(400명), 성사 47건(372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10건(90명), 승인 9건(85명), 성사 9건(84명)이 이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 8월에는 언론사 사장단 방북이 성사되어 「남북언론기관간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북한 언론기관대표의 서울 방문 추진에도 합의한 바 있다.

2002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KBS가 1월에 방북하여 드라마 일부를 촬영하였다. 월간지 「민족21」 관계자는 1월과 5월에 각각 방문하여 주요인물 인터뷰 및 주민생활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으며, 방송위원회는 8월 방북하여 남북방송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종교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93건(590명), 승인 78건(469명), 성사 62건(397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18건(202명), 승인 15건(165명), 성사 15건(165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1년 방북인원 86명에 비해 91% 증가한 것으로 개신교, 불교, 천도교 등 각 교단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63건(1,008명), 승인 56건(965명), 성사 46건(882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21건(524명), 승인 20건(517명), 성사 19건(513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3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2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KBS 남북교향악단 평양공연, MBC 대중가수 평양특별공연, 영화 “아리랑” 평양시사회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3)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방북

1995년에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부지조사단과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997년 8월에 부지정리 등을 위한 초기 현장공사가 착공되고 1998년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관계자 등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인원,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700여명의 공사관계자들이 신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2002년도 대북경수로건설사업 관련 방북은 신청 148건(4,108명), 승

인 148건(4,108명), 성사 148건(4,108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7%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1999년 12월 15일 본공사 계약(TKC)이 체결됨에 따라 2000년부터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44건(2,686명), 승인 43건(2,676명), 성사 41건(2,586명)이며 2002년에는 13건(1,120명)이 신청·승인되어 13건(1,052명)이 성사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1999년에 들어와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북측농구단 및 관계자 62명이 서울을 방문(12.22~25)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재개되었다.

2002년에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9년 이후 이루어진 전체 남한방문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8.15 남북공동행사 등 대규모 사회문화교류행사의 개최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에 따른 것이다.

< 주요 남한방문 현황 >

연도	방문목적	방문자	방문기간
2000년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최휘 김일성사회주의청년 동맹중앙위 비서 등 공연단 102명	2000.5.24-5.30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김유식 평양교예단 예술 부단장 등 공연단 102명	2000.5.29-6.1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참가	전금진 등 대표 4명 수행원·기자 25명	2000.7.29-7.31
	제1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유미영 대표 등 15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 력 31명, 기자 20명)	2000.8.15-8.18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참가	허이복(조선국립교향악 단 단장) 등 132명	2000.8.18-8.24
	북한 특사 방문	김용순 등 8명	2000.9.11-9.14
	제1차경제협력실무접촉	정운업 등 15명	2000.9.24-9.26
	제1차남북국방장관회담	김일철 등 13명	2000.9.24-9.26

연도	방문목적	방문자	방문기간
	제3차남북장관급회담	전금진 등 22명	2000.9.27-9.30
	제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장재언 등 136명	2000.10.31-11.2
200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김경락 등 140명	2001.2.26-2.28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조문단	송호경 등 4명	2001.3.23
	조총련계 북한국적 축구 선수 현대축구단 입단	양규사	2001.3.28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 참석	김령성 등 27명	2001.9.15~9.18
	KEDO원전 고위정책자 과정 참여	김희문 등 19명	2001.12.17~12.29
2002년	경수로사업 항공관계자 국내시찰	안영환 등 10명	2002.5.19-5.24
	경수로사업관련 핵안전 규제요원 훈련	김영일 등 25명	2002.7.2-7.27
	KEDO 원전건설 인력수송 항공기 운항 승무원	길종기 등 14명	2002.7.20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등 41명	2002.8.12-8.14
	8.15남북공동행사	김영대 단장 등 116명	2002.8.14-8.17
	제2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박창련 등 30명	2002.8.27-8.30
	남북통일축구경기	리광근 등 49명	2002.9.5-9.8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박명철 등 668명	2002.9.22-10.15
	개천절남북공동행사참가단 수송	김수겸 등 15명	2002.10.1-10.5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장 웅 등 7명	2002.10.8-10.15
	북한 태권도시범단 서울 공연	황봉영 등 41명	2002.10.23-10.26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박남기 등 18명	2002.10.26-11.3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김춘근 등 18명	2002.12.11-12.13

2. 북한주민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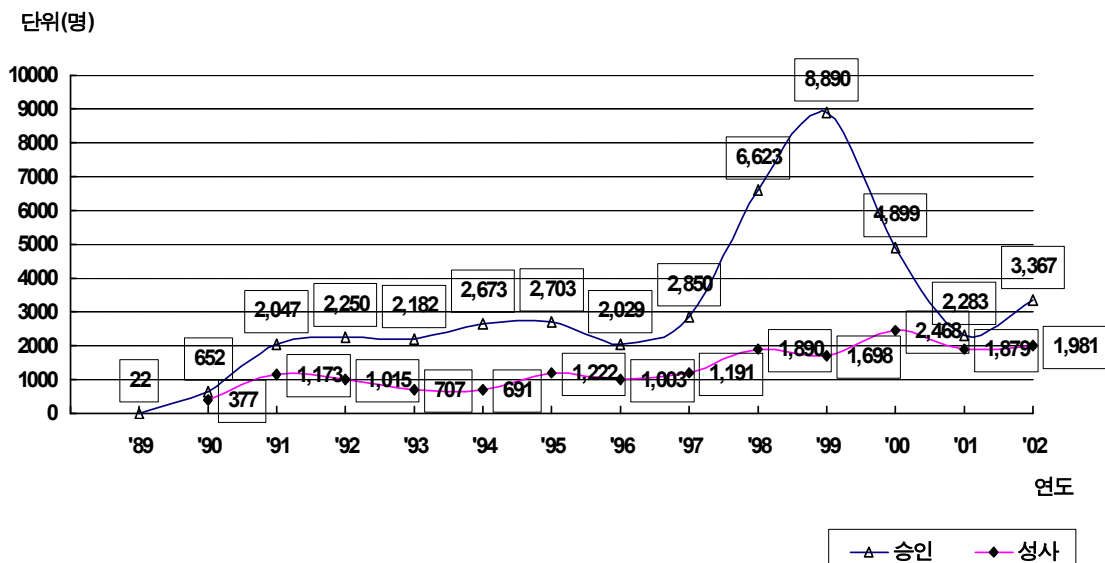
가. 개황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핵문제 발생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1994년에는 237건(691명)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이산가족 및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02년도 북한주민접촉 실적이 2001년도와 비교해 보면 성사 인원은 증가했으나 성사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2001년 10월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이산가족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현상으로 실질적 접촉성사는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접촉은 주로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주민접촉 승인, 성사 추이



<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단위: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70)	21(22)	-
1990	235(687)	206(652)	62(377)
1991	753(2,195)	685(2,047)	266(1,173)
1992	801(2,420)	744(2,250)	238(1,015)
1993	1,172(2,220)	1,148(2,182)	313(707)
1994	1,338(2,864)	1,261(2,673)	237(691)
1995	1,011(2,769)	1,007(2,703)	494(1,222)
1996	729(2,338)	692(2,029)	465(1,003)
1997	1,387(2,969)	1,340(2,850)	516(1,191)
1998	4,628(6,714)	4,567(6,623)	856(1,890)
1999	7,590(9,198)	7,616(8,890)	884(1,698)
2000	2,831(4,950)	2,812(4,899)	1,710(2,468)
2001	1,169(2,332)	1,145(2,283)	1,211(1,879)
2002	1,485(3,434)	1,453(3,367)	621(1,981)
계	25,165(45,160)	24,697(43,470)	7,873(17,295)

1998년에서 1999년간 북한주민 접촉신청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및 경제교류 성사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 등 당국간 협력이 개시됨에 따라 점차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2년도 남한주민의 북한주민 접촉은 신청 1,485건(3,434명), 승인 1,453건(3,367명), 성사 621건(1,981명)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25,165건(45,160명), 승인 24,697건(43,470명), 성사 7,873건(17,2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2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은 경제분야 237건(390명), 사회문화분야 160건(702명), 대북지원 17건(50명), 이산가족 199건(266명), 기타 8건(573명) 등이다.

< 2002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단위:명)

구분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대북지원	기타	계
인원	266	390	702	50	573	1,981

나. 경제분야 접촉

경제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5,174건(11,589명), 승인 5,056건(11,311명), 성사 2,524건(4,221명)에 이르고 있다. 2002년에는 신청 781건(1,193명), 승인 763건(1,170명), 성사 237건(390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2002년도 물자교역 및 남북경협 협의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은 정보기술(IT)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이징, 홍콩 등 제3국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촉은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의 방북으로 이어져 남북경협이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188건(607명), 승인 177건(576명), 성사 51건(171명)으로 집계되었다. 2002년에는 신청 7건(8명), 승인 4건(5명)으로 국내여행사 등이 주로 북한의 아리랑축전 참가 및 북한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 개발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사회문화분야 접촉

사회문화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학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694건(4,427명), 승인 644건(3,775명), 성사 252건(2,400명)이 이루어졌다. 2002년도에는 신청 71건(312명), 승인 69건(310명), 성사 42건(262명)으로 성사 인원은 전년도 30건(10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남북간의 학술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접촉은 주로 중국지역 동포학자와 단체들의 대북 교류경험을 활용하여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국제학술회의에 남북이 동시에 초청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2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한민족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 국제학술회의(10.17-18 선양), 21세기를 열어갈 아동교육 학술회의(5.30-6.1 옌지), 아태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TSR의 역할회의(7.24-25 블라디보스톡), 남북언어정보 표준화 회의(8.4-6 베이징), 21C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조건과 구상 학술회의(10.16-18 선양), 동아시아국가의 경제개발 워크샵(12.13 프놈펜), 남·북·중 여성학 학술회의(12.23-24 옌지) 등이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의 신청 510건(2,001명), 승인 454건(1,889명), 성사 166건(999명)으로 집계되었다. 2002년에는 신청 53건(150명), 승인 51건(145명), 성사 20건(39명)으로 전년에 비해 32% 감소하였다.

2002년도의 주요 접촉사례로는 금강산가극단 초청공연 추진, 3D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협의, 고구려 문화전 추진, 평양영화축전 작품출품 추진 등이 있다.

체육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285건(1,349명), 승인 272건(1,303명), 성사 108건(759명)이다. 2002년에는 신청 35건(194명), 승인 34건(192명), 성사 24건(147명)의 북한주민접촉이 이루어져 접촉 성사건수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다.

2002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공연(9.14-17 평양, 10.23-26 서울), 2002 남북 통일축구경기대회(9.5-8, 서울), 남북승마교류 추진, 남북태권도분야 학술교류 추진 등이 있다.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421건(2,077명), 승인 364건(1,924명), 성사 167건(1,222명)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신청 31건(188명), 승인 30건(186명), 성사 23건(143명)이 이루어져 2001년에 비해 접촉 성사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2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제8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회의 참가(7.22-7.25), 조국통일기원 금강산기도회 개최 협의(4.2),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 작성 협의(3.14), 안중근의사 92주기기념 남북공동세미나 개최(4.29-5.1), 남북불교교류 협의(11.29),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개최협의(9.4), 제6차 아시아종교인 평화 자카르타회의 참가(6.24-28)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출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423건(1,142명), 승인 380건(1,041명), 성사 154건(486명)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신청 47건(102명), 승인 46건(101명), 성사 32건(64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2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일제종군위안부 관련 취재 협의, 남북방송문화교류 협의, 방송물제작 및 협력사업 협의, 북한 저작물 국내 출간 협의, 남북 통신사간 교류협의, 방북취재 및 언론출판교류 협의, 남북 기자교류 협의 등을 들 수 있다.

과학·환경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276건(1,028명), 승인 264건(1,005명), 성사 95건(402명)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신청 17건(63명), 승인 17건(63명), 성사 19건(47명)이 이루어져 접촉성사 인원은 전년도보다 3배이상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2002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생식물이용개발사업단 등에서 재일본 조선인과학기술협회의 제42차 과학기술보고대회(2002.7) 참가, 기상청의 제3차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의 참가(2002.12) 등을 들 수 있다.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제도화

가. 4개 경협합의서 및 분야별 합의서 체결

남북교류협력을 정치나 이념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에 대해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로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은 공통의 법·제도적 기반 없이 각각의 법제와 민간 당사자간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그 결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두차례 경협실무접촉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타결하고 이에 가서명하였으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에 의해 2000년 12월 16일 정식 서명되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

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측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중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합의서는 각각 후속조치를 위한 남북간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남북간의 투자사업에 있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조약방식’ 발효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무회의(2001. 5.22)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개 합의서안에 대한 체결동의안을 2001년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의안은 2002년 12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4개 경협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공동규범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4개 합의서가 발효되면 남북경제협력은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협 4개 합의서 체결·발효를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제도화는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개발 및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타결되어 서명본을 교환하였으며, 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는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통관·검역·통신합의서가 타결되어 서명본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 28일에는 「남과 북 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 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해운합의서」가 타결·가서 명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간 통행, 원산지 확인절차,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 등의 세부합의서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이제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법적·제도적 단계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4개 합의서의 발효 및 관련 후속조치와 남북경제 협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나. 남북경제협의 제도화 추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회의(2002.11.6~11.9)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12월 11일부터 13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4개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 마련과 통행, 원산지 확인 합의서, 산업표준 및 산업재산권 문제 등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충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원산지 확인문제 등 일부사항은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제1차 회의는 남북간 경협추진의 제도화를 위한 대화틀을 본격 가동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쌍방은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북경협사업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보다 기술적·실무적 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실무협의회가 남북회담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해운협력 분야의 합의서는 단순한 합의의 차원을 넘어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통행, 산업표준, 산업재산권 등 분야를 확대해 나가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여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맞도록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등 5개의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교류협력 관련 규제의 70%를 정비하여 민간기업·단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당시 총 규제 40건 중 14건을 폐지하고 15건의 내용을 개선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 신청서류 중 환경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위탁가공용 물품의 반출·반입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외국인의 금강산관광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험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SOC 확충지원 등으로 인한 남북경협 확대와 기업의 경험 자금 수요 증대에 따라 2000년 11월 대출비율, 대출조건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하였다.

2001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방문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수시방북절차를 간소화하였

으며, 접촉 및 방북결과보고서의 제출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 북한주민접촉에 있어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포괄적인 접촉승인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협력사업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2001년 12월에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2개 지침과 남북간 선박은행 및 교역과 관련한 2개 고시를 제·개정하였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은 시중금리의 하향 추세, 남북경협이 불확실성, 경협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자금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 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은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력기금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금액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컴퓨터를 반출승인품목에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도서’로만 규정되어 있던 대상품목을 전자우편, 전자출판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으며, 국내외 농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반입제한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남북한간선박은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을 통해 남북한간 선박의 안정적 운항을 도모하고, 국적선사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선박은행승인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2001년 10월 이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되어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원 발의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인사의 참여,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사용시 국회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정부부처간의 협의기구이고 정당추천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2001년부터 기금집행에 대한 사전보고를 충실히 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과 실익은 적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원입법 추진 취지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02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시행규칙」의 개정(2002.3.4)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의 절차 간소화에 따르는 수시북한방문신고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및 북한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문안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법률과 하위법령의 체계를 완비하고, 투명성 있는 절차와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2002년 1월 금강산 관광지속을 위한 정부지원방침을 발표한 이래,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금강산관광객에 대한경비지원지침」을 통일부고시로 제정(2002.3.28)하였다.

또한, 물품의 반출·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2002.10.24)하였다. 반입물품으로서 제3국 경유화물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원자재를 반출하고 생산된 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물품 및 사전에 승인을 득한 협력사업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여 위탁가공교역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법령·고시에서 신고대상물품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과 남북 당국간 회담 등에 필요한 물품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품목」으로 지정하여 반출·입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동

가.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기타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2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1조 6,250억원, 민간출연금 22억원, 운용수익금 2,44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 2,197억원, 기타수입금 15억원 등 총 3조 925억원이 조성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1998~1999년)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1,00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2000.6)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출연금 규모가 대폭 확충되어 2001년도에 5,000억원, 2002년도에 4,900억원의 정부출연이 이루어졌다.

한편, 민간출연금은 2002년까지 22억원에 이른다. 특히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2000년에 6억원, 2001년에는 11억원이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한 침목기증 용도 등으로 출연되기도 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운용수익 등	공자예수금*	계
1991	25,000	-	237	-	25,237
1992	40,000	-	5,118	-	45,118
1993	40,000	3	4,778	-	44,781
1994	40,000	1	9,386	-	49,387
1995	240,000	119	14,589	-	254,708
1996	100,000	132	18,410	-	118,542
1997	50,000	288	27,873	-	78,161
1998	-	-	40,280	-	40,280
1999	-	3	23,013	149,831	172,847
2000	100,000	541	30,393	254,852	385,786
2001	500,000	1,080	29,406	310,000	840,488
2002	490,000	78	42,035	505,000	840,488
계	1,625,000	2,245	245,518	1,219,683	3,092,446

* 공자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나.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의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 북한에 쌀 15만톤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기금집행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경수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용역비로 49억원을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675억원을 대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5만 톤을 지원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160억원을, 정부가 직접 비료 6.5만톤을 지원하는 데 179억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2000년에는 경수로 본공사 착공에 따른 경수로사업 대출 3,259억원,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식량차관 867억원, 비료 30만톤 지원에 944억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146억원, 남북 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및 평양교예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지원에 23억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에 23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2001년도 기금집행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료 20만톤 지원사업에 639억원, 식량차관(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으로 190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899억원, 제2차, 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9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8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4억원, 6.15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 경비지원에 3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KEDO 경수로사업 대출 2,555억원, 경험추진기업에 대해 경험자금 대출 450억원, 교역자금 대출 11억원 등 총 5,54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2002년도 기금집행은 대통령 특사 방북(4.3~4.6) 이후 남북간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금이 지원되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비료 30만톤 지원사업에 833억원, 식량차관(쌀 40만톤) 967억원, 자재·장비차관 306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260억원,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86억원, 제4차·5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14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54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5억원,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에 215억원, 제14회 부산아시안 게임 북한 참가 관련 지원에 14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KEDO 경수로사업 대출 3,009억원, 경험추진기업에 대한 경험자금 대출 358억원, 교역자금 대출 4억원 등 총 6,49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 연도별·용도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

(단위: 억원)

용도구분	'91~'97	'98	'99	2000	2001	2002	누계
주민왕래지원				2.8 (1)	2.5 (1)	236.9 (9)	242.2 (11)
사회문화협력사업지원		0.3 (1)		6.4 (1)	1.0 (1)		17.2 (5)
손실보조	12.7 (1)						12.7 (1)
반출입자금대출				5.0 (1)	10.8 (9)	3.9 (5)	19.7 (15)
경협사업자금대출					450.0 (1)	357.7 (3)	807.7 (3)
민족공동체회복지원	2,124.6 (10)	874.2 (5)	343.3 (3)	5,292.3 (20)	5,080.0 (34)	5,896.0 (46)	19,610.4 (82)
무상	2,124.6 (10)	199.0 (4)	343.3 (3)	1,165.5 (18)	1,887.6 (32)	1,614.0 (43)	7,334.0 (77)
대출		675.2 (1)		4,126.8 (2)	3,192.4 (2)	4,282.0 (3)	12,276.4 (5)
합계	2,146.8 (13)	874.5 (6)	343.3 (3)	5,306.5 (23)	5,544.3 (46)	6,494.5 (63)	20,709.9 (117)

※ ()는 기금사업 건수

<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02.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금액	
조성 및 지출	조성 (A)	정부출연	16,250
		민간출연	23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2,197
		운용수익	2,440
		기타수입금	15
		계	30,925
	지출 (B)	경상지원	7,606
		운영비용	1,408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상환	1,499
		계	10,513
순조성액(A-B)		20,412	
보유 자산	투자자산	대출잔액(C)	12,419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1,400
	유동자산	경수로계정	348
		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	6,245
	보유자산액(현보유자금*)		20,412(7,993)

* 현보유자금 7,993억원 = 조성액(A) 30,925억원 - 사용액(B+C) 22,932억원

다. 기금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기금집행 내역의 추이를 보면,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1999년까지는 기금을 비료, 식량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5호의 ‘민족공동체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하여 왔다. 일반기업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자율적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 등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사업지원 이외에 인적왕래와 사회문화 협력사업에도 기금지원을 확대하여 13건에 250억원을 집행하였다.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8건에 827억원을 대출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자금도 사용범위가 늘어나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식량차관 및 자재·장비차관 제공, 비료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 이외에도 남북한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남북자원개발협력사업 등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있다. 이는 2000년말 국회의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의결시 부대의견에 따른 것으로, 2001년 1월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 대북 동내의 지원사업까지 총 23건, 8,388억원의 승인사업에 대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였다.

정부는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2001.12)을 통해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지원에 있어서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2002.12)하여 대출제도 간소화, 대출이자율 인하, 신용대출요건 완화 등 민간기업의 대북경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위원장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농림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차관, 국정원 차장으로 구성되며 안전에 따라 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관련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을 그 기능으로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치고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라 협의회 운영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협의회는 주요 대북정책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여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사업처리예규정」,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등을 의결하였다.

2002년도에는 총 20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3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1998년 8회, 1999년 12회, 2000년 13회, 2001년 13회 개최 등 남북교류협력 진전에 따라 협의회 개최 횟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02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

회차	일 자	안 건	
		의안번호	의 안
89	'02.1.22	158	2002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159	대북경협기업(국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90	'02.1.28	160	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91	'02.1.31	161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 승인
92	'02.2.25	162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93	'02.3.19	163	WHO를 통한 대북말라리아 방역지원 관련 기금지원
94	'02.3.21	164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
		165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남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166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95	'02.4.18	167	대북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68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96	'02.4.29	169	대북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97	'02.4.25	170	이산가족 상봉행사등 통신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98	'02.5.31	171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172	이산가족 교류추진 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99	'02.7.8	173	대북 교역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100	'02.8.14	174	대북지원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5	대북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101	'02.9.7	176	대북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7	대북비료 10만톤 추가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
		178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기금 지원
		179	대북 교역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102	'02.9.17	180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
		181	대북자재·장비차관 제공을 위한 기금 지원
103	'02.10.11	182	북한선수단·응원단의 부산AG참가에 따른 기금 지원
		183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184	대북 교역기업(대원상사)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104	'02.10.31	185	대북 교역기업(동경종합상사)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186	대북 교역기업(대동무역)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105	'02.10.28	187	북한경제시찰단 방문에 따른 기금 지원
106	'02.12.4	188	대북 동내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189	8.15민족통일대회에 대한 기금 지원
		190	대북 교역기업(조성종합)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107	'02.12.14	191	대북 교역기업(동경종합상사)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108	'02.12.31	192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
		193	2002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에 대한 기금 지원
		194	남북철도·도로연결 관련 대북자재·장비제공현황(보고)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

1.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추진
2.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3.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 국내입국 추이
2. 정착지원 추진
3. 법·제도 개선

제4절 북한인권·환경문제 개선 추진

1. 북한인권문제
2. 북한환경문제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

남북이산가족은 1945년 해방에 뒤이은 국토분단과 6.25전쟁, 이후 이어진 냉전시대 등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제 남북분단상태가 반세기를 경과함에 따라,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점차 가족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국민의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특히,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의 상시화와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 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를 협의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2000년 6월 남북정상간의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흠어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등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빨리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그간 교류실적을 종합해 보면 이산가족상봉 5차례, 생사·주소확인 2차례를 실시하여 총 5,400여명의 가족·친척이 상봉을 하였고, 11,848명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남북 각 300명씩 1차례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상봉 등 민간차원에서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이산가족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계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2,725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7,651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974
	방북상봉										1	5	4	5	5	20
당 국 차 원	생사확인	65											792	744	133	1,734
	서신교환												39	623	9	671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98	738

특히, 2002년에는 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지역에서 2차례 이루어지는 한편, 남북 적십자총재가 만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우선 금강산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고,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정례적 상봉·면회를 포함하여 이산가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향후 정부는 그동안의 교류사업을 토대로 면회소 설치·운영,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등 제도적 해결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적십자회담 등 남북협의를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1.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추진

가. 이산가족 상봉

2002년에는 종래의 서울·평양 동시교환방문 방식에서 금

강산 순차상봉 방식으로 바뀌어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6.15공동선언 이후 2001년까지 3차례의 상봉에 이은 것으로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2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최초로 서울·평양을 교환방문하여 남북 총 157명의 이산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친척을 상봉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그 후 15년간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지 못하다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1차 이산가족 방문단 서울·평양 교환방문이 이루어져 1,170여명이 상봉하는 등 3차례의 서울·평양 교환방문에 이어 2차례의 금강산 상봉을 함으로써 총 5,400여명의 이산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친척을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산가족 상봉현황>

(단위 : 명)

구분	1차 상봉	2차 상봉	3차 상봉	4차 상봉	5차 상봉
상봉시기	2000.8.15~18	2000.11.30~12.2	2001.2.26~28	2002.4.28~5.3	2002.9.13~18
상봉자 수	1,170여명	1,220여명	1,240여명	849명	875명
상봉장소	서울·평양	서울·평양	서울·평양	금강산	금강산

(1) 제1~3차 이산가족 상봉

2000년 6월 남북 정상간의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흩어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동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1차 방문단을 교환하였다. 이를 통해 1,17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다.

이어서 2000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김용순특사 방문 공동보도문을 통해 두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문제를 2차 적

십자회담에서 협의키로 함에 따라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최된 2차 적십자회담에서 2~3차 방문단 교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2차 방문단 교환을 통해 1,22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고, 2001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3차 방문단 교환을 통해 1,24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제4차 이산가족 상봉

2001년 9월에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2001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환하기로 하였다. 2001년 9월 21일에 개최된 「인선위원회」에서는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의 원칙 아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300명을 컴퓨터로 공개 추첨하였다.

이들 중 사망자나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북측에 생사·주소확인을 의뢰할 200명을 확정하여 2001년 9월 26일에는 남북간에 그 명단을 교환하였다. 2001년 10월 9일에는 최종방문단 100명을 선정하여 북측과 명단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북측이 미국의 9.11 테러로 인한 우리측의 경계태세강화를 구실로 2001년 10월 12일 갑자기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 옴으로써 상봉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2002년 4월 특사 방북시(4.3~6)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은 2002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재북가족을 상봉하고, 이어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을 상봉하는 순차상봉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4월 10일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 10월에 선정된 이산가족방문단 100명 중 99명을 확정짓고 건강상 이유로 포기한 이산가족 1명에 대해서는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선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선정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 24일 남과 북은 교체자를 포함한 최종방문자 100명 명단을 교환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상대측 이산가족 100명과 상봉할 가족 명단을 교환하였으나, 우리측 최종방문자 중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최종단계에서 상봉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측은 99명의 방문단이 재북가족을 상봉하였다.

방문단 구성을 연령별, 가족관계별, 출신지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99~90세	89~80세	79~70세	69~60세	계
우리측	-	21	52	26	99
북 측	-	3	59	38	100
계	-	24	111	64	199
비율(%)	0.0	12.0	55.8	32.2	100

<가족관계별 현황>

(단위 : 명)

가족관계	3촌이상	형제자매	처·자식	부모	계
우리측	21	62	16	-	99
북 측	-	76	13	11	100
계	21	138	29	11	199
비율(%)	10.6	69.3	14.6	5.5	100

<출신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기타	계
우리측	29	9	19	6	7	-	13	6	2	-	1	4	1	1	-	-	99
북측	-	-	-	-	-	13	25	5	16	4	8	3	11	12	3	-	100
계	29	9	19	6	7	13	38	11	18	4	9	7	12	13	3	-	199
비율(%)	14.6	4.5	9.5	3.0	3.5	6.5	19.1	5.5	9.0	2.0	4.5	3.5	6.0	6.5	1.5	0.0	100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우리측	65	34	99
북측	86	14	100
계	151	48	199
비율(%)	75.9	24.1	100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측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관광선 출항지인 속초 현지에 상봉 하루전에 집결하여 방북교육 등 사전준비를 하면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금강산 현지에 도착하여 단체상봉, 개별상봉 및 참관 등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단체상봉은 첫날 약 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개별상봉은 둘째날 북측 숙소인 금강산 여관에서 오전에 약 2시간 동안 가족·친척끼리 만났으며 오후에는 가족동행으로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첫날에는 금강산여관에서 상봉가족이 함께 만찬에 참석했으며, 둘째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공동오찬을 실시하였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일 정	· 2박3일(4.28~30, 5.1~3)
상봉 횟수	·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송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참 관	· 구룡연(우리측 99명) · 삼일포(북측 100명)
상봉 가족수	· 우리측 99명이 재북가족 183명 상봉(1인 평균 1.9명) · 북측 100명이 재남가족 466명 상봉(1인 평균 4.6명)
기 타	· 방북단에 남북자 가족 1명 포함

(3) 제5차 이산가족 상봉

2002년 8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와 함께 추석을 계기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과 북은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재남가족을 상봉하고, 이어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북가족을 상봉하는 순차교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8월 19일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의 원칙 아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300명을 컴퓨터로 공개 추첨하였다. 이들 중 사망자나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북측에 생사·주소확인을 의뢰할 200명을 확정하고 8월 24일 남북간에 그 명단을 교환하였으며, 9월 5일에는 최종방문단 100명을 선정하여 북측과 명단을 교환하였다.

한편, 우리측 최종방문자 중 4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함에 따라 3명은 교체하고 1명은 교체대상자가 없어 99명만이 재북가족을 상봉하게 되었다. 제5차 상봉행사는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진

행된 제4차 상봉행사의 세부적인 사항만을 보완하여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방문단 구성을 연령·가족관계·출신지·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99~90세	89~80세	79~70세	69~60세	계
우리측	6	33	41	19	99
북측	-	3	56	41	100
계	6	36	97	60	199
비율(%)	3.0	18.1	48.7	30.2	100

<가족관계별 현황>

(단위 : 명)

가족관계	3촌이상	형제자매	처·자식	부모	계
우리측	15	46	37	1	99
북측	16	79	5	-	100
계	31	125	42	1	199
비율(%)	15.6	62.8	21.1	0.5	100

<출신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기타	계
우리측	32	11	17	3	13	1	4	9	1	3	2	-	3	-	-	-	99
북측	-	-	-	-	-	7	21	10	13	6	5	10	12	14	1	1	100
계	32	11	17	3	13	8	25	19	14	9	7	10	15	14	1	1	199
비율(%)	16.1	5.5	8.5	1.5	6.5	4.0	12.6	9.5	7.0	4.5	3.5	5.0	7.5	7.0	0.5	0.5	100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우리측	69	30	99
북 측	85	15	100
계	154	45	199
비 율(%)	77.4	22.6	100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주요내용>

구분	내용
일 정	· 2박3일(9.13~15, 16~18)
상봉 횟수	·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송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참 관	· 삼일포
상봉 가족수	· 북측 100명이 재남가족 455명 상봉(1인 평균 4.5명) · 남측 99명이 재북가족 221명 상봉(1인 평균 2.2명)
기 타	· 방북단에 남북자 가족 1명, 국군포로가족 1명 포함

나. 생사 · 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함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 · 주소 확인과 서신교환도 이루어졌다.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생사확인 은 2000년 9월과 10월에 각 100명씩 2회, 서신교환은 11월중에 생사 · 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생사 · 주소확인 은 2001년 1월과 2월에 실시하고, 서신교환은

3월에 하기로 일정을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생사·주소 확인이 2001년 1월 29일에 이루어져 1,199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하였으며, 제2차 생사·주소 확인이 2001년 2월 23일에 이루어져 1,068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하였다. 3월 15일에는 남북 각 300명을 대상으로 편지와 함께 1~2매의 가족사진을 동봉한 서신을 교환하였다.

이와 함께 1~5차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생사·주소 확인은 총 9,581명(생존 5,701명, 사망 3,880명)이 이루어졌고, 서신교환은 71건의 재북가족의 서신이 수신되었다.

2.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가. 제3국을 통한 교류 지원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1988년 「7·7선언」 이후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2000년 3월 2일 당국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촉진해 나가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이산가족 1세대 전체로 확대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류경비 지원도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8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교류지속경비 4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경비지원 회수도 종전의 1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되었다. 지난 5년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생사확인	41	1,720	89	4,030	119	7,490	83	7,645	67	7,138	399	28,023
상 봉	55	5,024	142	12,240	91	15,740	120	24,000	152	33,440	560	90,444
교류지속					104	4,655	76	3,260	68	3,410	248	11,325
합 계	96	6,744	231	16,270	314	27,885	279	34,905	287	43,988	1,207	129,792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 따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6,648건으로 이중 28%인 4,672명이 제3국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974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방북상봉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2년에도 5건의 방북상봉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총 20건이 성사되었다. 2002년 한해 동안에는 생사확인 198건, 서신교환 935건, 제3국상봉 203건, 방북상봉 5건이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주로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 국내 민간주선단체, 언론매체, 동향인 등의 주선을 통해 성사되고 있다.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접촉방법별 성사 현황>

(1989.6.12 ~ 2002.12.31)

구 분		해외동포	주선단체	언론매체	동향인 등	무기재	계
생사확인 (건)	2002년	109	45	0	43	1	198
	1989~2002	1,792	495	126	152	160	2,725
비 율(%)	2002년	55.1	22.7	0	21.7	0.5	100
	1989~2002	65.8	18.1	4.6	5.6	5.9	100
제3국상봉 (건)	2002년	138	37	0	28	0	203
	1989~2002	718	134	24	88	10	974
비 율(%)	2002년	68.0	18.2	0	13.8	0	100
	1989~2002	73.7	13.8	2.5	9.0	1.0	100

<중개지역별 성사 현황>

(1989.6.12 ~ 2002.12.31)

구 분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기타	무기재	계
생사확인 (건)	2002년	191	3	2	2	0	0	198
	1989~2002	1,939	381	125	61	62	157	2,725
비 율(%)	2002년	96.5	1.5	1.0	1.0	0	0	100
	1989~2002	71.2	13.9	4.6	2.2	2.3	5.8	100
제3국상봉 (건)	2002년	203	-	-	-	-	-	203
	1989~2002	950	-	18	-	6	-	974
비 율(%)	2002년	100	0	0	0	0	0	100
	1989~2002	97.5	0	1.9	0	0.6	0	100

한편, 교류가 성사된 재북가족의 거주지역을 보면 함경도가 1,834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산가족 교류 지역으로 주로 활용되는 중국 옌지지방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출신지별 성사 현황>

(1989.6.12 ~ 2002.12.31)

구 분	함경	평안	황해	양강	자강	강원	평양	개성	남포	기타	계
생사확인(건)	1,276	592	332	77	34	54	177	38	37	108	2,725
비율(%)	47	22	12	3	1	2	7	1	1	4	100
상봉(건)	558	136	70	66	8	15	40	3	13	85	994
비율(%)	56	14	7	7	1	2	4	-	1	8	100

이와 같은 제3국을 통한 교류는 이산가족들이 해외에 연고가 있고, 상당한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류당사자들의 신변안전 등의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비교적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부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 또는 단체들에게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말 현재 10여개의 이산가족 교류주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나. 이산가족 행정서비스 개선

1998년 12월부터 정부는 이산가족자료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인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료는 이산가족상봉 후보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1999년 6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신청접수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며, 이후 서비스 개선과 자료 내실화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2002년에는 등록자료 정리작업과 함께 신청서 미기재자 및 사망확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변경·재신청 안내를 통해 전반적인 신청자료 정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6.25전쟁 납북자 관련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특수 이산가족자료를 체계화하

였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령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메뉴를 재구성하고, 이산가족찾기신청을 음성안내 모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납북자명부 열람 등 이산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산가족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개선작업도 추진하여 데이터 관리 및 교류후보자 선정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도록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홈페이지 개편은 2003년 3월중 완료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3. 납북자 ·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2002년 12월 현재 휴전이후 납북된 자 중 미귀환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6.25전쟁기간중 납북자는 당시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여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기간중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 등록에는 7,034명이 등록을 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6.25참전 행방불명자(실종자)를 19,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2002년말 현재 국군포로 496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대북 설득 노력 등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다만, 북측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산가족교류에 포함하여 생사확인 · 상봉을 추진

하는 현실적 접근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도 제5차 이산가족상봉시 2명이 상봉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7명의 납북자·국군포로가족이 가족상봉을 하였다.

특히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02.9.6~8)에서는 전쟁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하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납북자 관련 자료정비 및 관련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측과의 협상을 통해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납북자 현황>

○ 6.25전쟁 기간 : 82,959명(대한민국 통계연감 '52년판),
84,532명('53년판)

※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실향사민 재등록('56.6.15-8.15)시 등록인원은 7,034명

○ 휴전 이후

구 분	계	어 부	KAL기	I-2정	해경 863합	기 타	
						국내	해외
납북자	3,790	3,692	51	20	2	5	20
미귀환자	486	435	12	20	2	5	12

* 위 통계는 제3국을 통한 미확인 납북자는 불포함, 사망 확인자는 포함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인도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과 경제악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동포애적·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함께 남북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북한당국과 주민 모두를 시야에 넣고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을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와 함께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돕는 차원에서 비료지원 등 농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의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전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식량지원과 농업생산성 향상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의료분야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UN기구 등을 통한 대북지원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지원은 정부차원과 상호 보완구도하에서 자율적인 추진을 권장하되, 농업분야, 보건의료분야, 취약계층

지원 등 전문분야별로 특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가. 긴급구호 지원

(1) 1995년-1997년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매년 100만~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소련 및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권의 지원 축소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북한의 경제와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북한은 1995년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때부터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1995년 5월 26일 통일원장관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 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쌀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베이징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 회담의 합의내용에 따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였다.

북한의 유엔기구에 대한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정부도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하였다. 1996년에는 WFP를 통해 혼합곡물을, UNICEF에는 분유,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해서도 기상자재를 지원하였으며, 1997년에는 WFP, UNICEF, 기타 UN기구 등을 통해 총 2,667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였다.

(2) 1998년-2001년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대북 정책 추진방향의 하나로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 농업개발협력 및 경험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이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IMF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기구의 대북지원 계획 참여 요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결정하고 1998년에는 WFP를 통해 총 1,100만달러 상당의 옥수수 3만톤과 밀가루 1만톤을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1년 북한지역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해 46만달러 상당의 방역·보건의료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WFP를 통해서도 외국산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였다.

옥수수 10만톤은 북한의 대규모 식량차관 요청을 계기로 진행된 50만톤 식량차관 제공과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중국산 옥수수를 2001년 3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6항차에 걸쳐 북측 항구에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옥수수 포대에 한글로 우리가 지원하는 물자임을 표기함으로써 우리의 식량지원 사실을 북한주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옥수수 지원경비는 구입·수송비와 포대구입 등 부대경비 및 WFP 행정비 등을 포함하여 총 223억원이 소요되었다.

(3) 2002년

WFP를 통한 식량지원은 2002년에도 계속되었는 바, 2월 28일 제1항차를 시작으로 하여 총 5항차에 걸쳐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였다. 이 지원시에도 옥수수 포대에는 우리의 지원물자임을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지원경비는 총 234억원이 소요되었다.

한편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남북 접경지역의 말라리아 발병확산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말라리아 방역지원이 효과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2001년도에 59만달러 상당의 말라리아 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4월 3일과 5월 1일 2항차에 걸쳐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후 WHO는 방북보고서 및 말라리아 방제사업 결과보고서를 통해 2001년도의 말라리아 발병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나. 농업복구-비료지원

(1) 1999년-2001년

정부는 1999년 1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긴급 구호성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비료·종자·농약지원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은 물론 지원의 효과성·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그간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비료 15.5만톤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여기에는 남북협력기금 339억원과 대한적십자사의 국민모금액 123억원 등 총 462억여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등을 고려하여 2000년 5월 6일 비료 20만톤을 북한에 지원키로 결정하고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8항차의 수

송을 통해 영농기에 맞추어 지원을 완료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미 지원한 밑거름용 비료 20만톤의 식량증산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웃거름용 비료 10만톤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비료 30만톤 지원에는 구매·수송비·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944억원이 소요되었다.

2001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4월 3일 특별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농개시를 위해 시급히 요소비료 35만톤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북한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요소비료 20만톤의 조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6일 북측의 시비적기에 맞추어 비료 20만톤의 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5월 1일부터 6월 9일에 걸쳐 이를 전달하였다. 지원규모는 북측의 비료부족량 및 우리의 지원규모와 지원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복합비료 11만톤, 요소비료 8만톤, 유안비료 1만톤으로 결정하였다. 비료 20만톤 지원경비는 총 638억원이 소요되었다.

(2)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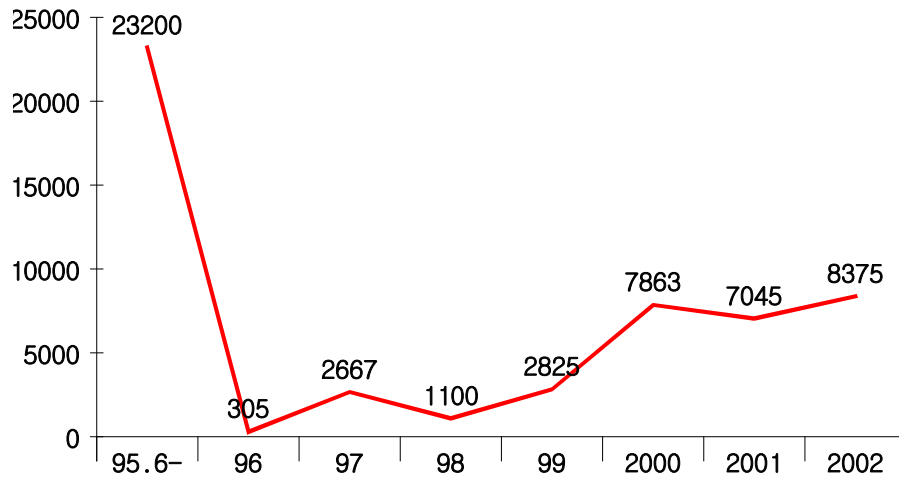
북측은 2002년 4월 우리의 대통령 특사 방북시 그간의 식량·비료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02년에도 비료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통해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에도 비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복합비료 12만톤, 요소비료 7만톤, 유안비료 1만톤 등 총 20만톤의 비료를 4월 25일부터 6월초까지 24항차에 걸쳐 북한에 전달하였으며, 총 564억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2002년 8월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외에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

톤과 비료 10만톤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공할 것을 합의하였다. 비료는 추가지원임을 고려하여 복합비료 및 이삭비료를 중심으로 하되 부족량은 요소비료로 충당하였다. 10만톤 추가 지원은 9월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항차에 걸쳐 전달하였으며, 총 268억이 소요되었다.

<정부차원 대복지원 추이>

(단위: 만달러)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2002.12.31 현재)

기 간	지원 규모	비 고
1995년	2억3,200만달러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1996년	305만달러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원(1\$당 790원 적용)
1997년	2,667만달러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원(1\$당 900원 적용)
1998년	1,100만달러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원(1\$당 1,400원 적용)
1999년	2,825만달러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 339억원(1\$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당국간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462억원
2000년	7,863만달러	- 비료 30만톤 직접지원 * 944억원(1\$당 1,200원 적용)
2001년	7,045만달러 (913억원)	- 내의 150만벌 직접지원(353만달러/46억원) - 비료 20만톤 직접지원(4,921만달러/638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25만달러/223억원) - WHO를 통해 말라리아방제 지원(46억원/6억원) * (1\$당 1,296원 적용)
2002년	8,375만달러 (1,075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39만달러/234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59만달러/8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6,577만달러/832억원)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가.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기반 조성

1995년 정부차원의 쌀 15만톤 제공이후 사회·종교단체들이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돕기 위해 민간차원에서도 대북지원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동년 9월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였다. 다만, 대북지원이 초기단계임을 감안, 전문구호기관을 통해 질서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였다.

정부는 1997년 3월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의 대북지원 참여와 외국산 쌀 지원을 허용하는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확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2차례에 걸친 대표접촉을 통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연맹(IFRC)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고 남북관계 구도하에서 민간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 합의서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는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시켰다.

1997년 7월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는 1차 지원에 이은 2차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동년 7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어 1998년 3월 베이징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통하여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3.27)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남북합의에 의하여 남북적십자간 인도지원 물자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는 그간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는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되어 있던 대북지원 창구를 대북지원단체로 다원화하였다. 창구 다원화 조치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개별 민간단체들이 직접 북한 해당단체들과 지원대상, 지역, 물품 등을 협의하여 지원하고 그 분배결과까지 확인토록 한 것이다.

2000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일부 고시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힘입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나. 대북지원 체계의 변화와 발전

초기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전달된 496만달러(39억 7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그후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제1차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북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남북간 직접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1997년 6월부터 7월 말까지 76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북한의 신의주·만포·남양과 남포항·홍남항을 통해 전달했다. 이어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 말까지 81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북한에 직

접 지원하였다.

1997년 6월 대한적십자사간 합의에 의해 구호물품이 지원되기 시작한 이래로 1998년 12월 3차합의 추가지원분까지 총 433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전달되었다.

특히,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기탁한 한우 1,001두가 1999년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최초로 관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

1999년에는 20여개 단체가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157억원 상당을, 이밖에 10개 독자창구로 지정된 단체가 67억원 상당의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후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2000년 113억원, 2001년 286억원, 2002년 90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한편, 민간단체 독자창구를 통해 2000년 308억원, 2001년 558억원, 2002년 551억원 상당을 지원하여 민간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신장되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2,601억원으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1.5%),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78억원(41.5%), 독자창구를 통해 1,483억원(57.0%)을 각각 지원하였다.

다.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활성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어려운 처지의 북한주민들을 돕고 나아가 남북주민간 접촉의 확대와 화해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활성화 조치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대북지원이 정부지원과 상호 보완 구도하에서 지원효과를 제고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

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의 구호물자 분배 확인 및 대북지원 협의를 위한 방북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북지원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단체행사 등에 언론사의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다.

1999년에는 민간단체 명의의 직접 지원과 소량·적기 지원이 가능하여 북한 농업개발 지원 등 대북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주요내용>

- 1998. 3.18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언론사/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성 모금행사 지원
 - 1998. 9.18 :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시범적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물품구입·운송·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
 - 1999. 2.10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
 - 기타 단체 및 개인은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지원
 - 1999.10.21 :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 발표
 -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마련
- *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통일부고시, 1999.10.27 제정, 2001.2.10 개정)

민간단체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의 시행으로 1999년 12월말까

지 「굿네이버스」 등 10개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2년에는 민간단체 독자창구가 25개로 증가하고, 지원 규모도 55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원분야도 단체별로 세분화·전문화되고 분배 투명성 확보에서도 진전을 가져오는 등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1999년 10월 21일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 7개 단체(7개 사업) 33.8억원, 2001년 12개 단체 (15개 사업) 38.4억원, 2002년 14개 단체 (18개 사업) 52.4억원 등 3년간에 걸쳐 총 124.6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사업별로는 급식지원, 농업개발,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기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000년 이후 민간차원 지원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 보건의료복구 등 장기적 차원에서 개발지원 사업으로 질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2002년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농기계수리공장 건립 및 축산, 「월드비전」의 씨감자 개량 및 온실재배,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의 연어 부화장 건립,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종자개량 등 전문화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국제라이온스협회와 한국라이온스협회가 공

동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650만달러 규모의 평양안과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국내 비정부기구(NGO)와 국제NGO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협력사업이다.

대북지원물자 분배에 있어서도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 민간단체가 지정한 구호물자 분배지역과 단체는 1차 지원의 경우 북한의 9개 시·도 및 4개 단체, 2차·3차 지원 시에는 15개 시·도 및 13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분배확인을 위한 방북지역도 점차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방북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를 시작으로 민간단체 기증자의 현장확인 형식의 대규모 방북이 이루어지는 등 민간단체 방북인원이 1,873명에 이르는 등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간 인적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단체 주요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단체(지원사업)
보건의료	전염병 퇴치	결핵치료·간염예방(유진벨), 결핵예방(대한결핵협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병원 현대화	평양안과병원 건립(굿네이버스/라이온스협회), 아동병원 현대화(굿네이버스/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심장병센터 건립(한민족복지재단)
	기타	구충사업(한국건강관리협회/남북어린이어깨동무/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영양관리 지원(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남북어린이어깨동무), 제약생산시설 복구지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농업복구	농기계 지원	수리공장 건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운기·파종기 등 각종 농기계 지원(경기도/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축산·양계	젖소·젖염소 목장(굿네이버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닭목장(굿네이버스), 산란 종계장(새마을운동중앙회)
	종자개량	씨감자(「농발협」/월드비전), 옥수수(국제옥수수재단)
	기타	솔잎혹파리방제(강원도), 묘목지원(평화의숲), 연어자원보호·증식(강원도), 채소재배온실 지원(월드비전)
일반구호	일반구호	육아원 등 아동시설 급식 지원을 위한 국수·제빵·영양식 공장 운영(남북나눔/한국JTS/한마음한몸운동본부/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단위 : 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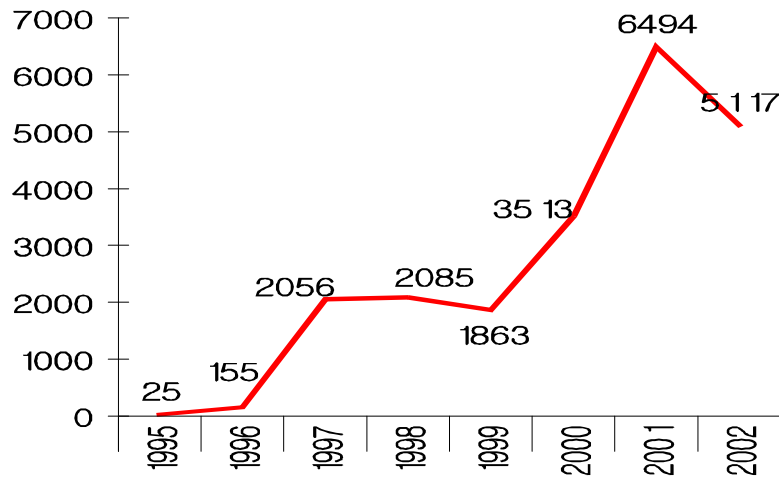


그림 10

<민간차원 대복지원 내역>

(2002.12.31 현재)

기 간	규 모	내 역
1995.11~ 1997.5 (국제적십자 연맹 경유)	496만달러 (39.7억원)	- 밀가루 3,664톤, 분유 94톤, 담요 1만개, 식용유 18.6만ℓ, 라면 10만개, 양말 35,000켤레, 감자 1,900톤, 무종자 4.8톤, 배추종자 6.4톤, 옥수수 4,980톤 * 1\$당 800원 환율 적용
1997.6~ 1997.7 (대한적십자사 1차지원)	850만달러 (75.7억원)	- 옥수수 41,511톤, 밀가루 2천톤, 라면 15만상자, 비료 2천톤(옥수수기준 53,841톤) * 1\$당 890원 환율 적용
1997.8~ 1997.10 (2차지원)	890만달러 (81억원)	- 옥수수 17,100톤, 수수 14,576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ℓ, 감자 1,300톤, 이유식 96.74톤, 분유 100톤, 어린이영양제 3만병(옥수수기준 52,888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1998.3 (2차추가지원)	17만달러 (2.8억원)	- 비료 800톤(옥수수기준 1,261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1998.4~ 1998.6 (3차지원)	935만달러 (130.9억원)	- 옥수수 16,585톤(정주영 10,495톤 포함), 밀가루 13,500톤, 식용유 26만ℓ, 분유 111톤, 비료 2,500톤, 소금 1,000톤, 쌀 57톤, 씨감자 5톤, 양말 26,000켤레, 한우 500두(정주영), 비닐 3.4톤, 초콜렛 14톤, 의약품, 앰블란스 1대(옥수수 기준 54,544톤) * 1\$당 1,400원 환율 적용

기 간	규 모	내 역
1998.9~ 1998.12 (3차추가지원)	1,133만달러 (141.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영 : 옥수수 39,509톤(95억원,톤당 24만원), 한우 501두(사료 85톤, 물통 205개 포함 10억 9,400만원) - 민간단체 개별지원: 옥수수 4,010톤, 밀가루 2천톤, 백미 60톤, 분유 128톤, 설탕 34톤, 식용유 356,700ℓ, 젓소 200두, 사료 46톤, 비닐 50.8톤, 유리 984장, 의류 45,904매, X-Ray차 1대, 의약품 등 (15개 단체, 35억 6,800만원) <p>* 1\$당 1,250원 환율 적용</p>
1999년도	1,863만달러 (223.6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 비료지원(3차 추가지원 3.30~6.5) : 4만톤 123억 3,300만원 -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24개 단체 33억 7,36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3,139톤, 옥수수 4,015톤, 분유 42톤, 설탕 165톤, 씨감자 180톤, 식용유 15,845ℓ, 라면 9,930상자, 의류 215,448점, 의약품 등 - 독자창구(2.10~) : 10개 단체 66억 5,25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1,051톤, 옥수수 4,000톤, 비료 1,484톤, 농기구, 젓염소 450두, 의약품, 의료기기, 의류 등 <p>* 1\$당 1,200원 환율 적용</p>

기 간	규 모	내 역
2000년도	3,513만달러 (4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16개 단체 113억 2,992만원 · 쌀떡 20톤, 감귤, 의료장비 11종, 기초의약품 59종, 밀가루, 비료, 농약, 비료생산컨테이너, 구충제, 건빵, 한우 500두, 장난감, 분무기, 옷감, 의류, 이불,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 독자창구 : 13개 단체 307억 3,871만원 · 한국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 월드비전, 한국JTS, 천주교 민화위, 북한동포후원연합회(남북나눔), 유진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1년도	6,494만달러 (84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18차) : 286억원 · 배 3,150톤, 사과 4,000톤, 감자 5,000톤, 못자리용 비닐 552톤, 당근 2,000톤, 전지분유 23톤, 이유식 2톤, 항생제, 담요 759장, 내의 159만벌, 연어(치어) 55만마리, 구급차 10대, 포스팜 액제 등 - 독자창구 : 19개 단체 558억원 · 남북나눔, 유진벨, 월드비전, 한국JTS, 한국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옥수수재단, 불교종단협의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민족복지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새마을운동중앙회, 평화의 숲,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원불교 등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구충제(230만정) \$684,843(85,605만원상당)

기 간	규 모	내 역
2002년도	5,117만달러 (64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 : 90억원 · 동네의 118만벌, 라면 39만개, 여성용코드 52천벌, 액상조제분유 10만통, 인쇄용지 500톤, 문구세트, 운동화, 향균제, 거담제, 항결핵제, 이유식, 전지분유, 옷감, 농자재, 학용품세트, 이불 등 - 독자창구 : 25개 단체 551억원 · 한민족복지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 기독교북한동포돕기후원연합회(남북나눔),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한국JTS, 천주교민화위, 유진벨, 국제옥수수재단,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계	21,308만달러 (2,601억원)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이 외교관, 해외 무역상사원, 당간부, 노동자, 별목공 등의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고, 입국경로도 다양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하여 집단으로 탈북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탈북현상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 한·중수교 이후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유입과 이로 인한 북한체제 내외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국내입국 추이

가. 국내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50명을 상회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전년도 2배 정도인 1,141명이 입국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입국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2년 12월까지 총 3,13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이 중 2,886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입국 현황>

(2002.12.31 현재)

연도	'89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계
인원(명)	607	9	9	8	8	52	41	56	85	72	148	312	583	1,141	3,131

* 총입국 3,131명 : 국내거주 2,886명, 사망·이민 등 245명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 가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특정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입국경로가 중국주재 외교공관을 통한 입국, 국내외 연고가족의 도움, 국제 NGO의 지원 등으로 인해 다변화된 것도 입국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 2002년도 국내입국 유형별 현황 >

성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전체(명)	51	44	120	97	124	125	69	85	123	84	117	102	1,141
남(%)	23	19	54	43	59	64	27	50	59	31	38	49	45
여(%)	28	25	66	54	65	61	42	35	64	53	79	53	55

연령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인원(명)	55	155	332	368	130	61	40	1,141
비율(%)	4.8	13.6	29.2	32.3	11.3	5.3	3.5	100

출신지	함북	함남	평안	양강·자강	강원	황해	기타	계
인원(명)	757	121	95	51	26	39	52	1,141
비율(%)	66.3	10.6	8.3	4.5	2.3	3.4	4.6	100

직업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노동자 농장원	봉사분야	군인	기타	계
인원(명)	32	45	18	504	72	11	459	1,141
비율(%)	2.8	3.9	1.6	44.2	6.3	1.0	40.2	100

2002년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단위의 입국증가로 여성이 절반이상(55%)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분포면에서는 20~30대가 61.5%로 예년처럼 청년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신지역은 대부분 함경도(76.9%)이며, 출신계층은 노동자·농장원(44.2%)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 거주 및 정착실태

2002년 12월말 현재 시설보호중인 자를 제외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2,560명의 지역별 거주분포는 서울 50.4%, 경기·인천 19.2% 등 69.6%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 외의 거주지역은 경상 13.4%, 충청 8.2%, 전라 5.1% 등이다.

1996년-2000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별 분포는 교원, 간호사 등 전문기술직이 5.0%, 회사원, 연구원 등 관리사무직이 8.5%, 생산직 봉급생활자가 23.1%, 상업 등 자영업자가 5.4%, 학생·고령인구·주부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40.8%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00년도부터 취업보호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기반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 지역별 거주현황 >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명)	1,290	112	96	69	35	80	27	398	74
비율(%)	50.4	4.4	3.7	2.7	1.4	3.1	1.1	15.5	2.9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원(명)	56	75	75	59	50	44	20	2,560명	
비율(%)	2.2	2.9	2.9	2.3	2.0	1.7	0.8	100	

* 2002.12월 현재 하나원 등 시설보호중인 326명 제외

다. 해외체류 실태

해외체류 탈북자의 대부분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체류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체류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월경자 둘째, 재중동포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체류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탈북자의 규모는 탈북·체류 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는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재중동포가 집단 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불안감 등으로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은신·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 식량 등을 구할 목적으로 밀입국한 일시적인 불법체류자로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 처리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체류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상호이해를 통해 이들의 보호·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과 국제적십자사(ICRC)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유엔인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2. 정착지원 추진

가. 정착지원 체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이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하에서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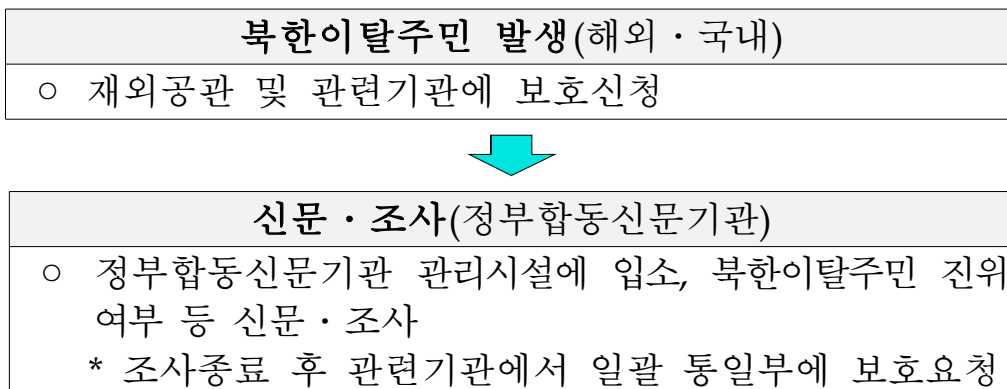
둘째,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해외체류 탈북자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국 실정에 부합하는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한다.

셋째,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넷째,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초기 입국지원 단계】



【보호지원 단계】

보호결정(통일부)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여부를 결정



사회적응교육(통일부)
○ 통일부 관할 하나원에 입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각종 사회적응교육 실시(2개월)



【거주지편입지원 단계】

사회편입(통일부 · 지자체 · 경찰청 · 노동부)
○ 자립 · 자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 거주지보호, 신변보호, 취업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초기 입국지원, 보호지원, 거주지 편입지원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먼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본인의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 현지 공관 등이 임시보호조치와 함께 국내입국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신문을 받은 후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응교육,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자립 지원을 받게 된다.

거주지편입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사후관리와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사후관리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종교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학교편입·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신변보호는 국내 거주기간과 신변위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특별·일반보호로 구분하여 관계부처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의회는 긴급 현안문제 발생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 아래에 실무협의회를 두어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유관부처간 상호협조와 사전 의견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나. 시설내 보호·지원

1994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12월 30일 부지 18,147평, 연건평 2,214평,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시설 건립에 착공하여 약 1년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준공·개소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국내입국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2000년 7월 하나원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증축공사 완료시까지의 수용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9월말부터 성남의 민간 연수시설을 임차, 하나원 분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3년도에 하나원 증축이 완료되면, 연간 북한이탈주민 1,500-2,000여명의 보호·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원에서는 2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집중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중점은 일차적으로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정서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과 사회편입후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사회진출 후 학교 및 가정생활에 바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원내 대안학교 성격인 「하나둘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하나원 주요 시설 현황 >

시설명	규모	시설내역
교육관	약 1,235평	○ 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고충상담실, 자료실 등 교육생의 사회적응교육 공간
생활관	약 701평	○ 1인실, 2인실, 4인실, 별실, 특실, 가족실 등 교육생 생활공간
봉사관	약 241평	○ 숙소, 내무반, 정비실 등 시설관리 지원공간

< 하나원 교육내용 >

1. 정서·심리적 불안정 상태 해소

- 탈북·제3국 은신·도피생활중 어려움 및 입국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상태 불안
- 인성·적성검사를 통한 개별심리상태 파악 및 심리안정·순화프로그램 운영

2. 문화적 이질감 해소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상존
-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론교육·현장학습 등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 실시

3. 사회편입후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지도 강화

-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기간 동안 진로지도 필요
- 전산·운전·요리·봉제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능 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점 편성·운영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원 운영에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연령·학력·출신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의 참여 없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에서는 정규프로그램과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일 현장체험, 지방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도 종교·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준공된 이후 총 1,815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후 사회에 진출하였으며, 2002년 12월말 현재 22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원 교육생 수료 현황>

(단위 : 명)

연 도	'99	'00	'01	'02	합 계
입 소	61	297	572	1,111	2,041
수 료	60	297	572	886	1,815

* 2002년 입국자중 225명은 현재 교육과정 진행중

다. 초기 자립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인에서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인에서 8인까지 구분하여 각 세대별 평형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알선해주고 있는데,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사회편입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생업문제이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보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종교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해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알선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의 참여율을 높이고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교통비·식비·가계보조수당 등의 직업훈련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2분의 1을 70만원의 범위내에서 2년간 지원해주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학력·자격인정 및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며, 대학은 국·공립의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사립은 정부와 학교가 각각 반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진출후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병 치료시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도록 적극 주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종교단체 등을 통해 각종 생활상담·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앙·지방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1999년 8월 1일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법·제도개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요청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1998년 이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초기정착금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1999년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자립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취업보호제의 실시, 노령연금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지원제도의

도입,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활성화 등이다.

또한 2002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착금 감액 근거와 해외 여행시 신변보호 근거를 신설하였다. 정착금 감액은 물의야기 및 일탈행위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및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하였다. 이 내용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실시된다.

민간차원에서도 각종 후원·결연단체를 네트워크화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1999년 창립되었으며, 민간단체의 전문분야별로 적응지원 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아동·청소년, 연구, 정착지원, 지역복지, 해외 등 총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상호정보교류를 위해 심포지움·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성있는 민간단체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2001년부터 조직되어 현재 서울 5개 지역(강남, 강서, 양천, 노원, 송파)과 지방 6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사회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의회의 역할은 국내 입국자들이 증가하는 현 추세와 점차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이러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은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는 지방·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4절 북한인권 · 환경문제 개선 추진

1. 북한인권문제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여 인권의 개념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로 정의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개인을 단지 전체조직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민'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할 뿐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일사상 지배체제로 인해 주민들의 시민적 · 정치적 자유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도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근본적 원인은 북한정치체제의 특성과 통상적 인권개념과 다른 북한식 인권개념에서 비롯되고 있다. 매년 국제사회에 발표되고 있는 각종 인권보고서와 관련 인사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침해받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2년에도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와 개별국가, 비정부기구(NGO) 등에 의해 북한인권문제가 활발히 제기되었다. 4월 8일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정기총회의 의제 제9항('세계 각국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문제')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EU · 미국 · 캐나다 대표와 미국의 인권단체인 Freedom House 등이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들은 북한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 대표는 이산가족의 고통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 인권적인 문제임을 언급하고,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기아상황과 경제적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또한 2002년도에는 EU, 미국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EU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5차 EU-북한 정치대화에서 북한인권문제를 5년 연속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미국 국무성은 3월 5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한 점(2001.2,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가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0월 7일 발표된 미국 국무성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2'는 여전히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목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편으로 남북한 종교계의 교류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교류가 남북화해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 의회에서는 4월 17일 하원 '인권협의회' 주최로 북한인권 브리핑이 있었으며, 5월 2일에는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주최로 북한인권 청문회를, 6월 21일에는 상원 법사위 주최로 탈북자문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0월 17일과 18일에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 북한난민 구호법안이 상정되었다.

NGO 차원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AI : Amnesty International)가 3월 28일 중국의 탈북자 단속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망명절차 허용과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하였다. 또한 5월 28일에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의 만성적 식량부족 사태와 인권 및 종교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시민운동단체인 국경없는인권회(HRWF)는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의 실상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월 24일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4월 17일에는 북한보고서를, 그리고 5월 6일에는 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 난민위원회(USCR)는 6월 7일 세계난민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재중 탈북자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Human Rights Watch는 11월 18일 중국체류 탈북자의 인권실태를 다룬

“보이지 않는 탈출 : 중국의 북한주민들”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Freedom House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2001년과 마찬가지로 자유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의 인권 NGO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북한인권시민연합」 및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약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의 단체도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제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일반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 ‘북한인권아카데미’를 개설한 바 있으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회에 걸쳐 ‘탈북자인권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인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북한 인권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월간지, 소식지, 계간지 등을 발간하여 국내 및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자기식 인권개념 주장 등으로 반박하면서도 최근 들어 다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2002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여성차별 철폐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편,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스웨덴에서 열린 인권교육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였으며,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된 인권규약 이행실무 연수에도 대표단을 참가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북한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현실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실태 파

악과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6월 10일 통일부에 「북한인권·환경팀」을 신설하여 관련업무의 전문화·체계화를 도모해오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설립된 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와 협조하여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배포해 오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 및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종합·정리하여 1999년 7월에는 「북한인권보고서 편람」을 발간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 및 인권NGO와 상호보완관계를 통한 접근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선은 북한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북한주민의 먹고 살 권리, 기본적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 등 정보자료의 체계화 및 국내 NGO의 자료 발간 및 워크숍 개최 등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해 왔다.

2. 북한환경문제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지구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환경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당면하여서는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방치 또는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환경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생태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다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는 북한의 환경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환경문제는 북한당국의 환경의식 부재와 부적절한 개발정책, 환경개선 투자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석탄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다락밭 개간과 연료 채취에 따른 산림 황폐화, 광산·공장의 폐수와 해안간척이 초래한 수질오염 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최근 북한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남북관계의 여건상 현 단계에서는 주로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0월에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TumenNET)의 전략행동계획(SAP)을 우리측 주관하에 확정지음으로써 2003년부터 두만강유역의 생물 다양성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2002년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북한의 무산철광 인근지역(북한·중국 접경지대)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두만강지역 오염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도 인정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비무장지대가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오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 생태계조사 등 환경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차원에서는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양묘장 조성 등 남북협력사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금강산 지역 구룡연 일대 2,00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남대천변에 연어부화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의 숲」은 북한에 묘목과 산림기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중국 옌지에서 북한의 산림복구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북한의 강원도 고성군 일대의 조림사업을 추진중이며, 평양 인근지역에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12월 4-5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과 접촉하여 '남북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채택하였다. 이 추진안의 사업내용에는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 공동 환경조사사업, 자료교환과 인적교류 활성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보전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1년 8월에 구성된 민·관 합동의 북한환경문제 관련 토론의 장인 '남북환경포럼'은 정부와 민간간, 그리고 민간단체 상호간의 정보 교류, 활동방향 협의, 정책대안 발굴 등 남북환경교류협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5장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배경

제2절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1. 경수로사업 기반 조성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3. 본공사 및 북한인력 훈련
4. 자원조달
5. 통행·통신 등 사업지원체계 강화

제3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 배경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구 소련과 협력협정을 체결한 뒤 원자력 전문가들을 양성해 왔다. 1984년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구 소련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소련은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게 핵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가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으나, 의무사항인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안전조치협정의 체결은 거부해 오다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뒤인 1992년 1월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같은해 5월에 보유중인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였다.

IAEA가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쳐 실시한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주장한 방사화학실험실이 사실상 재처리시설이며,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의 추정치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나타났고, 미신고시설 2곳은 재처리한 핵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찰 결과에 따라 IAEA 이사회는 1993년 2월 북한의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93년 3월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요구하고, 모든 UN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함에 따라, 핵비확산체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북한과 두차례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NPT 탈퇴유보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해 IAEA와의 협의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IAEA 사찰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한반도 정세가 점

차 급박해 지고 있는 가운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하였으며, 이때 김일성은 미·북 회담 개최시 핵연료봉 재처리를 유보하고, 핵안전조치의 유지 및 경수로 도입시 흑연감속로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북 회담을 통해 북한이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핵관련 시설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총 발전량 2,000MWe의 경수로 발전소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이 1994년 10월 21일 서명·발효되었다.

<제네바 기본합의문 요지>

- ①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
 -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
 -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른 대체에너지(연간 중유 50만톤) 제공
 -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
- ②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 추구
 -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가는 조치 실시
 -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
 -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
- ③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
 -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을 공식 보장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조치 실시
 -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
- ④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
 - 북한은 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
 -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일반사찰 재개
 - 경수로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

제2절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1. 경수로사업 기반 조성

1994년 10월 미·북간의 제네바기본합의에 기초하여 시작된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설립되면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KEDO의 목적은 1,000MWe 용량의 한국표준형 원전 2기의 제공에 따른 재원조달과 공급, 1호기 완성시까지 대체에너지 제공, 기타 제네바기본합의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다.

1995년 12월 15일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고, 1997년 7월에 경수로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는 경수로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KEDO 집행이사국간의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우선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 정부가 KEDO에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부지준비공사는 경수로 건설부지를 정지하고, 숙소·사무실·식당·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도로·통신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경수로사업은 협상단계에서 시행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부지준비공사와 함께 KEDO는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 결의 협의와 한국전력공사와의 주계약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시 경수로건설의 본공사에 착수하려면 KEDO와 1996년 3월 주계약자로 선정된 한전간에 주계약(Turn-key Contract, TKC)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계약은 한전이 일괄도급방식으로 한국표준형 경수로발전소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규정하는 기본계약으로서, KEDO와 한전은 1997년 10월부터 15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방대한 주계약 조건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12월 15일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주계약의 발효조건인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이 1999년 12월 15일에, KEDO와 일본 국제협력은행간 용자계약은 2000년 1월 31일에 각각 체결됨에 따라 2000년 2월 3일 주계약이 발효되었다.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가. 경수로공급협정 및 후속의정서 체결

KEDO와 북한은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여 경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1996년 4월부터는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 「미지급 시 조치 의정서」, 「훈련 의정서」,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 등 8개 의정서가 체결·발효되었다.

2002년에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시 책임범위와 배상체계 등을 규정하게 될 「원자력손해배상 의정서」 협상이 5월, 7월, 9월, 10월 등 4차례 개최되었다. 이 의정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북한측에는 비교적 생소한 것이어서 KEDO측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의정서의 기본개념과 손해배상과 관련한 원칙 등에 대해 2000년 8월, 2001년 4월 등 2차례의 대북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재까지 협상을 통해 상당부분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제고했으나, 부지내 재산손해, 보험 및 국제협약 가입 등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KEDO와 북한간에는 경수로사업이 진전되는데 따라 「인도일정 및 조치 의정서」 등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에 필요한 나머지 의정서들도 협상을 통해 순차적으로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해 현재까지 체결·발효된 후속 의정서와 앞으로 건설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결해야 할 잔여 의정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근 거	비 고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KEDO의 법적 지위, KEDO 인원에 대한 신변보호 등	경수로공급협정 제4조 6, 7항	1996.7.11 발효
통 행	KEDO인원의 부지접근(자유로운 출입절차) 및 효율적 통행로 개설	경수로공급협정 제9조 3, 6항	"
통 신	부지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경수로공급협정 제9조 5, 6항	"
부 지	부지인수 및 부지접근·사용에 관련된 세부사항	경수로공급협정 제5조 3항	1997.1.8 발효
서비스	북한의 노무·물자·시설과 기타 서비스 공급조건	경수로공급협정 제9조 4, 6항	"
미지급시 조 치	상환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공급협정 제16조 3항	1997.6.24 발효
훈 련	경수로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	경수로공급협정 제7조 2항	2000.10.20 발효
품질보장 및 보증	경수로 품질 및 성능 보장	경수로공급협정 제6조 4항	2001.12.3 발효
원자력 손해배상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공급협정 제11조 2항	2회 설명회 2002년 4회 협상
인도일정 및 조치	북한의 핵동결 및 해체조치와 경수로 공급일정	경수로공급협정 제3조 3항	미협의
상환조건	경수로 건설대금의 상환금액 및 조건	경수로공급협정 제2조 4항	"
사용후 연료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공급협정 제8조 4항	"
핵 안전 및 규제	경수로 완공후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	경수로공급협정 제10조 5항	"

나. 현안 관련 실무협상 추진

KEDO는 이미 합의된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측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상을 수시로 개최해 왔다.

우선 KEDO·북한간에는 1998년 이후 연간 수차례의 고위전문가 회의를 통해 효율적·경제적 해로이용 문제, 북한 근로자 임금수준, KEDO 인원의 사기진작 방안 등 다양한 제반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2001년 이후 총 4회 개최된 고위전문가 회의시 노무인력, 독자위성통신망 설치, 소외전력 구성, 경수로 안전문제 등 사업추진을 위한 현안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2002년 5월 회의시 KEDO측에서는 경수로 건설일정표를 북한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측이 1999년 9월 고위전문가 회의에서 노무인력 임금을 이미 합의한 110불에서 600불로 인상을 요구한 이래, 노무인력 임금문제는 KEDO·북한간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임금문제 미타결을 이유로 북한측은 2000년 4월에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 200명중 100명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KEDO는 2001년부터 우즈베크 인력 600여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한편, 그동안 고위급회담(2회, 2001년 3월, 6월)과 카트만 KEDO 사무총장 방북시 협의(2001년 12월), 전문가회의(2회, 2002년 6월, 9월) 등을 통해 이견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쌍방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품질보증, 원자력안전, 북측 인력 훈련, 통행·통신 개선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실무전문가 협상을 개최하거나, 부지현장의 KEDO 금호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업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3. 본공사 및 북한인력 훈련

KEDO와 한전간 주계약이 발효됨에 따라 경수로건설 공사는 본공사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동안 진행해오던 부지정지공사는 2001년 8월에 완료하고 취수방파제와 항만시설인 물양장(物揚場) 등 대규모 토목공사도 2002년 상반기중 완공하였다. 그리고 경수로의 발전소 설계 및 건설기자재의 발주·제작도 공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KEDO측이 제출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01년 9월 1일 건설허가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2001년 9월 3일 착공하였다. 2002년에도 발전소 본관 1·2호기에 대한 기초굴착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8월 3일부터 1호기에 대한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고, 8월 7일에는 KEDO 집행이사국 및 북한측 대표와 세계의 주요언론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부지에서 최초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003년 1월말 현재 1·2호기 시공은 1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원자로 설계 48.5%, 각종 기자재 제작·구매 34.3% 등을 포함한 종합공정의 진척도는 약 28.3%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수로 건설공사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 두산중공업으로 이루어진 합동시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 1월말 현재 남측 인력 713명, 북측 인력 97명, 우즈벡 인력 583명 등 약 1,400명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또한 불도저,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차량 등 400여대의 장비가 공사에 투입되어 있다.

한편 2000년 12월 체결된 「훈련 의정서」에 따라 2001년 12월에 북한의 김희문 경수로대상사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원자력 분야 고위관계자 19명이 약 2주간에 걸쳐 국내 원전 관련시설 및 기관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였다. 2002년에는 북한측 원전 운영인력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여, 금호부지내에 완공된 금호 원자력교육원에서 2002년 6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4개월여간 북한인력 123명을 대상으로 이론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할 북한측 규제요원들에 대한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되어, 2002년 7월 2일부터 27일까지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25명의 북한측 기술진이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기초교육을 이수하였다. 금호부지내 건설현장에서는 합동검사, 사용전검사 등 품질보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도 병행되고 있다.

4. 재원조달

가. 재원분담결의

경수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비의 안정적인 조달이다. 이를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약속한 기여금액이 최대치(maximum)임을 명기함으로써 부족분 조달시의 추가적인 부담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EU는 1997년 9월 KEDO 가입당시 약속한 7,500만 유로를 이미 기여하고, 2001년 이후 매년 2,000만 유로를 추가로 기여하고 있다.

나. 재원조달 및 공사비 분담

경수로사업비에 대한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된 이후 정부는 경수로사업비 분담분에 대한 국내 재원조달방안 마련에 착수하였

다. 정부는 재원조달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형평성에 부합되는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형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납부금제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당초에는 1999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실패로 국회심의회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00년 5월 30일 제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와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전기요금 납부금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였다. 그러나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당분간 국채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재원조달방안은 향후 경제상황, 재정여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정부가 부담하는 공사비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3년 1월까지 국채발행 규모는 총 1조 2,597억원이다. 연도별 발행규모는 1999년 1,498억원, 2000년 2,549억원, 2001년 3,100억원, 2002년 5,050억원, 2003년 1월 400억원을 발행하였다.

한편, 2000년 2월 3일 주계약(TKC)이 발효되고, 본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경수로건설 공사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공사비로 2003년 1월까지 우리 정부는 7억 8,800만불, 일본은 3억 606만불, EU는 1,762만불을 부담하여 총 11억 1,168만불의 건설공사비를 주계약자인 한전에 지급하였다.

【건설공사비 국가별 부담현황('00.2~'03.1)】

(단위: 만달러)

국 가	한 국	일 본	E U	합 계
금 액	78,800	30,606	1,762	111,168

5. 통행·통신 등 사업지원체계 강화

우리 정부와 KEDO는 본공사 착수이후 공사물량이 증가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수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 근로자들이 북한 현지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수로 공사 이외에 숙소 등 생활기반시설과 후생관 등 각종 편의시설 공사를 병행하고 있다.

생활부지에는 근로자 숙소 및 식당·목욕탕·노래방·독서실 등 편의시설과 테니스장·운동장·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수영장·이발소·독서실 등을 갖춘 후생관도 추가로 건설하고, 교회·법당·성당 등 종교시설과 630여평 규모의 현대적 병원시설도 완공하였다.

또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름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속초-양화간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客貨船) 「대원카타마란호」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운행해 오다가, 2001년 9월부터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한겨레호」를 신규 제작하여 주 1회 정기운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는 경수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북간 직항공로 개설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02년 5월 북한 항공관계자의 국내 공항시설 답사 등을 거쳐 7월 20일 우리측 양양공항과 북한 함경남도 선덕공항간의 직항공로를 정식으로 개설하였다.

부지에서는 위성TV 수신장치를 통하여 국내외의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등 20여개 채널을 시청하고 있으며, 국내-부지간 16회선의 통신회선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국내 가족들과 자유롭게 통화하고 있다. 향후 설계자료 송수신, 화상회의 등 공정진척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용량의 통신수요를 소화하기 위

해 독자위성통신망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도 진행중이다.

한편,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남북한 근로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KEDO는 「KEDO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및 「무질서행위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질서유지활동을 위해 2000년 2월부터 「KEDO 질서유지대」를 파견하여 운영해 왔다. 2003년 1월말 현재 우리 인원 58명, 우즈베크인 4명 등 62명의 질서유지대원이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수로 현장에 근무하게 될 우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방북안내교육을 통해 「KEDO 행동규범」과 기타 북한 체류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방북전에 미리 알려 현장적응에 도움을 주는 한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 초기에 오랜 분단으로 인한 체제 및 이념의 차이, 상호이해 부족 등으로 다소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서로 협조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제3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북한의 핵문제는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를 토대로 북한의 핵 관련시설 동결과 KEDO의 중유공급, 경수로 건설 등 합의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됨으로써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2년 10월,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존재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사실을 2002년 10월 17일 공개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같은 날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하며 북한에 대해 남북 및 국제사회와 맺은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2002년 10월 25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측이 요구한 “핵 우선 폐기”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시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2년 10월 27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중 한·미·일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제네바 기본합의, NPT, IAEA 협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국제적 합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북한이 국제적 합의 준수 및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후 한·미·일은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한편, KEDO 차원에서는 2002년 11월 14일 한국, 미국, 일본,

EU 대표가 참석한 KEDO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와 함께, 북한의 KEDO 및 KEDO 집행이사국과의 향후 관계와 상호활동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거에 달려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성명에서 KEDO는 12월 이후의 중유 공급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단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아가면서 여타 KEDO 활동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KEDO의 중유제공 중단조치에 반발하여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핵시설 동결 해제 및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 동결되어 있던 각종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에 대한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12월 27일 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 및 IAEA사찰요원 추방을 결정한 이후 12월 31일 IAEA 사찰요원을 실제로 철수시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정부성명을 통해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 비확산 의무이행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로서 중국과 러시아도 2002년 12월 2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의 핵동결 원상복구 및 핵개발 계획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2003년 1월 6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적인 약속 위반으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1월,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평화적

인 북핵 문제 해결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 중국에도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대화 채널을 이용한 직접적인 대북 설득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대두 직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002년 10월 1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와의 단독면담시 핵문제의 해결을 직접 촉구하는 한편,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 2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도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협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2003년 1월27일에서 29일까지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측 고위인사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이의 해소를 위한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직접 설득하였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김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우리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조언에 대해 감사하며 검토후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도로 실무협의회 등 각종 대화 계기시 북한의 핵 우선 포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실

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 기반 조성

제1절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1. 여론조사 실시 및 다양한 여론수렴 활동
2. 자문기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3.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4. 인터넷 활용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5. 국제사회 및 재외동포 대상 홍보

제2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정립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2. 통일교육 실시
3. 학교통일교육 지원
4. 사회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자료 개발
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제3절 북한실태 분석 및 자료 제공

1. 북한실태·주요동향 분석 및 자료발간
2. 다양한 연구사업·행사 지원
3. 북한정보자료 개방 확대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 기반 조성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이 국민의 뜻과 의지이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북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부는 국회를 비롯하여 여야 각 당과 사전·사후 협조를 강화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왔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활용,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제1절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1. 여론조사 실시 및 다양한 여론수렴 활동

정부는 국민여론을 대북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폭넓은 여론수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각계 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여론조사의 실시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으며 2002년에도 대통령 특사방북,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등의 계기와 관련하여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도별 대북정책 지지도를 살펴보면 80.4%('98)→65.6%('99)→72.6%('00)→76.8%('01)→71.1%('02)로 나타났다. 계기별로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우리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평균 70% 수준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국민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다.

우선 국민여론을 나타내는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의 남북관계 관련 보도내용과 각종 기고문 등을 종합·정리하여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의내용 그리고 다양한 정책관련 자료 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등 주요사안 마다 국회 상임위, 당정 협의, 야당 인사 방문 등을 통해 정책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초당적 협력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통일관련 단체 인사, 전문가 및 학자, 각계 여론 주도층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통일고문회의, 정책자문회의, 통일정책평가회의 등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자문을 구하였다.

〈 2002년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

구분	조사범위	주요내용
1차 (4.8~9)	일반국민 1,500명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통령 특사 북한 방문과 관련한 가장 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36.5%) ○ 특사방북을 통한 남북관계의 복원 합의 이후 남북관계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전될 것이다(66.7%), 진전되지 못할 것이다(31.7%)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한다(73.5%), 지지하지 않는다(25.2%)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도로 연결(44.5%)
2차 (6.11~12)	일반국민 1,500명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한다(73.0%), 지지하지 않는다(20.9%)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의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59.3%) ○ 현재 남북문제 및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다(50.2%), 낮다(42.0%) ○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현정부 임기 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한 합의사항 이행 (31.4%)
3차 (8.17~18)	일반국민 1,500명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2~14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있다(44.1%) 성과 없다(29.9%)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동시착공(34.2%) ○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한다(71.1%), 지지하지 않는다(25.9%)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했다(52.0%), 못했다(44.7%)

2. 자문기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평화통일 의식 고취와 효율적인 통일정책 자문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정부는 1998년 11월 「통일고문회의규정」을 개정하여 통일고문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조영식 의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회의가 구성되었으며,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한 정책 자문·지역여론수렴활동 등 통일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2년의 활동실적은 고문회의 2회, 워크숍 1회, 대통령 오찬 간담회 2회 등이다.

〈 통일고문 명단 〉

성 명	직 책
조영식(의장)	경희학원 학원장
강만길	상지대 총장, 前 민화협 상임의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권오기	21세기평화재단 이사장, 前 통일부총리
김 근	연합뉴스 사장,
김수환	추기경
김종하	前 대한체육회장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3대 국회의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종화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경동교회 당회장
서병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안무혁	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오자복	미수복 경기도 중앙도민회장
오재식	월드비전 회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근범	동신대 총장
이기옥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이만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이병형	성우회 자문위원, 前 2군사령관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 前 국방부장관
이성립	한국예총 회장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前 문화부장관
이홍구	서울 국제포럼 이사장, 前 국무총리
장 상	전 이화여대 총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재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조완규	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
최영철	통일번영연구원 회장, 前 국회부의장

나. 통일정책평가회의

정부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운영해 왔다.

평가위원회는 2002년 말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매년 3월 새로 위촉한다.

2002년에는 평가회의 3회, 금강산 현지 세미나 1회, 워크숍 1회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효과적 수행에 기여했다.

〈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

위촉기간 : 2002.3.1~2003.2.28

성 명	직 책	성 명	직 책
백종천 (위원장)	세종연구소 소장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장공자	충북대 정외과 교수
김동성	중앙대 정외과 교수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도준호	명지대 초빙교수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 원장
박용옥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전인영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서병철	통일연구원 원장	조 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서진영	고려대 정외과 교수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다.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대북·통일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02년 말 현재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 지원, 남북회담, 통일교육 등 6개 분과위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매년 7월 새로 위촉한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02.7.1 ~ 2003.6.30

통일정책 분과위(10명)	북한정보 분과위(8명)	교류협력 분과위(8명)	인도지원 분과위(7명)	남북회담 분과위(8명)	통일교육 분과위(7명)
전득주 (숭실대)	이 호 (전 통일부 기획관리실장)	신지호 (삼성경제연구소)	윤영관 (서울대)	장달중 (서울대)	신정현 (경희대)
장명봉 (국민대)	유길재 (경남대)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이강열 (국민일보)	김용호 (인하대)	정현백 (성균관대)
권민웅 (경북대)	박영규 (통일연구원)	전현준 (통일연구원)	오혜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고유환 (동국대)	황대준 (성균관대)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현성일 (통일정책연구소)	김혜원 (코리아헤럴드)	안인해 (고려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정상돈 (세종연구소)
남찬순 (동아일보)	김주홍 (울산대)	백영옥 (명지대)	이원웅 (관동대)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고정식 (배제대)
유호열 (고려대)	이영미 (한국예술종합학교)	신현윤 (연세대)	고성준 (제주대)	김영수 (서강대)	이인숙 (세종대)
함인희 (이화여대)	윤덕희 (명지대)	조명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창현 (국민대)	박재민 (연세대)	오기성 (인천교대)
하용출 (서울대)	정은숙 (세종연구소)	지은희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송영선 (국방연구원)	
백학순 (세종연구소)					
이영애 (단국대)					

3.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양성과 민주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역할은

앞으로 크게 확대되어갈 것이다.

1980년대까지 통일운동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 등 몇몇 단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문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의 정책제언을 수렴하여 통일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특히 1998년 9월에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를 망라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발족하였다. 초기에는 민화협을 중심으로 한 남북공동행사 추진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최근 민화협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도의 민간통일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민간단체간 남북공동행사 개최로 특징지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6.15공동선언 발표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6.13~15, 금강산)과 서울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 및 예술단 116명이 참가한 '남북공동 미술전 및 사진전'(8.15민족통일대회, 8.14~17, 서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남북공동 행사들은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2002년 12월말 현재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 통일운동단체는 총 103개에 이른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홍보·교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허가법인은 활동 목적에 따라 통일활동 전반(42개 단체), 연구(25개 단체), 교류·협력(17개 단체), 인도지원(18개 단체), 교육(1개 단체)으로 구분된다. 2002년도 신규 허가단체는 8개이다.

〈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 〉

2002.12.31 현재 총 103개 단체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민족통일협의회	한양수	대한민국팔각회	장종수
민족문화통일회	최창순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김형주
평화문제연구소	현경대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이무용
민주통일촉진회	이현우	한국미래연구학회	신윤표
한민족세계선교원	조준상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김금중
통일기념사업회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우강호
21세기통일준비운동본부	허태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돈명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김규병	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이수성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고정명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김재천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민족통일불교협의회	김태완	세계평화여성연합	정대화
민족통일에스리운동협의회	조동진	통일맞이	이재정
한민족통일촉진협회	권희준	평화통일복지협의회	김태유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김학옥	평화통일꾼육성국민중흥회	유재진
21세기통일봉사단	홍일화	민족통일연합중앙회	안광양
통일건국민족회	권천문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김덕창
국민정신중흥회	이명규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박영록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박태남	민족통일촉진회	정형진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유종관	북한연구소	김창순
평화연구원	김창규	한국발전연구원	안무혁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한민족통일연구중앙협의회	정성욱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	다물민족연구소	박광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우리연합	최민자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이경훈	통일경제연구협회	김기환
백천통일시대연구원		한국사회문화연구원	홍사광
한국사회통일연구원	유도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변형운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시중	북방문제연구소	최영택
남북체육연구학회	이종영	21세기남북문화연구원	한태선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남북문화교류협회	이배영	민족통일선교협회	신광준
한겨레평화통일협회	장승학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정주환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경실련통일협회	김성훈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권근술	민족문화교류재단	강도원
세계평화청년연합	김봉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신법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정성현	한민족한마음운동추진본부	주종기
남북소년통일교류회	정경석	남북나눔	김성수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이재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김연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우윤근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송현섭	탈북자동지회	홍승경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이재정	좋은 벗들	최석호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한기홍	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본부	김경재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송낙환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최승강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강영석	6.25전쟁 남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심재식	통일교육협의회	임종혁
미래전략연구원	구해우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 민족연합	홍사덕
평화운동연합	이수성	통일문화연구원	라종억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한명수	남북사회문화연구원	최병보
민족화합통일운동연합	박봉식	민족통일체육연구원	이학래
새천년남북통일운동협의회	주명주	범민족동질성회복추진회	윤영모
평화통일을위한시민연대	이장희	서울평양학회	김동규
통일미래연구원	한광옥	통일정보센터	박종화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김주팔	동북아곡물지원협회	심재성
밀알을 심는 사람들	성호정		

4. 인터넷 활용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가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다.

우선 통일홍보의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이 계층 및 세대에 따라 그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내용 발굴에 힘썼다.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해설자료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 현황과 같은 북한사회에 대한 설명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방법과 매체의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국민의 높은 정보화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홍보가 되기 위해 인터넷, E-mail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1996년 12월 개통된 통일부 홈페이지는 대북정책, 남북관계현안 및 북한동향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국문 및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사이트로 자리잡아 왔다.

2002년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정홍보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북정책초점」, 「대북정책 Q&A(알고 싶어요)」 코너를 신설하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쟁점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마당」과 「참여마당」을 분리하여 온라인 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참여마당」에 「정책제안」,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Cyber poll」 등을 보강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 디자인을 밝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개선하였다.

통일관련 사이트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통일 Portal」,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서비스」, 남북관계의 발전을 그래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통일통계」,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결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달라진 북한언어의 의미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북한용어 검색」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를 적기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Press releases」 (보도자료), 「Events and Issues」 (통일/북한 관련 소식), 「Major Speeches」 (대통령, 장관 연설문)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최신 뉴스를 알리고 있으며, 「Chronicles」 (남북관계 연표)를 신설하여 1945년 8월부터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Open Forum」을 통해서 외국인과의 의견을 교환하는 등 쌍방향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나. 통일부 연계 홈페이지

통일부는 또한 북한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 : unibook.unikorea.go.kr>, 남북회담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를 축적해 놓은 <남북회담자료 : dialogue.unikorea.go.kr>, 이산가족교류절차 등을 다루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 reunion.unikorea.go.kr>,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통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 : uniedu.go.kr>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에 개통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는 통일·북한관련 자료 67,000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영화상영 및 북한실상설명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는 북한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증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영화 소개」와 「자료실」 코너를 새로 설치하는 등 홈페이지

의 기능 및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북한영화 소개」 코너는 90여 편에 달하는 북한영화의 줄거리와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북한 실상 체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원문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3년부터는 인터넷 원문서비스가 가능하다.

1999년에 개통된 <남북회담사료 홈페이지>는 1970년 이후 추진된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군사분야 회담,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수록되어있다.

주요메뉴는 남북회담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볼 수 있는 「남북회담사」, 남북간의 최종 합의서를 모아둔 「남북합의서」, 남북대화 연표, 남북대화, 남북한 통일대화·제의 비교, 통일백서,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등 발간 책자와 자료를 정리한 「사료 데이터베이스」, 보도자료, 해설자료 등을 모아둔 「자료실」 등이다.

그밖에 남북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담소식」, 「열린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자료 접근 및 저장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는 이산가족정보교류 및 가족상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12월에 개통되었으며, 「남북이산가족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에는 등록된 이산가족자료를 새롭게 보완하였으며, 6.25 전쟁납북자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특수이산가족 자료에 대한 체계적 정리도 병행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고령이산가족을 위한 코너를 신설하고 납북자명부 열람 등의 서비스를 새로 제공할 예정이다.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교육서비스를 능동

적·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개통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교사와 학생 등 통일교육 관련자들로부터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통일학교」 코너는 '통일만화', '가상북한여행', '북한의 명절', '통일게임' 등 초·중등학생의 통일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청소년 백과',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등 양질의 콘텐츠는 교과서 개편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시의 적절한 통일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프로그램', '도서자료', '일반자료', '대학통일교육자료', '동영상자료' 등으로 구성된 「자료실」은 통일교육 연구자 및 학교·사회통일교육 실시자(교사)에게 매우 유용한 코너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인터넷 기반이 고도로 발전하고 인터넷이 국민들에게 친숙한 매체가 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통일교육원은 「온라인 통일교육」 실시를 준비하였다.

2001년에는 온라인강좌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의 집합교육과 연계한 온라인 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2002년에는 1회의 시범강좌와 2회의 정규강좌를 실시하였다. 향후 '원격연수기관'의 지위를 획득하여 본격적인 「온라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통일부 운영 홈페이지 현황 >

사 이 트 명	주 소	주 요 내 용
통일부	unikorea.go.kr	민원마당, 참여마당, 통일소식, 남북관계동향, 자료실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소장자료검색, 북한영화소개, 북한실상설명회 안내, 자료실
남북회담자료	dialogue.unikorea.go.kr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사료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정보검색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 찾기, 그리운 가족, 보고픈 고향, 열린마당
사이버통일교육센터	uniedu.go.kr	온라인 통일강좌, 통일교실, 북한청소년백과, 자료실, 참여마당

〈 통일부 홈페이지(Unikorea) 메뉴 구성 〉

2002. 12.31 현재

통일부 안내	주요업무현황	통일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는? ○ 장차관 소개 ○ 조직 및 업무 ○ 통일부 연혁 ○ 통일부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추진업무 ○ 통일정책 ○ 인도적지원 ○ 교류협력 ○ 통일교육 ○ 남북회담 ○ 경수로건설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초점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국회관련자료 ○ Newsletter ○ 최신자료모음
북한이해	자료실	통일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북한동향 ○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 ○ 데이터로 보는 북한 ○ 알기쉬운 북한 ○ 북한심층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발간물 ○ 남북합의자료 ○ 통일관련 국내법령 ○ 북한법령 ○ 남북관계 일지 ○ 통일부 허가법인 ○ 연설문 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사진 ○ 북한주민의 삶 ○ 한민족의 삶 ○ 한민족의 애창가요 ○ 통일공모작 ○ 통일만화마을
민원마당	참여마당	남북관계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민원절차·서식 ○ 민원신청 ○ 행정정보공개 ○ 민원처리공개 ○ 장관과의 대화 ○ 감사관 신문고 ○ 통일대화방(Q&A) ○ 질의모음(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토론방 ○ 전자공청회 ○ 정책포럼 ○ 정책제안 ○ 사이버이벤트 ○ Cyber poll ○ 홈페이지 개선의견수렴 ○ 사이버통일홍보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남북관계동향 ○ 일일북한방송 ○ 주간북한동향 ○ 주간국제동향 ○ 월간교류협력동향
기타 부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용어사전 ○ 통일 portal ○ 통일통계 ○ 모바일서비스 ○ 시각장애인마당 ○ Cyber poll 		

〈 통일부 영문홈페이지 메뉴 구성 〉

주메뉴	하위메뉴
가. About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Welcome o Organization and Function o Brief history o Location
나. Highl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ress Releases o Events and Issues o Major Speeches o Update for this week
다. Inter-Korean Re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Chronicles o Inter-Korean Cooperation o Korean Unification Bulletin o Inter-Korean Documents
라. North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Weekly on North Korea o Data on North Korea o Analyses of North Korea
마. Libr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outh - North Dialogue in Korea o White paper o Others
바. Gall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Gallery
사. 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Frequently Asked Questions
아. Open For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Open Forum
자. Other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earch o Useful Sites o Sitemap o E-mailing service

다.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현안문제를 놓고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네티즌 상호간 그리고 발제자와 활발한 토론을 펼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매년 3~4회 개최되며, 활발한 토론과 진지한 의견 제시를 통해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 네티즌을 우수토론자로 선정하여 금강산여행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시상하고 있다.

통일부는 1996년 5월 PC통신을 활용하여 전자공청회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2000년 5월까지 총 11차례 개최하였다. 2000년 9월부터는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기존의 PC통신을 인터넷으로 대체하였으며 2002년 말까지 '인터넷 전자공청회'를 총 8차례 개최하였다.

2002년 한해 동안에는 「남과 북이 함께 하는 미래」 등을 주제로 3차례의 개최를 통해 총 979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3차례의 공청회에서 1회 평균 6,300여건의 의견조회가 이루어짐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표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 2002년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

구 분	개 최 기 간	주 제	의견제시 건 수	내용조회 건 수
제1차	2.18 ~ 3. 3	한반도 주인의 생각잔치	553	8,967
제2차	9. 2 ~ 9.15	남과 북이 함께하는 미래	205	4,916
제3차	12. 2 ~12.15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을 마무리 하며...	221	4,978

라. 공모전 실시

통일부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친근한 방법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직접 참여를 통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1998년, 1999년과 2001년에는 대북정책의 핵심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한 홍보표어를 공모하였다. “오고가는 남북, 다가오는 통일” “새천년 공동선언, 한민족 힘찬도약” 등 입상된 작품들을 전국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등의 전광판과 주요도시 대형 옥외전광판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전국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일부 심볼마크 로고 공모를 통해, 태극문양을 변형한 현재의 심볼마크로고를 선정함으로써 21세기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통일부의 참신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통일부 심볼마크로고 공모는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통일부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남과 북’이라는 제시어로 3행시 공모를, 2002년에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제시어로 5행시 공모를 실시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대중적 참여기회를 마련하였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동

영상(플래시)공모전, '사이버통일그림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통일의를 담은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입상된 작품들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일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국민의 정부 5년간 공모전 개최 주요현황 〉

공모전	공모주제	당 선 작
전광판 홍보문안 공모 (1998.3.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 함께 발전해야 통일이 빨라집니다.” ○ “평화와 화해협력은 통일의 시작입니다.”
전광판 홍보문안 공모 (1999.3.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내용 ○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고가는 남북 다가오는 통일” ○ “따로한 반세기 함께하는 21세기”
전광판 홍보문안 공모 (2001.5.2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 화해협력 ○ 통일후 한반도의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천년 공동선언 한민족 힘찬 도약” ○ “화해속에 평화공존 협력속에 민족번영”
통일부 상징 마크로고 공모 (2000.5.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화해·협력 ○ 21세기 통일과 번영을 선도해 가는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윤(계명대 대학원)
통일한국 동영상 공모 (2001.5.28~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 한반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 ○ 통일 후 한반도의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승현 「축구를 통해 본 통일한국의 미래」 ○ 류두환 「통일 후 한국의 미래」
통돌이의 플래시 잔치 (2002.1.2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롭게 함께 사는 남과 북 ○ 이산가족의 아픔 해결 ○ 통일의지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보은 「통돌이의 희망사향」 ○ 김가영 「친구가 되어주세요」 ○ 임근호 「나미와 부기의 통일이야기」
「이야기가 담긴 사이버통일그림」 공모(2002.5.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함께 사는 남과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봉진 「화해의 노래」 ○ 정성관 「하나되는 소리」 ○ 김주영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마. 다양한 홍보자료 발간

대북정책 추진 관련 각종 자료도 수요자인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에 부합되게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배포하였다.

남북관계 전문가 대상으로는 상세한 정책해설 자료집을,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시각적·감성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한 홍보자료를 발간하는 등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통일문제에 무관심하기 쉬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용 만화 「해피투게더」를 제작·배포하여 분단된 남북의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남북회담 합의사항 진행경과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속보 또는 E-mail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여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시청각자료의 제작·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녹음해설 테이프를 제작하였고, 「북한바로알기」 등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배포하였다.

그밖에 「국민의 정부」 5년간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결과를 분야별로 종합·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2002년 주요 교육·홍보자료 발간 현황 〉

자 료 명	발간부수	형 태
「대북정책 4년, 평화와 협력의 길」	30,000	책자
「2002 통일백서」	7,000	책자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3,500	자료집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3,500	자료집
「남북정상회담 2년,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30,000	책자
「해피투게더」	50,000	홍보만화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2,500	자료집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 결과」	3,200	자료집
「평화와 협력의 길」	30,000	리플렛
「평화와 협력의 실천」(교육용)	1,800	자료집
「평화와 협력의 실천」(홍보용)	30,000	책자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강사용)	3,000	자료집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	2,500	자료집
「대북정책 추진현황」(종합자료집)	2,100	자료집
「대북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3,600	자료집
「2002 통일문제 이해」	17,500	책 자
「2002 북한 이해」	17,500	책 자
「통일교육교수법과 그 실제」	20,000	CD·책자
「화해협력시대의 여성통일교육」	1,000	책 자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1,000	책 자
「동서독 통일이후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1,000	책 자
대북정책 영상교재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	50	영상자료
북한바로알기 영상교재 「북한의 교육제도」 등 4종(각 50개)	200	영상자료
사이버통일교육센터 활용핸드북	17,000	책 자

바. 「통일속보」 발간과 E-mail 배포

「통일속보」는 대북정책 추진현황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계기별 해설자료로서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포함으로써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하고자 기존의 인쇄물인 「통일속보」를 컴퓨터 파일형태로 E-mail 배포시스템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E-mail 배포시스템은 2000년 4월 교사, 통일문제전문가, 통일교육이수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 말까지 약 55,000명의 주소록을 포함하고 있다. 대북정책해설자료, 북한실상이해자료, 정기 간행물 등을 매주 2~3회 배포하고 있다.

E-mail 배포는 시간 및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자료 발간자와 자료수요자 사이의 양방향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2002년 주요 E-mail 자료 배포현황 >

자 료 명	시 기
2002년 신년사 분석	1월
금강산 지원 관련 해설자료	1월
최근 북한 인권 변화 동향	2월
금강산 관광 경비 보조 설명자료	3월
특사 방북 해설자료	4월
북한 인구 현황	5월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6월
북한 행정구역 현황	6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6월
서해교전사태 관련 설명자료	7월
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 관련 해설자료	8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결과 해설자료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해설자료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설명자료	8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 해설자료	9월
최근 남북합의사항 설명자료	9월
제4차 적십자회담 설명자료	9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착공 해설자료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관련 해설자료	9월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10월
북한 태권도 실태	10월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10월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3차회의 결과 해설자료	11월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해운협력관련 실무협의 결과 해설자료	11월

사. 방송활용 홍보

정부는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라디오와 TV 등 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KBS 사회교육방송의 「통일열차」를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해온 이래 CBS 라디오방송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아리랑TV의 「Eye on North Korea」, 인천TV의 「통일마당 남남북녀」 등 통일관련 프로그램에 통일부 실무자·통일교육원 교수 등 출연자와 방송자료를 지원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도 정부당국자가 각종 시사프로그램 및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 특히 통일·북한 관련 라디오, TV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방송 제작을 지원하였다.

한편 1999년에는 EBS-TV 「세상보기」프로그램에 대북포용정책 해설 특집 제작을 지원하고 4회에 걸쳐 방영한 데 이어, 2000년에는 KBS-TV 「남북의 창」프로그램에 독일 방송이 통일에 기여한 바에 관한 방송물 제작을 지원하여 3회에 걸쳐 방송하였다.

2002년에는 EBS-TV 「남북은 하나」 프로그램의 '통일아카데미' 코너 제작을 지원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16주간 매주 토요일 방영하였다. 방송 후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통일교육용 영상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아카데미' 코너는 남북 문화 이해지(誌)를 이용하여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북한·통일관련 프로그램 현황 〉

2002년 12월 현재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간	담당부서
KBS 사회교육방송	통일열차	매일 00:10	50분	사회교육1부
KBS 사회교육방송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일 23:00	60분	사회교육1부
K-TV	생방송 e-korea 2부	월~금 14:00	120분	영상제작과
YTN	북한리포트	화 13:32	30분	통일외교팀
SBS	평양2002 (모닝와이드內)	목 06:35	6분	정치부 (통일외교안보팀)
KBS 1	북한리포트	목 23:35	30분	통일부
EBS	남북은 하나	토 07:20	40분	시사통일팀
EBS	EBS 통일진단	일 21:20	50분	시사통일팀
Arirang TV	Peninsula Scope	토 10:00	30분	제작팀
KBS 1Radio	남과북 하나로	토 17:30	30분	기획특집국
MBC Radio	남북한마당	일 06:05	25분	제작2부
BBS	통일로 하나로	일 07:05	55분	교양제작부
MBC	통일전망대	일 07:10	20분	보도국 통일외교부
CBS	통일로 가는 길	화 14:30	30분	편성제작국
PBC	삼천리 우리는 하나	일 19:15	45분	라디오국

5. 국제사회 및 재외동포 대상 홍보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 확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힘써 왔다.

2002년도에는 제17회 한·일 월드컵축구대회(2002. 5. 31~6. 30)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2002. 9. 29~10. 14)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성과 등을 담은 홍보자료 「평화와 협력을 위한 햇볕정책」을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발간하여 한국을 방문한 해외 주요인사 및 선수단·관광객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1998년 7월 격월간으로 발간하기 시작한 영문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1999년부터는 월간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통일한국」과 계간 「Korea and World Affairs」를 해외동포와 외국연구기관, 한반도문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배포해 오고 있다.

한편 이들 해외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통일부로 초청하여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민간단체 발간 해외홍보자료 배포 현황 〉

2002.12.31 현재

기관명	연도	간기	자료명	부수
평화문제연구소	1989~현재	월간	통일한국	매호 1,100
남북평화통일연구소	1981~현재	계간	Korea and World Affairs	매호 2,100

〈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현황 〉

2002.12.31 현재

구분	연도	형태	자료명	부수	비고
정기 (월간)	1998~현재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	매호 2,000	영어
부정기	2002.5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계기)	팜플렛	Sunshine Policy for Peace & Cooperation	10,000	영어
			太陽政策- 平和と協力のために	5,000	일어
			陽光政策爲了和平與合作	5,000	중어
	2002.9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계기)	리플렛	Sunshine Policy for Peace & Cooperation	10,000	영어
			平和と協力を目指す太陽政策	5,000	일어
			追求和平與合作的陽光政策	5,000	중어

나. 재외동포에 대한 홍보

560만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남북간 화해협력 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이해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중국·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동포 신문사·방송사에 국내 전문가들이 작성한 통일문제 관련 칼럼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게재·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 현황 등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있다. 아울러 동포단체 주관의 민족문화 행사와 현지 대학·연구소의 한반도문제 관련 세미나를 지원하는 등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또한,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서울과 해외 주요 도시에서 번갈아 가며 한반도문제 전문가와 재외동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2002년에는 7월 4일 일본 도쿄 민단본부 회의장에서 미·일·중·러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와 재외동포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개최 현황 〉

2002.12.31 현재

구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1991.9.13	서 울	15개국 262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제2차	1992.8.18-19	러시아 사할린	11개국 154명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제3차	1993.9.20-23	서 울	17개국 336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제4차	1994.8.5-7	중국 연변	10개국 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제5차	1995.8.16-17	서 울	14개국 650명	통일·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제6차	1996.11.21-23	일본 도쿄	13개국 250명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제7차	1997.9.5-6	서 울	16개국 300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제8차	1998.8.17-19	미국 샌프란시스코	10개국 120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제9차	1999.10.1	서 울	6개국 100명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제10차	2000.6.17	독일 베를린	23개국 140명	독일통일 10년과 한반도 통일
제11차	2001.5.24	서울	6개국 230명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제12차	2002.7.4	일본 도쿄	5개국 170명	한반도 평화·협력과 해외동포의 역할

제2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정립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각급 학교 등에서 그리고 사회통일교육은 공공 교육훈련기관·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일교육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정부의 통일교육 활성화 임무 부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평화공존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화와 협력중심의 통일교육 내용체계 정립, 정부·민간 통일교육협력체제 구축, 학습자 중심의 열린 통일교육 심화 그리고 학교·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가.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중기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은 중기 정책목표로 ‘통일한국의 비전을 향한 범국민적 통일교육체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단계별 중점과제로 통일교육지원체계 현황분석, 새로운 통일교육지원체계 준비 및 정비·실행 등을 설정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의 제2차 연도인 2003년도 실행계획으로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통일교육과제별 추진방향 수립 등 통일교육지원체계 준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 계획에는 중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여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통일교육협의회의 2003년도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발간·보급

1990년대 외부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에 따라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주제내용을 정립하여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발간하였다.

특히,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지

원법에 근거한 통일교육 내용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해 12월 통일문제 전문가와 학교·사회 등 통일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보완한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보급되어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02년 12월에는 평화와 화해협력 중심의 통일교육에 중점을 둔 「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남북관계, 북한상황 및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 이해를 제고하였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셋째,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과 함께 우리 사회내부의 폭넓은 합의와 튼튼한 안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정보화 시대임을 감안하여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에 있어서 웹토론, 정보분석, 정보안내 등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을 소개하였다.

「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 구성 및 주요내용 〉

구 성	주 요 내 용
I.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1. 통일교육의 목표 2. 통일교육의 과제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필요성 2. 북한사회의 모습 3. 북한의 변화 이해 4. 통일환경의 변화 5.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6. 통일국가의 실현 7.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III.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원칙

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통일교육심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 민간전문가 등 25인으로 구성되며, 통일교육실무위원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2001년 8월에는 제2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제2기 위원회는 여성 및 시민단체 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에는 11월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과 「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통일교육실무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통일교육심의위원 명단 〉

2002.12.31 현재

성 명	소 속	비 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	당연직
김신복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형기	통일부 차관	
명로승	법무부 차관	
권영효	국방부 차관	
조영택	행정자치부 차관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	
김송자	노동부 차관	
김성진	여성부 차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	
이형규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구본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국회의장 추천
남주홍	경기대학교 교수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박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홍연숙	한양대학교 교수	
곽병선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통일부장관 임명
박도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서병철	통일연구원 원장	
심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장	
이장희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세구	서울대학교 교수	
조 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라. 통일교육발전워크숍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학교·사회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의 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1999년 시·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1년은 사회통일교육기관의 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를 지원하였다.

2002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초·중등 교사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총 6차례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는 자료집으로 종합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 2002년 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 현황 〉

주관기관	개최일자	참여인원	주관기관	개최일자	참여인원
부산시 교육청	2002. 4. 26	초·중등 교사 505명	대전시 교육청	2002. 9. 27	초·중등 교사 234명
광주시 교육청	2002. 5. 31	초·중등 교사 440명	제주도 교육청	2002. 11. 8	초·중등 교사 199명
대구시 교육청	2002. 6. 12	초·중등 교사 351명	서울시 교육청	2002. 11. 26	초·중등 교사 326명

마. 통일교육실태조사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교육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일교육실태조사는 통일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각급 교육청 및 학교, 공공 및 민간 사회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과 통일교육내용, 통일교육방법 및 반영 정도, 통일교육자료 등에 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02년에는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조사·분석 하였다. 16개 시·도교육청, 19개 초·중등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8개 사회교육기관 등에 대한 현장방문조사와 각급 학교 교사 등 271명, 교육연수원 등 72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2003년도 통일교육분야별 발전과제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2. 통일교육 실시

가. 개요

정부는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시를 위해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국민들의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통일실현 의지 함양을 돕기 위하여 사회 각계 각층 인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북한방문 예정자들에게 북한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북안내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교육수요가 있는 국내외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국내외 순회교육도 정규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도 힘써 통일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원격통일교육(On line 교육)과

집합교육(Off line 교육)을 상호 연계하는 교육모델을 창출·실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통일교육 교과 내용 〉

구 분	교 과 내 용
통일의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의 배경과 폐해 ○ 통일의 의미와 성격 ○ 평화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습과 변화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체제의 특징 : 정치·경제·사회·문화 ○ 북한의 변화 의미와 양상 ○ 북한의 대남전략·대외정책
통일환경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질서의 변화 ○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 통일환경 변화가 주는 함의
화해협력 정책과 남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협력정책의 개념 ○ 화해협력정책의 추진원칙과 방향 ○ 화해협력정책의 향후과제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사와 평화공존 ○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및 내용 ○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국 통일의 교훈 ○ 통일국가의 미래상 ○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체험·참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등 분단현장 시찰 ○ 주제별 토의·과제 연구, 대담토론 등

2002년에는 총 46,840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1,265명,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4,571명(On-Off 연계교육인원 128명 포함), 남북교류협력 관련 인사 7,870명, 공직자 1,035명, 사회 각계 인사 2,053명(온라인 통일교육 시범강좌인원 83명 포함), 국내·외 순회교육 30,046명 등이다.

지난 5년 동안은 1998년 62,894명, 1999년 31,274명, 2000년 30,820명, 2001년 40,286명, 2002년 46,840명 등 총 212,114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1998년에 비해 1999년 교육인원이 반감한

이유는 정부(통일교육원)의 조직축소 개편에 기인한 것이다.

나. 분야별 통일교육

1)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지역사회 및 사회교육기관·단체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은 통일교육전문위원을 비롯하여 민주평통자문위원, 향군안보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지도자, 종교단체지도자, 여성단체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2~3일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2002년도에는 총 1,26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내용은 기본과목과 '남북관계 주요현안과 대책', '남북교류 협력과 경제공동체 건설방향', '한반도 군사문제와 평화정착',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합의 창출방안', '지역사회 통일교육 교수기법' 등의 전문과목으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올바른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초·중등 교사, 교육전문직, 교장·교감(초·중등), 예비 초·중등교사(교육대생, 사범대생),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3일~2주의 교육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에는 총 4,57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내용은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남북한 교과과정

비교', '북한의 교육제도 실태', '통일교육 사례와 교수 기법', '탈북학생들의 의식구조와 남북 더불어 살기', '남북 문화이해지를 통한 남북상호 이해', '분단국 통일교육 사례와 시사점' 등으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통일교육 현장에서 남북간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02년에는 온라인교육(On line)과 집합교육(Off line)을 연계한 교육모델을 창출하고, 상반기에 인터넷상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강좌 1회, 하반기에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정규강좌 2회를 실시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3)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은 남북교류협력 추진인사, 경수로 건설인력, 금강산관광사업 관계자, 남북회담 및 각종행사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1~5일의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북한의 실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도', '방북시 유의사항', '방북 경험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교류협력 추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2002년에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인사, 경수로 건설인력, 금강산관광사업 관계자, 남북회담 및 각종행사 참가자 등 7,87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4) 공직자 통일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통일교육은 4-5급 중견관리직 공무원, 6-7급 중견실무직 공무원,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 신입관리자(행시), 보안경찰 등을 대상으로 3

일~2주의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도에는 1,035명이 통일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내용은 기본적 과목 이외에 '북한의 경제현황과 전망',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방안',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공동체 건설방향',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사례와 시사점'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남북화해협력과 평화공존 과정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대북정책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5) 사회 각계 인사 통일교육

국내외 주요 인사들에게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2002년도에 총 41회에 걸쳐 2,05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재일민단중앙본부와 협조하여 226명의 재일민단 간부를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정세 및 통일문제 이해', '남북화해협력시대 재외동포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민사회에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켰다.

6) 국내외 순회교육

국내순회교육은 국내 각 지역의 주요 인사나 사회교육기관·단체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해외순회교육은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의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도에 국내외 순회교육은 총 30,046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국내순회교육은 국내 각 지역에서 29,755명에게 실시하였다. 해외순회교육은 상반기(5.7~5.16)에는 구주지역(휴리히, 암스텔담, 스톡홀름), 하반기(7.8~7.15)에는 미주(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서 재외동포 총 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학교통일교육 지원

가. 초·중등 학교통일교육

정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미래의 '통일 주역'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의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통일관련 각종 정보·자료 등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통일교육담당 장학사 32명으로 구성된 「통일교육담당장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2002년도에는 상반기 연찬회(2.27~28)를 통하여 2002년도 학교통일교육의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시·도교육청간 통일교육의 지도방향 등에 관해 토론하였다. 하반기 연찬회(8.28~29)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탈북자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는 뜻깊은 체험을 하였다.

아울러 학교통일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 35개교(초등학교 13, 중학교 16, 고등학교 6)를 지원하였다. 이들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통일·북한문제를 주제로 한 시사 및 영상자료와 학교통일교육 참고자료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를 지원하였다. 또한 시범학교 교사(61명) 초청교육(5.22~24)을 통해 참여식 교육의 학습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문점 견학 등도 실시하였다. 시범학교는 2000년에 23개교에 불과했지만 2001년 38개교, 2002년에는

35개교로 점차 증가되어 가는 추세이다.

또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역 북한관 주관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기념 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초·중·고별로 각각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부문별로 통일부장관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였다. 아울러 수상작을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작품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수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 2002년 전국 통일교육시범학교 현황 〉

2002.12.31 현재

관 할	학교명	주 제
서울	옥수초	다양한 체험학습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통일교육 방안
	동마중	ICT를 활용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과 통일대비 교육
	대진고	현장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부산	사직초	남북한 생활문화 탐구활동을 통한 통일의식
	영선중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대구	경서중	북한사회의 바른 이해를 통한 통일대비 능력신장
인천	구월여중	범교과적 북한이해교육을 통한 통일실현의지 함양 방안
광주	광주남초	통일교육의 다양한 교육방법 접근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신장
	천곡중	다양한 통일교육을 통하여 남북의 이질감 해소방안
대전	신흥초	통일관련 교육활동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가양중	통일관련 교육활동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신장
울산	명정초	민족의 동질성 회복 프로그램 적용으로 하나된 마음 기르기
	옥동초	남북한의 생활문화탐구를 통한 통일대비 능력신장
경기	문산북중	내고장 통일환경의 체험학습활동을 통한 능동적 통일의식 함양
강원	태백함태초	하나되는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의지 신장
	춘천후평중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신장 방안
	고성대진고	화해협력시대 통일의식 제고방안

관 할	학교명	주 제
충북	안내초	자기 주도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황간중	다양한 행사활동 및 남북한 생활문화 탐색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음성고	학생활동 중심의 통일민족교육을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충남	태안중	사이버 통일교육 자료 구축을 통한 통일의지 고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목천고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신장
전북	오수초	국가실상 바로 알기를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이리북중	체험학습 지도를 통한 건전한 통일의식 함양
전남	여수문수초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의식 고취
	무안청계중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방안 모색
경북	용황초	시사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한 통일대비 능력신장
	포항중	멀티미디어 자료활용을 통한 민족통합 및 평화의지 함양
	김천여중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상주여고	북한 사회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민족동질성 함양
경남	거창중	통일이해자료 활용을 통한 올바른 통일의식 고양
	진해고	북한문화 바로 알기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방안
제주	서귀포여중	학생 중심 활동을 통한 통일실현 가치관 및 태도 함양
교육인적 자원부	경기 삼죽초	탈북학생들의 사회 학교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경남 계룡초	통일대비 능력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 연구

나. 대학통일교육

정부는 대학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고자 대학통일문제연구소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간의 학문적 교류와 협조를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를 1994년에 설립하였으며 2002년 12월 말 현재 93개 대학이 협의회에 가입해 있다.

지원형식은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가 추진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지원분야는 교수 통일문제 세미나,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교재개발 등이었다. 2001년부터는 보조금이 연구용역비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 내에 5개 분과위를 조직하여 이들 분과위에 통일문제 관련 연구용역을 위촉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는 5개 분과위원회에 통일·북한 문제 관련 연구용역을 위촉(5. 1~10.31)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분과위원회별 연구용역 개요 〉

위원회명	연구 책임자	연구 주제
통일정책위원회	우성대 (목포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통일교육위원회	임채완 (전남대)	남북한 화해협력시대 러시아 연해주 한인 공동체
남북교류위원회	김재한 (한림대)	한반도를 위요(圍繞)한 불신의 구조와 해소 방안
남북경협위원회	이학수 (대구카톨릭대)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변동분석
북한사회위원회	양병희 (건국대)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이해와 협력

〈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현황 〉

2002.12.31. 현재

대학	연구소명	대학	연구소명	대학	연구소명	대학	연구소명
강릉대	통일문제	동의대	법정	승의여대	우리문화	중앙대	민족통일
강원대	사회과학	명지대	사회과학	신라대	국제지역	진주교대	초등교육
건국대	민족통일	목원대	문화발전	아주대	사회과학	창원대	사회과학
경기대	통일안보	목포대	통일문제	안동대	사회과학	천안대	통일경제
경남대	극동문제	배재대	통일문제	안양대	복지행정	천안외대	민족
경북대	평화문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여수대	통일문제	청주대	국제협력
경산대	평화전략	부산외대	국제관계	연세대	통일	충남대	통일문제
경상대	통일문제	상명대	통일문제	영남대	통일문제	충북대	사회과학
경성대	사회과학	상지대	사회과학	영산대	지역통상	한국외대	사회과학
경원대	사회과학	서강대	동아	용인대	인문사회과학	한국정문연	민족문화
경희대	국제평화	서경대	통일문제	우석대	통일문제	한남대	사회과학
계명대	정책	서울대	사회과학	울산대	사회과학	한림대	한림과학
고려대	평화	서울사이버대	통일문제	원광대	통일문제	한서대	인문사회과학
관동대	동북아평화	서울시립대	법률행정	이화여대	한국여성	한성대	동아시아
국민대	사회과학	서원대	사회과학	인제대	인문사회과학	한세대	통일문제
군산대	현대이념	선문대	평화사상	인천교대	통일교육	한신대	평화연구
단국대	정책과학	성균관대	사회과학	인천대	평화통일	한양대	통일정책
대구카톨릭대	통일문제	성신여대	사회과학	인하대	국제관련	혜전대	사회과학
대구대	사회과학	세종대	통일문제	전남대	아태지역	호남대	인문사회과학
대전대	동북아	수원대	통일문제	전북대	사회과학	호서대	통일문제
대진대	북방	숙명대	통일문제	전주대	사회과학	홍익대	인문과학
동국대	북한학	순천대	사회과학	제주대	동아시아		
동신대	민족통일	순천향대	사회과학	조선대	통일문제		
동아대	사회과학	승실대	사회과학	중부대	평화통일		

한편, 대학생들에게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1982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오고 있다.

2002년도에는 제21회 대학생통일논문현상공모를 4월부터 8월말 까지 실시하여 전국의 대학에서 총 34편을 공모한 후, 내·외부 전문가의 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선작을 선정하였다. 입선자에게는 통일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11월에는 금강산 견학을 실시하였다.

2002년도 논문 입선작은 참신한 주제로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세부적으로 접근한 논문이 많았다. 이들 논문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각 대학도서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

〈 제21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상 현황 〉

구분	성명	소속	논문주제
최우수	현아영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년	「붉은악마 군단」의 통일의식 조사연구
우수	박형진	세종대학교 경제무역학과 2년	통일 및 대북관련 쟁점의 퍼지(fuzzy)적 이해
가작	서정상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4년	통일에 필요한 외교정책적 대안
	김주일 · 윤기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3년 및 4년	남북방송교류협력 및 개방을 통한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장보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년	재중(在中) 탈북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모색

4. 사회통일교육 지원

가. 통일교육협의회

정부는 사회통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2002년 12월 말 현재 통일교육전문위원회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9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2002년에는 처음으로 4억 5천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통일교육협의회에 지원하여 회원단체들의 통일교육경비 일부를 보전해줌으로써 회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의 주요 조직으로는 총회, 이사회, 공동의장회의, 통일교육연구소, 청소년·여성·시민·지역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2002년도에는 주요사업으로 회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교육사례발표, 워크숍 개최 등 일상사업, 연구사업(회원단체용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청소년·지역주민·시민 등 대상별 통일교육사업, 정기통일강좌·통일포럼·세미나 등 회원단체의 통일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

2002.12.31 현재 (90개단체)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사범대 중등교육연수원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경실련통일협회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	통일교육문화원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다물민족연구소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대한민국팔각회	동신대 민족통일연구소	동학민족통일회
목포대 통일문제연구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민족통일축진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북방문제연구소	북한연구소
사이버대학 넷유니	상명대 통일문제연구소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연합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아태평화재단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좋은 벗들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
통일건국민족회	통일교육연구원	통일교육연구회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통일기념사업회	통일맞이늦봄문의환목사기념 사업
통일민주협의회	통일여성안보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평화통일복지협의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대학원리연구회
한국산업교육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한국청년회의소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통일철학회
한민족복지재단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한민족통일축진협회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헤인다예문화원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홍사단통일운동본부
희망의 시민포럼	한국통일교육학회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민주개혁국민연합
원주참여자치시민센타	충북연대	통일경모회

나. 통일교육전문위원

정부는 통일문제에 관해 전문지식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를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들의 협의체인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들을 통일교육전문가로 양성해 왔다.

전문위원들은 지역에서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예비군교육이나 각종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해 통일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위원들은 2002년도에 지역사회주민, 민방위대원, 청소년 등 210만 명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02년 12월말 현재 678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고문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각 시·도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고문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전문위원들은 지난 5년 동안 1998년 618만 명, 1999년 615만 명, 2000년 298만 명, 2001년 328만 명, 2002년 210만 명 등 총 2,069만 명을 교육함으로써 국민들이 북한·통일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대북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전문위원들의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에 연찬교육 5회 실시를 비롯하여, 지역순회 세미나 7회, 통일대화의 광장 1회, 구사회주의권 체험연수 1회를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 자료 16종 35,000부를 제공하였고, 우수활동전문위원에 대하여 훈·포장 등 정부포상(19명), 통일부장관표창(29명)을 수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였다.

다. 북한관

북한관은 북한·통일관련자료 전시와 남북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북한관은 현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자유총연맹,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전국의 북한관장들이 금강산 연수를 통해 북한실상을 직접 체험토록 하였다. 또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와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12개 북한관을 안내하고 있으며, 북한관 안내 리플렛 20만 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북한관 전시패널 7종, 70개를 북한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제작하여 지원하였다.

북한관은 통일관련 자료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대회, 북한 실상 설명회 개최, 기획전시회 물품 제공 등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북한관이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장으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 총 430만 명의 국민이 북한관을 관람하였다. 특히 부산·광주·인천 소재 북한관은 북한관련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노동신문 등 북한간행 시사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1998년 390만 명, 1999년 448만 명, 2000년 481만 명, 2001년 417만 명, 2002년 430만 명 등 총 2,166만 명의 국민들이 북한관을 관람하였다.

< 북한관 현황 >

2002.12.31. 현재

지역	위 치	개 관 일	운 영 기 관	전 시 내 역	휴 관 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내)	'92.9.8	(주)동화진흥	판넬: 50점 실물: 1,197점	연중 무휴
부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판넬: 105점 실물: 723점	연중 무휴
인천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판넬: 48점 실물: 650점	월요일
광주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내)	'89.3.10	통일교육 전문위원 광주협의회	판넬: 89점 실물: 742점	월요일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내)	'93.2.23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판넬: 60점 실물: 727점	월요일
제주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판넬: 37점 실물: 911점	연중 무휴
강원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88.6.15	(주)통일관광	판넬: 42점 실물: 612점	연중 무휴
임진각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91.1.25	(주)임진각	판넬: 49점 실물: 543점	연중 무휴
강원 철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90.12.15	철원군청	판넬: 44점 실물: 606점	화요일
강원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치불지구)	'96.8.14	양구군청	판넬: 55점 실물: 804점	화요일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내)	'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판넬: 133점 실물: 687점	월요일
대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엑스포 과학공원내)	'01.8.11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지방공사)	판넬 : 50점 실물: 200점	연중무휴

5. 통일교육자료 개발

정부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 및 교재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에 보급하여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통일교육용 교재는 통일정책, 남북한 교류·협력관계, 통일과 관련된 국제환경 및 북한의 실상 등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자료의 형태는 인쇄물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응한 시청각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 왔다. 모든 자료 및 교재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콘텐츠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더욱 증대되도록 하고 있다.

2002년도에 개발된 주요 통일교육교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육 기본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통일문제이해」, 「북한 이해」를 개편 발간하였다. 이들 교재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북한실상을 반영하여 통일·북한문제 및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의 방법을 제시해 나가기 위하여 「통일교육총서」를 다음과 같이 시리즈로 발간하였다. 「화해·협력시대의 여성 통일교육」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은 국내외의 평화교육사례를 수집·연구하여 국내의 통일교육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 통일교육에의 시사점」은 통일 이후 나타나는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문화적 갈등을 연구하고 이들 사례가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목적과 경로로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북한방문과 관련한 정보와 유의사항을 담은 「북한 방문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울러 통일교육용 영상교재 개발에 착수하여 약 6종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우선 대상별 교재 개발의 일환으로 대북정책 영상교재 「평화와 협력을 위하여」를 제작하여 금강산 관광객의 방북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균형잡힌 대북인식 정립을 목적으로 「북한 바로 알기」라는 큰 주제하에 「북한주민의 조직생활」, 「북한의 교육제도」, 「북한 가요에 나타난 여성상」, 「북한 IT 현황과 전망」과 같은 4종의 영상교재를 개발하여 주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현장에 배포하였다. 이 교재는 일반인이 북한사회의 특징과 실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와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인터넷 활용 인구 증가 등의 통일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매년 2-3편을 시리즈 형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팸트 드라마 형식의 16부작 「남북문화이해지(誌)」를 기획하여 하반기(9-12월) EBS 교육방송 정규 프로그램으로 송출하고,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인터넷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남북한 주민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문제들을 짧은 팸트 드라마로 보여주어 남북간 문화차이를 이해시키고, 아울러 토론 중심의 기존 통일교육방송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접근을 통해 향후 다양한 통일교육방송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유도하고자 제작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통일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개통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는 2002년 12월말 현재 1일 최대 방문자 수가 6,000여명에 달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온라인 통일교육실시,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통일교육 웹컨텐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2001년도 홈페이지 개편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도에 최초로 실시한 온라인 통일교육은 1회의 시험실시를 거쳐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온라인(On line) 통일교육과 집합교육(Off line)을 연계하여 실시하여, 교육대상자들로부터 만족할만한 수준의 평가를 얻어냄으로써 새로운 통일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둘째,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작·배포한 홍보물과 계기별 인터넷 통일교육 이벤트는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결과로 2002년도 방문자는 전년 대비 약 40%증가하였다. 특히 사이버통일센터의 각종 메뉴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활용 핸드북」은 17,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초·중·고교 및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다.

셋째,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양질의 통일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해 이용자의 특화된 정보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북한관 안내코너, 북한 청소년백과, 청소년 통일강좌 컨텐츠 등의 다양한 통일교육 웹컨텐츠를 개발하였다.

특히 「북한 청소년백과」는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을 교육제도 및 내용, 학교 및 가정생활, 여가생활 및 가치관 등 주요관심 사항별로 6개 영역으로 나눈 후 각 영역별 Q&A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 문항마다 이미지, 음향, 사이트 링크 기능 부여로 청소년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도록 하

였다. 청소년 통일강좌 콘텐츠는 통일교육장학자료인 「열린 통일 신나는 미래」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보다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통일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구축·운영 노력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사이버공간을 통한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격연수원지정을 통한 실질적 원격교육기능의 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절 북한실태 분석 및 자료 제공

1. 북한실태 · 주요동향 분석 및 자료발간

가. 북한실태 · 주요동향 분석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내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를 보여왔다. 통일부는 이 같은 북한동향의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데 주력하였는 바 2002년의 경우에는 김일성 90회 및 김정일 60회 생일, 인민군 창건 70주년, 그리고 아리랑 공연 등 4대 행사와 함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비롯하여 신의주, 금강산, 개성 경제특구 지정 등 경제분야의 움직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는 등 정보수집 · 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적시적이고 내실있는 분석자료의 공급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과 통일교육, 통일정책 홍보 등에 기여하였으며, 계기시마다 관련 분석자료를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변화하는 북한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2002년 북한 관련 주요 분석 현황 〉

(※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

시 기	자 료 명	비 고
1 월	2002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
	「공동사설」 군중대회 통해 경제건설 촉구	
	북한의 「아리랑」 공연 관련 동향	
	공장·기업소 쉼기모임 등 경제선동 주력	
	4월 「평양미술축전」 관련 동향	
2 월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이후 후속동향	
	김정일 국방위원장 60회 생일행사 동향	
	2001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
3 월	북한의 '01년 예산결산 및 '02년 예산안 분석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결과	※
4 월	북한의 직업세계	
5 월	4월중 북한 주요인물 동향	※
	금년도 북한·러시아 관계 동향	※
6 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변화 동향	※
7 월	2002년 상반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개활동 현황	※
	북한 공장·기업소 상반기 계획 완수 동향	※
	최근 북한의 기상예보 능력 평가	
8 월	FAO/WFP 북한 식량 사정 평가 요약	※
9 월	8월중 북한 주요인물 동향	※
	북한의 최근 대미비난 동향	※
	김정일 위원장,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 명칭변경 보도	※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관련 동향	※
10 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관련 설명 자료	※
	최근 북한 상훈수여가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1차 「전국 가설 및 착상발표회」 개최	※
	외무성 대변인, '핵문제' 관련 담화 발표	※

시 기	자 료 명	비 고
11 월	핵 문제 관련 '불가침조약' 체결 등 지속 주장	※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대중국·일본 수출 급증	※
	금년도 북한의 IT산업 육성 동향	※
	금년도 북한의 유엔외교활동 평가	
	개성공업지구법 채택	
	금강산 관광지구법 채택	
12 월	2002년도 김정일 공개활동 동향	
	2002년 북한동향 평가 및 2003년 전망	

나. 자료 발간

통일부는 북한의 정세변화의 추이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대남 등 제반 분야별 동향을 정기적으로 또는 계기별로 분석·평가해 왔다. 또한 「주간북한동향」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대북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실상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2002년에 「주간북한동향」을 573호부터 623호까지 발간하였다. 이 내용을 매주 유관기관과 통일관련 연구기관,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학자, 전문가,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편물 배포 및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오고 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 600호 발간을 기념하여 1호부터 600호까지의 주간북한동향 내용을 신고 검색기능까지 갖춘 CD를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배포하였다.

최근 방북인원들이 늘어나고 북한과의 접촉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제고시키고 북한관련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도 「북한수첩」을 발간하였다.

이 수첩은 북한의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문화·대남분

야의 정책기조, 조직 등 각종 기본자료를 정리하고, 주요 통계와 정책집행 체계도, 남북간 주요 국가 지표 비교 등을 200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남북문제 전문가, 방북인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사용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첩(handbook)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상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하였다.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은 매년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단체들의 조직 및 주요인물들의 현황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연간 일정별로 주요행사 및 공휴일과 1948년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등을 수록하여 도표화한 「주요행사 예정표」를 발간하였다.

또한 북한의 당, 행정기관, 입법 및 사법기관, 단체의 조직들을 망라하여 도표화한 「권력기구도표」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하여 부내 및 주요기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TKR/TSR 연결요도」를 제작하고, 홍수철인 6·7월 경의 북한기상 및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상도」를 제작·배포 활용하였다.

「2002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는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변화상을 진단한 책이다. 2002년도에 북한이 경제부문에서 개방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 책의 발간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주요내용은 2002년 경제시책 방향과 부문별 동향이며, 부록으로 2002년 북한 경제일지를 수록하였다. 부문별 동향은 재정, 건설, 농림수산업, 광·공업부문, 수송·통신부문, 과학기술 부문, 대외경제부문, 그리고 평가와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신진연구자 지원 및 다양한 학술행사 지원

통일부는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신진연구자에게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40세 이하의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학제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도 정부지원을 받은 신진연구자는 25명이었다.

한편, 통일부는 대통령 특사의 방북, 아리랑 공연과 같은 북한의 주요행사,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주요 계기시마다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북한이 급격한 내부변화를 시작한지 100일이 되는 2002년 10월 중앙대학교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였다.

〈 2002년 신진연구자 명단 〉

분 야	성 명	소 속
경 제	고경민	건국대 민족통일 연구소 연구위원
	남기업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동북아)
	이성우	서울대 조교수
	이진영	경희대학교 전임강사
	정영석	한국해양대 법학부 조교수
	최준혜	건국대 강사
교 육	유성호	한국교원대 전임강사
	하정혜	봉사활동(미 한인학교)
법	고선규	서울시립대 전자정부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국운	한동대 조교수
	임재상	부산대 시간강사
	최철영	대구대학교 전임강사
사 회	김귀옥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상근연구원
	김상욱	한국토지공사 주임연구원
	송주은	동우대 조교수
	하유미	이화여대 북한연구실 연구원
	허철구	창원대 전임강사
정 책	김준형	한동대 조교수
	이수형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정 치	고재홍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욱	국회의원 보좌관
	신정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기동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승현	국회도서관 연구관(통일외교)

3. 북한정보자료 개방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특히, 「북한자료센터」에서는 김일성 저작집, 노동신문 등 북한원전을 수집하고 단계적으로 재분류하여 공개를 확대해 왔으며, 북한원전의 데이터베이스화(D/B)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방송의 주요내용을 매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북한영화 상영, 북한실상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왔다.

서울 광화문우체국 빌딩 6층에 소재한 「북한자료센터」는 도서자료 6만 여권, 정기간행물 1만 여권, 파일자료 4천 여권, 시청각자료 6천 여권, 부내생산물 4천 여권 등 총 8만5천 여건의 북한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문객에게 자료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북한자료센터」에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북한영화 상영은 1993년부터 부산, 광주 등 지방으로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학 및 일반단체·기관이 별도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에 부응하여 수시로 상영한다. 2000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인천 등 5개 지방도시 소재 북한관에 각 93편의 북한영화를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한해 동안 북한영화는 총 625회 상영되어 132,641명이 관람하였고, 1990년 이후 누적 총계는 2,482회 399,532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관련단체 회원과 대학생,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2002년 한해 동안 32회 열렸으며, 1,937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총 297회가 개최되었고, 20,235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북한자료공개 확대방침에 따라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북한자료 중 비이념성 자료를 선별하여 이를 일반자료로 재분류, 공개하고 있다.

그 첫단계로 1999년 3월에 북한 정기간행물 151종 2,694건을 재분류하여 이중 61종 576건을 일반자료로 일반에 공개하였고, 2단계로 1999년 12월에 북한간행 단행본 4,294권을 공개하였으며, 3단계로는 북한영화 등 영상자료의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원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해당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2년 한해동안 북한원전 65권 24,185쪽, 통일부 발간물 94권 23,392쪽을 D/B화하여 총 420권 161,237쪽을 D/B화했다. 2003년부터는 통일부 발간물의 원문정보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원문 D/B 구축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관계기관의 요청시 북한반입 및 공개자료를 심의해 오고 있으며 도서, 그림, 우표, 음반 등 북한 반입자료를 2002년 한해동안 44회 3,993건, 1998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는 총 191회 14,142건을 심의하여 반입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방송이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북한바로알기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의 단계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9년 7월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 위성을 이용하여 「조선중앙TV」 위성방송을 시험방송하고, 같은 해 10월10일부터 본격적인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10월22일 전향적인 입장에서 북한TV 위성방송에 대한 일반시청을 허용하였다. 각 라디오·TV방송사가 북한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인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에서 이를 시청할 수 있다.

정부의 북한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조치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

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방송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라디오와 TV의 대남비방프로그를 축소개편하여 사실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라디오와 TV가 북한의 보도매체를 인용하여 북한 관련소식을 곧바로 소개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보도매체도 우리의 언론을 인용, 우리 사회의 일부 소식을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남북간에 방송교류가 진행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해진 것도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북한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방송개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꾸준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부록1>

대통령 주요 연설문

- 제 15대 대통령 취임사(1998.2.25)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2000.3.9)
- 남북정상회담 성과 대국민 보고 연설(2000.6.15)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연설(2000.9.18)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1998.2.25)

-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관련 부분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입니다. 세계화시대의 외교는 냉전시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중심은 경제와 문화로 옮겨갈 것입니다.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무역·투자·관광·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자주적 집단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단결과 사기 넘치는 강군을 토대로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 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의 집단안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해 4자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대화와 교류는 커녕 이산가족이 서로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1,300여 년간 통일을 유지해 온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

의 대로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식량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 들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예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

(2000.3.9)

존경하는 피터 케트겐스 총장, 존경하는 교수 및 내외 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나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폐허와 분단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변영
과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독일 국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간직하면서 오늘 이 유서 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
수 및 학생 여러분과 더불어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 라는
주제 아래 대화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
러분의 우정어린 환영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이 대학 출신들이 지난 1948년 개교한 이래
동서독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독일 통일을 앞장서 이끌어 온 역사
적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위
해 이 대학을 찾았습니다.

분단국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독일 통일에의 교훈을 배운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 양국은 전쟁과 민족분단의 쓰라린 고통과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은 「라인강의 기
적」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지역을 휩쓴 경제적 위기를 국민과 정
부의 헌신,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힘입어 성공적으
로 극복했습니다.

1997년말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800억 달러에 도

달했습니다. 1998년도 마이너스 5.8%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10.2%로 상승했습니다. 물가·금리·외환·증시 등이 모두 전례없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률도 금년 내에 4%까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은 이러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국민은 비록 독일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유사성 때문에 독일과 독일 국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세계는 이제 대립과 갈등의 20세기를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뉴밀레니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세기말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해 온 중국·베트남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친구이자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의 상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완고한 폐쇄정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한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를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먼저 성공

적으로 이룩한 동서독 관계와 통일의 경험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얻은 교훈은 첫째, 독일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온 서독 국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독의 대결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대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서독은 ‘접촉을 통한 변화’로 요약되는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동서독간의 상호공존과 긴장완화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데올로기적 반목을 완화시켰습니다.

셋째, 서독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으로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켰으며, 놀랍게도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넷째, 서독 정부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동서독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년 동안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가장 존경하는 친구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그리고 겐서 전 외무장관 같은 지도자들과도 여러 차례 귀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정책, 통일 이후의 상황 모두가 우리에게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특히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심각하게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을 보고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격도 컸습니다.

그것은 첫째, 엄청난 자금의 소요입니다. 2천억 마르크면 된다던 통일 비용이 10배나 들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양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라고 합니다.

둘째, 구동서독인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아직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독은 경제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부유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독과 전쟁을 한 일도 없고, 통일 전에 많은 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북한을 떠안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극도의 무장대립 속에 있습니다. 동독 국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서 만개했던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자유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북한 밖의 외부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통일을 서두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1995년에 「한반도 3단계 통일론」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일종의 독립국가연합의 단계이고, 2단계는 연방체제 아래 남북이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요, 3단계는 완전통일의 단계

인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통일방식은 앞서 말한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등 독일의 지도자들로부터도 많은 찬성과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아직까지도 개방과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치 않는다. 둘째,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이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핵심이며 냉전종식을 위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와 화해·협력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햇볕정책의 기조 위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그 대신 북한도 세 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남 무력도발을 절대 포기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방안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을 포함해 전세계가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러시아·베트남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북한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의 참상을 TV화면으로 보면서 눈물을 금치 못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북한이 피폐한 경제를 회복하여 굶주린 북한 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우리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부로 비록 정부간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대북한 교류나 협력을 환영하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18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간의 교역도 작년에는 사상 최고인 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남한의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도 시작되거나 협상중입니다. 금년에는 서해공단의 건설, 전자제품공장과 자동차 조립공장 등이 남한의 대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스포츠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작년에 여러분이 계신 이곳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머지않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북한과의 국교 개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자신을 위한 경제개방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오늘 뜻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한 이 자리를 빌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정·경 분리원칙에 의한 민간 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 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료,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 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 주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참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한국에는 ‘동병상련(同病相憐)’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분단이라는 크나큰 아픔을 같이 경험한 인간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 국민은 이러한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 통일의 위업을 먼저 이룩한 독일 국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시하며,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우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자의 억압 속에 신음할 때 독일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리를 성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독재자와 싸우다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와 6년의 감옥살이, 30년의 망명·연금·감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일 국민과 독일의 지도자들은 내 일과 같이 나와 한국의 민주인사들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성원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민은 언제까지나 가장 충실하고 우정이 넘친 친구로서 독일 국민과 베를린 자유대학 여러분과 함께 새천년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성과 대국민 보고 연설

(2000.6.1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방북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밤잠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환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 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첫걸음이 됐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은 제가 기대했던 이상의 환대를 저에게 베풀었습니다. 공항에 직접 출영하고, 오늘 돌아올 때도 공항까지 환송을 나와 주었습니다. 회담과정에서는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때가 몇 번 있었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평양시에 들어갈 때 60만, 나올 때 30~40만 등 모두 약 100만명의 평양 시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평양 시민이 같은 혈육의 정으로서 환영해 준 데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감사의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세계 여론의 한결같은, 거의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평양에 있으면서 국내의 TV도 보고 신문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대적인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제가 그렇게 보도되는 것이 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언론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열망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니 무척 기쁩니다. 나는 우리 언론에 대해

서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양 정상은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공을 못했을 때 그 엄청난 파장, 우리가 성공했을 때 가져 올 세계사적 큰 발전과 전환,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데 온갖 성의와 지혜를 다하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수행한 우리 보좌진이나 특별수행한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북측 사람들과 만나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저의 일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만남 것이 중요합니다. 평양도 가 보니까 우리 땅이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도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살아 왔건간에 마음속으로는 남쪽 동포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정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해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단일민족으로서 살아 왔습니다. 통일을 이룩한 지도 1,3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타의에 의한 불과 55년의 분단 때문에 영원히 서로 외면하거나 정신적으로 남남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가서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화해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조선왕조 말엽에 국민이 단합하고 근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 내부가 산산이 분열되고 근대화를 외면하다가 결국 망국의 설움을 얻고 일제 35년과 분단, 6·25전쟁, 그리고 또 대립, 100년의 양화(殃禍)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지금 세계는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시대에 들

어가고 있고 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때에 같은 민족끼리 내부에서 힘을 탕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 통일은 안 되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하늘도 트고, 길도 트고, 항구도 트고서 서로 왕래하고 협력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교류를 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높은 교육적 전통, 문화 창조력 등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지식기반 시대에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제 4대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 4대국을 우리 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때 우리가 정신차리지 못하고 남북이 협력하지 않고 우리끼리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적화통일도 안 되고 흡수통일도 안 되고 남북이 서로 공존공영 하면서 차츰 통일의 길로 나가자. 민족을 21세기에는 세계 일류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역설하니까 김 위원장도 동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왔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 성의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보, 대한민국의 주체성, 여기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되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가면서 협력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면 중국에는 통일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북측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하자고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핵 이야기도 했고 미사일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나왔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 대화는 매우 유익했으며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북공동선언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7·4공동성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7·4공동성명 발표한 것이 28년 전인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 않느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느냐. 또 1992년 2월에 남북이 합의서를 발표해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비핵화 선언 등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쥘 것부터 실천에 옮기자. 이 정상회담은 바로 실천을 보여 주는 회담이다. 옛날하고 똑같이 자주·통일·평화 등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이제 세계도 우리 민족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2항 이하에는 좀 구체적인 것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합의했습니다. 그 제2항은 우리가 주장해 온 남북 연합입니다. 즉, 2체제 2정부를 현재대로 놓아 두고 남북 양쪽에서 각료급 회의를 구성하고 국회 회의를 구성해 서로 합의기관을 만들어서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제입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1980년 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대통솔권을 다 가져야 한다. 남북 양쪽의 지방정부는 내 정권만 가져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이행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북한은 이 점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연방이 갖겠다는 의

교와 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그대로 가져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장한대로입니다. 이것은 상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 대표가 같이 문제를 토론해 보자,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해 보자” 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사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는 남과 북은 오는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문장 해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실향민,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문제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항에 나오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다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번 8·15까지 북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통크게’ 한 번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말한 장기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내가 국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잘 하시오” 라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달부터 적십자사가 곧 가동됩니다. 이것도 오늘 합의했습니다. 내가 서울 돌아가는 즉시로 적십자사에 북하고 접촉하라고 요청하겠다고 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앞으로 그 범위가 얼마만큼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렇게 북한하고 합의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넷째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문제를 말씀드리면,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철도를 건설하고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도로·항만·통신 등을 해결해 북한에 공단을 조성해서 진출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남한 내부 경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경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고, 그런 가운데 북도 남도 다같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기차가 왜 런던이나 파리를 못 갑니까? 경의선·경원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 갑니다. 만주의 기차들은 자유롭게 가지 않습니까? 경의선은 불과 25km정도밖에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으면 곧 갈 수 있습니다. 운송비가 30% 절감되고, 수송 날짜가 훨씬 줄어듭니다. 북한하고만 해결되면 우리는 유럽까지 뻗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철(鐵)의 실크로드가 생겨나서 남북 양측이 경제의 번영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 북한의 노동력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은 신문에 여러번 났습니다. 노임도 훨씬 저렴합니다. 남한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도 북한에 가면 충분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다 도움이 됩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철칙으로 해야 할 것은 남쪽만 좋아도 안 되고 북쪽만 좋아도 안 됩니다. 양쪽 다 좋아야 오래 가고 그래야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윈-윈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해 나가기로 김정일 위원장과 확실히 합의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남북에서 임명한 당국자들이 곧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합의에는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하고 합의된 시일 중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야 우리 민족이나 세계인들이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만 왔다 가고 김 위원장은 안 오면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를 잘 아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김 위원장보다도 10여세 위인데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 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다같은 우리 강산이고, 다같은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고, 다같은 한국 사람의 생각과 인정과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하고 아주 상이한 사상적 토양에서, 그런 정치체제 아래서, 그런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살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 사람 특유의 급한 성격을 가지고 빨리 풀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해놓고 7·4 공동선언이 28년간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도 우리 동포다, 그들도 우리하고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적화통일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반드시 같이 공존공영해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21세기에 같이 손잡아 세계 일류국가로 응비해 보자.

주변 4대국이 이제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모두 우리의 시장이다.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적기반,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지식기반 시대에 이 거대한 시장을 개척해 나가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합니다.

안보는 철통 같이 하되,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화해·협력하기 위한 안보,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 조상들은 물론 하늘도 도와서 민족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한반도 전체의 조국을, 번영된 조국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 기공식 연설

(2000.9.18)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민족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끊겼던 민족의 동맥을 다시 잇습니다. 남북으로 끊어졌던 철도와 육로를 다시 묶는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으로 끊어졌던 경의선 철도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둘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실의와 비원(悲願)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높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어진 경의선을 다시 잇는 오늘의 이 기공식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과 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애끓는 외침이 실현되는 민족의 대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19세기말 민족의 단합과 근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안으로는 서로 분열·상쟁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외면했다.

그 결과 일제 35년과 이로 인한 국토분단과 남북대결로 이어지는 100년의 한과 고통을 후손들에게 남겨 주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해야한다. 적화통일도 안되고 흡수통일도 안 된다. 지금은 통일의 단계가 아니다.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에 힘쓸 때다. 그렇게 해서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모두 이에 공감하시리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고, 한편으로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21세기에 적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당대의 불행은 물론, 후손들에게 또다시 끝없는 좌절과 고통을 안겨 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된 부끄러운 조국을 물려 주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하고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과 북은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나씩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머지않아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재결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장완화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이 이 달 안에 열립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여건을 만들기 위한 경제회담도 개최될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내년 봄에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협력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경의선을 55년만에 다시 잇는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명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저는 온국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의선의 복원은 남과 북 모두에게 커다란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극동의 작은 주변국가에서 동북아의 물류 중심국가, 나아가 세계

의 중심국가의 하나로 당당히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의선의 복원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에만 머물렀던 우리 경제가 한반도 전체로 그 무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이를 통해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해 제품이 생산되어 남한과 전세계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생산 원가도 저렴해져서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북한도 남한과 협력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본과 경영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자원과 우수한 인력이 서로 합쳐지면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북한의 경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민족 전체가 함께 번영하고, 장차 있을 통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뜻깊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경의선의 복원은 또한 육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대륙에까지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척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 인구의 75%, 전세계 에너지 자원의 4분의 3이 우리 주변의 유라시아 대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의선의 연결로 우리는 이 광대한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고 수송기간도 많이 단축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무궁무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가 철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싼 원료와 유망한 시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한반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

경의선의 복원은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의선은 반세기 동안 허리가 끊긴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과 북이 화합과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군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뢰 제거작업은 동족상잔의 상흔(傷痕)을 지우는 일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신뢰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싹은 장차 평화통일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의선이 완공되면 남북한 사이의 물적 교류는 물론 인적 교류도 크게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문화와 체육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교류가 늘어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게 됩니다. 경의선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야말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장차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큰 길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한 달 전 커다란 감격과 눈물로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 보았습니다. 전세계로 방송된 이산가족 상봉장면이야말로 평화의 21세기를 상징하는 장엄한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경의선의 연결은 전세계인들에게 한반도에서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함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대와 반목의 시대를 마감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지금 우리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의 장엄한 미래를 여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여망이었던 평화와 번영 속에 빛나는 한반도 시대에의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꿈을 현실로 이룩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뜨거운 가슴과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성의가 요구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수많은 선열들의 얼과 역사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대도약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엄혹했던 IMF 경제위기도 1년반만에 극복해 낸 우리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저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나는 한반도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과 뜻을 모읍시다. 오늘 기공하는 경의선이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이룩하는 찬란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주요 남북관계 합의문

- 제 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제 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제 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4.5 공동보도문 그밖 상호관심사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여기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임진강 수해방지문제와 그밖의 경제협력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남북이 동시에 병행시켜 착공하기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안변청년발전소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관계 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상봉단의 규모와 상봉절차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의 관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문제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며 이 때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북측의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성화 운반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조선올림픽위원회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7. 남과 북은 남북축구경기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며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에 평양을,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계 단체들간의 실무적 협의를 우선하기로 한다.
9.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 지역을 방문한다.
10.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2년 8월 14일 서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 방향으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 주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2002년 10월 22일

평양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24일

서 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9월 18일에 쌍방이 동시에 각기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철도는 금년 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목표로 완공하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리-고성 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한다.

그리고 동해선 임시 도로는 금년 11월말까지 연결하기로 한다.

②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③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9월18일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

④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함께 홍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 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4. 남과 북은 임남담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를 빠른 시일내에 각기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 등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 운영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 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t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7.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002년 8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당면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동시에 빨리 진척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①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 건설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적극 취해 나간다.

이를 위해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는데 따라 11월중에 공동측량을 하여 정하되 일자와 진행절차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며, 공사일정표를 교환하고 필요한 공사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한다.

- ② 쌍방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2002년 12월 하순에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① 북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며, 남측은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 ②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초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3.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 어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협의·확정되는 빠른 시일 안에 각기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이미 합의된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를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회의를 12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고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통행·원산지확인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6. 1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3년 2월초 서울에서 진행한다.

2002년 11월 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의 적십자단체 책임자들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회담에서 민족의 염원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기 위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면회소 설치문제

-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쌍방은 우선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며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 ③ 금강산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 ④ 금강산지역 면회소 건설 착공일자는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들을 선행하여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정한다. 착공식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 ⑤ 금강산지역 면회소 완공 후에는 면회를 정례화한다.

2.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문제

쌍방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협의한다.

3.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4. 쌍방은 면회소 설치·운영 등 본회담 합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제5차 이산가족상봉문제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여 9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② 이에 따른 실무절차문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때의 전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9월 8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영훈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부 록 3>

남북관계 주요 일지(1998~2003.1)

남북관계 주요일지(1998~2003.1)

1998년

- 1. 7 북적 위원장대리 이성호, 정원식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방송편지를 통해 비전향장기수 송환 요구
- 1.17 북한, KBS의 「진달래꽃 필때까지」 방영 보복 경고
- 1.20~24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북한 향산호텔)
- 1.22 한·미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최
- 2.5 KEDO, 북한 신포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 2.5 미국, '98년분 대북 식량지원 20만톤 지원 발표
- 2. 5~6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 2.12 유엔, 4억불 규모의 제4차 대북지원 계획 발표
- 2.15 북한 사회안전부,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설치 발표
- 2.17 인공위성(ASIASAT II) 이용 남북한간 관제 통신망 개통(1회선)
- 2.18 북한, 정당·단체 연합회의 개최
- 2.19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조선 정당 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 2.19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측의 편지접수 수락
-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제의
- 3. 1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사
 - 남북특사교환 촉구,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실현 촉구
- 3. 9 정부, WFP를 통한 옥수수기준 5만톤 식량지원 발표
- 3.10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대북지원 관련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 3.11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제의 관련 수정 제의
- 3.13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수락 통보
- 3.14 4자회담 제2차 준비회의 개최(제네바)
- 3.16~21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개최(제네바)
- 3.18 정부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발표
 - 대북지원관련 방북, 이벤트성 모금행사, 언론·기업의 협찬,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3.19~20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3.25~27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베이징)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4. 4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비료지원 요청 관련 남북 당국대표회담 제의
- 4. 6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한의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제의 수락 및 수정 제의
- 4. 7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장소 북경 고집
- 4. 8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북경 개최 동의 및 대표단 명단 통보
- 4.10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
-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베이징)
- 4.23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항로 이용개시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 4.30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시행
 - 대기업·경제단체의 수시방북제도 확대
 - 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 및 생산설비 반출제한 완화
 - 투자업종·규모제한의 완화
- 5. 2~12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
- 5. 5~9 KEDO-북한간 제5차 고위전문가 회의 개최(묘향산)
- 5. 8 KEDO, 북한 신포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 5. 8 EU, 북한 농업실태 조사단 파견
- 6. 1~2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6.15 북한, 8·15 대축전 관련 대남 편지 전달을 위한 연락관
접촉 제의
- 6.15 8.15 대축전 관련 북측 편지 접수
- 6.16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한우 500두 대북지원(관문점 경유)
- 6.22 강인덕 통일부장관, 8·15경축행사 관련 실무접촉 제의
- 6.22 합동참모본부, 북한 잠수정 1척 동해안에서 예인 발표

- 6.23 판문점 장성급 회담
- 6.28~29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브라셀)
- 6.30 판문점 장성급 회담
- 7. 9 자유의 집 준공
- 7.12 목호에서 북한 무장간첩 시신 발견
- 7.15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 통해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시인·사과, 재발방지 등 촉구
- 7.27~28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가서명)
- 7.29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유효입장 재확인 발표
- 8.15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
 - 대북정책 3대원칙 견지, 모든 경제협력 지원 권장, 분야별공동위원회 가동 촉구, 장·차관급의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안, 대통령 특사 평양 파견 용의
- 8.1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
- 8.20 북한 조평통, 8·15 경축사 대북제안에 대해 공개질문장을 통해 사실상 거부
- 8.21~9. 5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뉴욕)
- 8.31 일본, 북한의 로켓 발사사건에 대응하여 「재원분담결의안」 동의 유보
- 9. 1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 9. 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
- 9. 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개막

- 9. 7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 협력사업 승인
- 9.10 미·북, 제네바합의 이행 관련 합의
 - 중유공급 9월 하반기 재개, 연말까지 공급 완료
 - 영변 폐연료봉의 봉인작업 재개
- 9.10 대구 비행정보구역 통과 일본-북한간 직항로 운영 개시
- 9.18 정부,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 지원 허용
- 9.20 북한 평양방송,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한국정부의 의도적 불순물 투여 주장
- 9.23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 회의 개최(서울올림픽 제1경기장)
- 9.2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개소(이북5도위)
- 9.30 국군포로 장무환씨 귀환
- 10.16 북한,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현대측에 아·태평화위 서기장 명의 해명문건 통보
- 10.21~10.24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개최(제네바)
- 10.27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기탁2차분 한우 501두 대북지원
- 10.31~11. 7 윤이상 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11. 9 KEDO집행이사회(뉴욕)
 - 재원분담결의안 채택
- 11.17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망 개통(6회선)
- 11.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 12. 1 제198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북결의안 채택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촉구
-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
촉구 결의안

- 12.13 통일부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주년 관련 논평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 12.14 국회결의안 대북서한 발송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촉구

1999년

- 1. 1 김대중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방과 공조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겠지만,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
- 1. 4 김대중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통일안보관련 3대 목표와 기본방향 결정
 -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 ② 남북 화해·협력 지속 추진
 -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 강화
- 1.15 정부, 현대의 금강산개발계획 승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 한반도 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 및 4자회담의 성공적 진전이 긴요함을 재확인
 -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 재강조
- 1.16~24 미·북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3차 협상(제네바)
* 미국 :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북한은 보상의 다른 형식으로 ‘정치·경제적 혜택’을 언급
 - 미국은 보상은 불가하나 인도적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용의가 있음을 표명
- 1.19~22 제4차 4자회담(제네바)
 -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분과위 개최
- 1.30~2.6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교수 방북
 - 북한 1천여개 마을에 개량 옥수수 재배키로 북측과 합의 발표
- 2. 3 북한,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고위급정치회담 제의

- 2. 9 한·미·일 대북정책협의회 개최(서울)
 - 미·북간 금창리협상 조기타결 희망, 북한의 대포동 2호 추가실험이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표명
- 2.10 정부,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발표
- 2.11 판문점 제4차 장성급회담 개최
- 2.22~3.11 현대그룹 서해안 공단 실무협의단 23명 방북
- 2.27 미·북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4차 협상 개시(뉴욕)
- 2.28 금강산 휴게소 및 공연장 준공
 - * 분단후 최초로 설립된 남북공동 민간 건축물
- 3. 9~11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방북
- 3. 9 판문점 제5차 장성급회담 개최
- 3.11 대한적십자사, 대북비료지원을 위한 모금 계획 발표
 - 3.15 부터 6.15 까지 모금활동 전개 방침
- 3.16 미·북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4차 협상 타결(뉴욕)
 - * 미국 : 카트만 특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북한은 '99년 5월 미국 조사단의 금창리 시설 최초 방문 및 추가 방문을 허용
 -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을 지원
 -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 3.17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촉구 국회결의안 및 국회의장 서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해 북측에 전달
- 3.25 외교통상부장관,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내 인권문제 제기
- 3.29~30 제4차 미·북 미사일 협상(평양)
 - * 미국 :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북한 : 한창언 외무성 북미국장

- 3.30 대한적십자사, 대북비료 5,000톤 지원 계획 발표
- 3.31 남북한 화물선, 스리랑카 해안에서 충돌
- 4.10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관련 남북 수목전문가 접촉(금강산)
- 4.23 남북 비공개접촉 개시(북경)
- 4.24~27 제5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 4.26 김대중대통령,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 성사를 찬성한다고 언급
* 겐나디 셀레즈노프 러시아 하원의장 면담
- 4.28~5.4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등 논의
- 5. 5 김대통령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위 5대과제’ 제시
* CNN 주최 제10회 세계언론인 국제회의 위성회견
① 남북간 화해·협력, ②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③ 북한의 변화와 대외개방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④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통제·제거 및
군비통제 실현
⑤ 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 전환
- 5.14~15 미 카트만 특사 방북, 금창리 현장조사 협의
- 5.18~24 금창리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단(단장 : 미 국무부 조엘위트 과장) 방북
- 5.25~28 페리 대북조정관 방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김영남, 최태복, 김계관 등 면담)
- 5.28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금창리의 지하 핵 의혹시설 건설기록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

- 5.31 통일부,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절차 간소화
- 6. 3 남북 비공개 접촉에서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 등 합의(베이징)
- 6.3~6.7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중국 공식 방문
 - 장쩌민 국가 주석 면담, 상해 등 지방도시 방문
- 6.8~6.15 북측 경비정 6척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 6.10 정부, 대북비료 20만톤 지원에 필요한 자금중 민간모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
- 6.15 북측과 우리측 해군 서해상에서 교전 사태 발생
판문점 제6차 장성급회담 개최
- 6.16 북 조평통 대변인, 남한측 인사 평양방문 제한 발표
- 6.20 북한, 금강산 관광객 1명 억류, 6.25 석방
* 6.22부터 금강산 관광 중단, 8.5 재개
- 6.22~26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베이징)
* 남 : 양영식 통일부 차관, 북 : 박영수 내각 참사
- 6.23~24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베이징)
* 미 : 카트만 특사, 북 : 김계관 외교부 부상
- 6.25 정부, 금강산 관광관련 ‘선(先) 안전보장 후(後) 관광재개’ 방침 발표
- 6.28 현대, 아·태측과 금강산관광객 안전보장협 착수(베이징)
- 7.1~3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베이징)
* 남 : 양영식 통일부 차관, 북 : 박영수 내각 참사
- 7. 2 판문점 제8차 장성급회담 개최

한국 정부, KEDO에 32억 달러 차관 공여 서명

- 7. 4 민화협, 남북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제의 발표
- 7. 8 탈북주민 정착지원시설 「하나원」 개원
- 7. 9 현대 장전항 건설 인력 108명 방북
- 7.21 판문점 제9차 장성급회담 개최
- 7.25~29 남북청년학생 통일세미나 개최(베이징)
- 8. 1 통일부, 금강산 관광 8월 5일부터 재개 허용 발표
- 8.3~9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제네바)
* 미 : 카트만 특사, 북 : 김계관 외교부 부상
- 북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 협의
- 8.5~9 제6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 8.9~8.14 민주노총 축구선수단,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참가차 방북
- 남북노동자축구대회(8.12~13, 평양)
- 8.11 정부, 한적 총재 명의 대북서한을 통해 임진강 수계의 남북공동수해방지 추진을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제의
- 8.12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8주년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키로 한 '6.3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
- 8.15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되어야 하며,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
「' 99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 손잡기 대회」 개최(서울 서대문~경기도 파주군 통일대교 : 53km)
북, 「'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개최

- 8.16 경수로기획단, KEDO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수로부지공사를 12월 15일까지 4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
- 8.17 판문점 제10차 장성급회담 개최
- 8.18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과 미사일협상 용의 표명
- 8.20 캐서린 버티니 WFP 사무국장,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기근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상적인 상황에는 훨씬 못미친다'고 언급
- 8.23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 군사사절단 정례 교환 방문 합의
 - 한·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 북한 미사일 관련 한·미·일 공조 확인
- 8.31 북한적십자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 요구 서한 발송
- 8.31~9.7 원로화가 10명, 북녘 산하기행차 방북
- 9. 1 판문점 제11차 장성급회담 개최
- 9. 2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서해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
 - '서해군사분계선' 을 일방적으로 주장
 - 한·러 국방장관회담 개최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안정에 저해된다는 인식 확인
- 9. 3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발표
 - 우리정부 서해북방한계선(NLL) 고수방침 재확인
- 9.7~12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 및 타결(베를린)
 -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은 대북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
- 9.14 북한 외무상 백남순 일행, 제54차 유엔 총회 참가차

뉴욕 방문

- 9.15 미 페리 조정관, 의회에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 보고
 - 향후 대북정책은 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 유도과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단기) ②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보장(중기) ③ 한반도 냉전 종식(장기) 등 3단계로 추진
 - 당면한 5개 정책 ①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 정책 ② 미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인사의 조정관 임명 ③ 한·미·일 공조를 위한 고위정책조정그룹(TCOG) 유지 ④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⑤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에 대비 제시

- 9.17 미 클린턴 대통령, 대북경제제재 해제 발표
 - 적성국 교역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등 3개 법안에 의해 규정된 ① 물자수출입 ② 금융거래 ③ 투자 ④ 북·미간 항공기·선박 운항 분야의 제재조치 해제
 - 그러나 테러국 지정,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인 ① 무기·방산 물자 수출 금지 ② 원조 금지 ③ 최혜국 대우·일반 특혜관세(GSP)·수출입은행 보증 금지는 제외

- 9.18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 발표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지지

- 9.20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국회 비준

- 9.20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핵 안전이행 촉구문 채택

- 9.22~24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한·일 방문

- 9.22 남북 임업전문가 회의 개최(베이징)
 - 북한의 산림 복구문제 논의

- 9.24 일본 오부치 수상, 페리보고서 지지 표명

북 외무성 대변인,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

- 9.25 북한 백남순 외상,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북회담 기간동안에는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언급
- 9.27 북한 백남순 외상, 기자회견에서 통일3대원칙과 북한의 협상제의에 남측이 응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언급
- 9.27~10.1 현대 농구대표단 남북통일농구대회 참가차 방북
- 남북통일농구대회(9.28~29, 평양)
- 9.27~10.2 북한-KEDO간 고위급회담 개최(묘향산)
- 9.28~10.2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 김정일 면담(10.1)에서 서해공단 개발문제 협의
- 9.29 현대그룹,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착공
- 10. 1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에 핵안전협정이행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빈)
- 10. 3 김종필 국무총리, 개천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성실이행과 화해협력에 북한의 동참을 촉구
- 10. 4 4자회담 수석대표 교체(박건우 본부 대사→ 장재룡 차관보)
- 10.5~9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 북·중관계 수립 50주년 기념차 방북
* 백남순 외상 등과 회담
- 10. 8 미·북, 미군유해 평양에서 직접 인도·인수 합의
- 판문점을 통해 유엔사가 인수하던 관례 변경
- 10.14~17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방북, 금강산지역 솔잎혹파리 방제약 효과 조사
- 10.19 김대중대통령,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남북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피력

- 10.20~26 미 국무부 관리와 국제개발처 요원 방북
- 북한 식량분배 투명성 검증
- 10.21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침 개정
- 대북교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민간인 인도적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일본, 경수로사업
재원분담금 협정 서명
- 10.22 통일부,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에서 시청 가능
- 10.23 주한외국인 대상 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 10.25 미국, 미군유해 4구 평양에서 직접 송환
- 10.26~27 남북한 해외학자 통일회의 5차회의 개최(베이징)
- 10.29 담배인삼공사-광명성총회사, 담배 공동생산·판매 합의 발표
- 11.1~20 서해공단 후보지 조사단 16명 방북
- 신의주, 해주, 남포지역 시찰
- 11. 2 일본, 일·북간 전세기운항 동결조치 해제 발표
- 11.3~4 북,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 개최
- 11. 6 미국, 대북 중유 50만톤 지원 완료
- 11.6~13 김경재의원, 방북
- 통일음악회 개최 협의
- 11.9~16 김정배 고려대 총장 방북
- 2000년 개천절, 평양에서 단군학술토론회 개최 합의
- 11.15~19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베를린)
* 미국 : 카트만 특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11.15~19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위원장 방북
 -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 원칙적 합의, 그러나 월드컵 분산 개최는 곤란 확인
- 11.24 정원식 한적 총재, 북적 위원장에 편지 발송
 -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서로 공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의
- 12.1~3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등 초당파 의원대표단 방북
 - 김용순 당비서와 회담 및 오부치게이조 일본 총리의 친서 전달
- 12. 5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개최(평양)
 - 로저 클린턴과 한국가수들 참여
- 12.14 일본, '98 미사일발사 이후 취했던 대북 제재조치 해제
- 12.15 KEDO, 한전과 경수로 주계약 체결
 - 한전은 1백만 Kw급 한국형 경수로 2기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제공
- 12.15~17 미·북 미군 유해 발굴 협상(베를린)
 - * 미국 : 앨런리오타 국방부 부과장, 북한 : 박임수 판문점 대표부 대좌
- 12.16 민화협, 판문점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남북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개최 제의 서한 전달
- 12.19~20 일·북 적십자회담 개최(북경)
 - 대북 식량지원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협의
- 12.20 「민족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남북예술인 공연 및 녹화중계 실시
- 12.21~22 일·북 수교 예비회담 개최(북경)
 - * 일본 : 아나미 고레스게 아시아 국장, 북한 : 오을록

제14국장

- 12.22~25 아·태평화위 농구대표단 62명(단장: 송호경) 서울 방문
 -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12.23~24, 서울)
 - 조선중앙TV 녹화중계(12.25~26)

- 1. 3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
- 1. 5 국가안전보장회의, 2000년 대북정책 3대 방향 결정
 - 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추진
 - ③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1.12 한국담배인삼공사, 남북합작담배 '한마음' 남북 동시판매(3. 1) 발표
- 2. 1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회의 개최(서울)
- 2.17 정부,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지침」 제정·시행
- 2.22~25 KEDO-북한, 고위 전문가회의 개최(평북 향산)
-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 북한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추구,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당국간 대화 및 특사교환 촉구
- 3. 9 금강산 유람선(풍악호), 부산 다대포항 출항 시작
- 3.17~4. 8 남북 특사접촉(중국 상해, 북경)
 -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남),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북)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3.23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획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항의 「5개섬 통항질서」 발표
- 4.10 남북 정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서울, 평양)
- 4.22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1차 회담(판문점)
 - 양영식 통일부 차관(남),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참사(북)
-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2차 회담(판문점)
- 5. 3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3차 회담(판문점)
- 5. 7 이헌재 재경부장관, ADB총회에서 북한의 가입 협조 요청

- 5. 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4차 회담(판문점)
- 5. 9~17 「문서교환 방식」을 통한 협의
- 5.13 남북정상회담 제1차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6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7 남북정상회담 제2차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5차 회담(판문점)
- 남북합의서(2000.4.8) 이행을 위한 실무합의서 타결
- 5.24~30 북한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방문, 공연
- 5.29~31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5.29~6.10 북한 평양교예단 서울 방문, 공연
- 5.31 남북정상회담 선발대(30명) 방북
- 6.13~15 남북정상회담 개최(평양),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 6.27~30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금강산)
- 7.19~20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북-러 정상회담 개최
- 7.26 남북 외무장관회담(태국 방콕)
- 7.29~31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서울)
- 박재규 통일부 장관(남),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북)
- 8.5~12 언론사 사장단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남북언론사들간 언론 교류 등 공동합의문 발표
- 8. 8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

- 8.14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8.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8.18~24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방문, 합동공연
- 8.22 현대·북한, 개성공단 개발관련 합의서에 서명
- 8.29~9.1 제2차 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9. 2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
- 9. 4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 취소
- 9. 6~8 김대중 대통령,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가
- 9. 6 한·중 정상회담 개최(뉴욕)
- 9. 8 한·러 정상회담 개최(뉴욕)
- 9.11~14 북한 김용순 특사 남한 방문
- 9.15 남북선수단,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 공동입장
- 9.18 경의선 기공식(임진각)
- 9.20~23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금강산)
- 9.22~27 조총련 동포(50명) 남측 고향방문
- 9.22~28 백두산 관광단(109명) 방북
- 9.25~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서울)
- 9.27~30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제주도)
- 9.28 정부, 대북식량차관제공 발표

- 10. 4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서」 체결
- 10. 9~12 북한 조명록 특사, 방미
- 미·북 공동선언 발표(10.12)
- 10. 9~14 남측 방문단,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
- 10.15 현대아산, 북한 금강산여관 30년 임대계약 체결
- 10.18 한·중 정상회담(서울)
- 10.20 아셈(ASEM) 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서울)
- 10.23~25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차례 회담, 미사일 문제 등 협의
- 11. 2 NS21,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필름 북측에 전달
- 11.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 현대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손수레 1만대 북측에 전달
- 11. 8~11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평양)
-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가서명
- 11.11~19 영화인 11명 방북
- 11.16 북-유엔사 장군급회담(판문점)
- 비무장지대(DMZ) 관리권 한국에 이양 합의
- 11.17~22 조총련동포(119명), 제2차 남측 고향방문
- 11.21 현대-북한, 서울-평양 민간 직통전화 개설
- 11.28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경의선·도로연결공사 협의
- 11.30~12.2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12. 5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2. 7 서울 가정법원, 북한주민에 대해 남한 호적등재 승인
- 12. 8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 12.11~14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금강산)
- 12.12~16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평양)
- 12.21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2.22 한국전력 공사, 현대건설 등과 북 경수로 주설비공사 계약 체결 발표
- 12.27~30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평양)

2001년

- 1.15~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상해 등 경제특구 시찰
- 1.23~27 영국 외무성대표단(단장:마스텐 아태총국장), 방북
- 1.27~2.13 북 노동당대표단(단장:지재룡 부부장), 영국·프랑스·벨기에 방문
- 1.29~31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남측 대표: 이병웅(수석대표), 고경빈, 최기성
- 북측 대표: 김경락(단장), 리금철, 리호림
- 1.31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2. 1 우리측 창극단 「춘향전」 평양 공연
- 2. 3 남북,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문」 서명·교환
- 2. 6~20 EU 경제대표단, 방북
- 2. 8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따른 군사적 보장합의서 타결
- 2. 8~10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 2.18~3. 2 북 무역성대표단(단장:김동명 부상), 호주·브루나이 방문
- 2.21~24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 2.23 제2차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작업 결과 통보
- 2.24~3. 2 북 경제대표단(단장:전승훈 금속기계공업상), 이탈리아 방문
- 2.26~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상호 교환방문(서울, 평양)

- 2.27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 한-러 정상회담 개최
- 2.27~3. 3 북 경제대표단(단장:한성렬 외무성 부국장), 미국 방문
- 2.27~3. 6 고(故) 한덕수 조총련 의장 북측 조문단, 일본 방문
- 3. 2~3 스웨덴 「한스 그렌달」 외무차관, 방북
- 3. 3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대북 서한 전달
- 3. 6~11 김대중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 3.10~13 영국 「존 커」 외무차관, 방북
- 3.10~14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 문화·체육 교류 관련 협의
- 3.10~20 MBC 방북 취재
- 3.13 북측,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연기 요청
- 3.15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 남북 각 300명, 600건
- 3.17 북 외무성대표단(단장:최수현 부상), 핀란드·스웨덴·체코·폴란드·독일·프랑스 방문
- 3.18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평양에 남북공동대학 설립 합의
- 3.20 경수로건설 현장에 우즈베키스탄 인력(207명) 투입
- 3.20~24 중국 당대표단(曾慶紅 당 조직부장), 방북
- 3.24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측 조문단, 서울 방문
- 3.28 조총련계 북한국적 축구선수 양규사, 현대프로축구단 입단
- 3.28 북측,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불참 통보
- 3.30 광주시, 평양·남포지역에 김치공장 설립 합의 발표

- 4. 5 북,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 개최(만수대의사당)
 -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승인
 - 홍성남 총리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 보고
- 4. 6 조총련 동포(80명), 제3차 남측 고향방문
- 4.11 가수 김연자 합흥 공연
- 4.13 남북, 제3차 적십자회담시 합의한 서신 300통 전달 결과 구두 통보
- 4.19 북적, 비료 20만톤 지원 요청(대남 전화통지문)
- 4.26 정부, 대북 비료지원(20만톤) 발표
- 5. 1 민주노총·한국노총-북 직총, 노동자대회 개최(금강산)
- 5. 3 페르손 EU 의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 '03년까지 미사일발사 유예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심 표명
- 5. 4 페르손 EU 의장 방한, 韓-EU 정상회담 개최
- 5. 9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副)장관 방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 5.14 북한-EU 외교관계 수립 계획 발표
- 5.19~7.10 KBS 방북 취재
- 5.23 북한-바레인 대사급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 5.25~26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회의
 -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 및 정책공조 방안 협의
- 5.28 북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맞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단체 합동회의」 개최
- 6.4, 6.6 한북 패션디자이너 이영희, 평양에서 '한북전시회' 개최

- 6. 6 부시 미대통령, 북한과 대화재개 선언 발표
- 6.13 미 국무부, 북-미 회담 결과 발표
- 6.14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백두에서 한라까지」 개막(평양 인민대학습당)
- 6.15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판문점 통해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축하편지 교환
- 6.15~16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공동행사로 개최(금강산)
 - 남측: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소속 420명
 - 북측: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 북측준비위원회 소속 340명
- 6.2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발표
- 6.25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합작 북한 광산 개발 발표
- 6.27 북한-터키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
- 6.28 북한-호주 대사관 개설 합의 발표
- 7.11 유성희 전 대한의협회장, 의협 대외의료협력단 일원으로 방북 중 평양에서 사망
- 7.13 금강산관광, 쾌속선 '설봉호' 출항으로 재개
 - '금강호' 동해항 귀항(6.30) 이후 일시적 중단상태
- 7.18~19 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개최 및 공동보도문 발표(금강산)
- 7.2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실사단 방북
- 7.26 북한-유럽연합(EU)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 외교관계 설정일은 2001.5.14로 합의 등
- 7.26~8.18 김정일, 러시아 방문

- 7.29~31 통일염원 6.15 금강산샐리 개최
- 7.30 평양에 영국대사관 개설
- 8. 4 김정일과 푸틴, 「북-러 단독·확대 정상회담」 개최 및 8개항의 「북-러 모스크바 선언」 발표
- 8. 8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관련 대미 비난성명 발표
- 8.10 서영훈 대한적십자 총재, 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8.12) 맞아 성명문 북에 전달
- 8.15~21 「8·15 남북공동행사」에 남측 방문단 참가
- 7대 종단·민화협·통일연대 대표 등 394명 방북
- 8.21 북한,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남, 해외 공동보도문」 발표
- 9. 3~5 장쩌민 중국주석, 북한 방문
- 9. 6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회의 개최(도쿄)
- 9.15~18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서울)
- 홍순영 통일부 장관(남), 김령성 내각 참사(북)
- 9.21 제45차 IAEA총회, 북한의 핵 비확산의무 이행촉구
- 10.3~5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회담 개최(금강산)
- 10.9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 교환
- 10.12 북한 「조평통」 대변인,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및 태권도 시범단 파견 연기 담화 발표
- 10.16~18 서울·평양에서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었으나 무산
- 10.15 북한 중앙방송, 10.9~10 원산지역에서 해일과 폭우로 인해 수백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 10.19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부산 아시안게임 초청장 발송
- 10.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 15920호)
 - 남북한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1년6개월 →3년) 및 교류절차 간소화
- 11. 3 북한 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 회견을 통해 '반테러 국제협약들'에 가입키로 결정 발표
- 11. 9~14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금강산)
 - 홍순영 통일부 장관(남), 김령성 내각 참사(북)
- 11.19 대한적십자사, 11.18 동해상에서 표류중 예인된 북한 선박 및 선원 송환
- 11.27 합참본부, 북한군 비무장지대에서 아군초소 사격
- 11.27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회의 개최 (샌프란시스코)
- 11.29 국방부 대변인, 북한군의 비무장지대내 총격사건에 대한 대북 성명 발표
 - 11.27 발생한 총격사건을 정전협정 위반 사안으로 확인, 비서장급 접촉 제의했으나 북측 무반응
- 11.30 (사)남북협력 제주도민 운동본부, 감귤 및 당근 대북지원 계획 발표
- 12.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북한,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 서명
- 12.16~31 북한의 경수로사업 관계자 19명, 원자력발전소 등 시찰 목적 남한 방문
- 12.17 북한 「조평통」대변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지속 비난 담화 발표

- 12.20 통일부 대변인, 「조평통」 담화 관련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촉구' 논평 발표

2002년

- 1.1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강화 및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추진 강조
- 1.11 합참, 표류중인 북한 주민 구조 선박 입항 발표
 - 러시아 상선이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3명을 구조하여 1.12 진해항 입항(1.15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
- 1.14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 금년도 국정추진방향 4대과제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
- 1.19 유엔 인도조정국(OCHA), 긴급구호보고서 발표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촉구
- 1.23 정부, 「금강산 관광 지원방향」 발표
 - 이산가족·학생 등에 관광보조,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 상환조건 완화, 금강산 현지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 1.25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개최(서울)
- 1.29 부시 미대통령, 2002년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
- 2.19~21 부시 미 대통령 방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및 경의선 도라산역 방문 (2.20)
 - 미국은 북한 침공 의사가 없으며 한국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지지 발표
- 2.27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무산
 - 북측대표단, 남측의 통일연대 불참을 이유로 행사 불가 통보
- 3.14 탈북자 25명, 주중 스페인대사관 진입 망명 요구

- 3.21 제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방안 확정·발표
 - 이산가족, 학생, 교사, 통일교육강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 경비중 60%~70% 지원
- 3.22 한·일 정상회담 개최
 - 한반도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한 의견 일치
- 3.25 남과 북, 임동원 대통령 특사 4월초 방북 동시 발표
- 3.28~4.1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 남북 동시 방문
 - 북한(3.28~30), 남한(3.30~4.1) 방문
- 4.3~4.6 임동원 대통령 통일특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
 - 「남북공동보도문」(6개항) 서울과 평양 동시 발표
- 4.6 (주)평화자동차(사장 박상권)가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평화자동차 종합공장' 준공식 개최
- 4.9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 개최(도쿄)
 - 대통령 특사 방북이후의 대북정책 관련 의견 교환
- 4.11 민통선내 경의선 도라산역 개통식(1일 2회 운행)
- 4.12 각계단체 대표들 방북, 「남북단체 공동성명」 발표(금강산)
 - 「남북공동보도문」(4.5) 적극 지지 등 5개항
- 4.19 한적 서영훈 총재, 북적 장재언 위원장에게 비료 20만톤 지원 계획 통보
 - 4.25~6.2 25항차 예정
- 4.28~5.3 제4차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 4.28~4.30 남측 이산가족 99명, 북측 가족 186명 상봉
 - 5.1~5.3 남측 가족 466명, 북측 이산가족 100명 상봉
- 5.3 정부, 금강산댐 안전대책 발표
 - 홍수방지 대책, 평화의 댐 보강 등

- 5.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측대표단,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국 방문시 발언을 이유로 회의 무산 성명 발표
- 5.6 통일부 대변인, 북측에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개최를 비롯한 특사 방북 합의사항들의 조속한 이행 촉구
- 5.7 북 국토환경 보호성 대변인, 금강산댐 붕괴설 관련 규탄 담화 발표
- 5.10~15 제주도민 255명, 방북
 - 북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가 감귤·당근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초청장 발송(4.25)
- 5.11~14 박근혜 의원,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판문점 통해 귀환)
- 5.15 전국 농민회 총연맹, '대북 쌀300만석 조기지원 촉구 통일쌀 출항식' 개최
- 5.16~17 북 아세안안보포럼에 대표단(박명구 전 인도대사) 파견
- 5.19~24 북 경수로·항공 관계자 10명 남한 방문
 - 양양공항·김해공항·울진 원자력발전소 시찰
- 5.21 미국, 북한을 포함한 7개 테러지원국 재지정
- 5.24 남북합작 농기계수리소 평양에서 준공
- 6.10 북·미, 미군유해 공동발굴 일정 합의
- 6.11 북한이탈주민 9명, 북경 주재 한국영사관 진입
- 6.11~15 남측의 초음파진단기 기술자 방북
- 6.12 남북한 최초의 합작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착공
 - 2003년 9월 완공 예정
- 6.14 서방 선진 8개국(G8) 외무장관들 한반도문제 관련 성명서 채택

- 6.14 정부,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즈음 남북대화재개 촉구 대북서한 전달(통일부장관 명의)
- 6.14~15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돌 기념 통일대축전 개최(금강산)
- 민화협·통일연대·7대종단 등 208명 참석
- 6.14~18 기독교인 평양에서 예배 개최(봉수교회·칠골교회)
-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등 337명
- 6.15~18 EU 대표단(스페인 라파엘콘테 아주국장) 평양 방문
- 6.17~18 한·미·일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COG) 회의 개최(샌프란시스코)
- 6.18 한·미·일, 북에 IAEA 핵사찰 전면 협력 촉구
- 6.29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교전
- 6.29~8.29 한양대 교수 2명(오희국, 차재혁) 북한 김책공대에서 2개월간 강의
- 7.1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특사방북 철회 발표
- 7.12~14 대학생 통일탐구단 320명 금강산 방문
- 7.20 KEDO 관련 남북직항로(양양 - 선덕) 운행(시험비행)
- 7.25 북 서해교전 관련 유감표명 및 당국간 회담 제의
- 7.28 북·러 외무장관 회담 개최(평양)
- 7.31 북 백남순 외상,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참석
- 8.2~4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금강산)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참가 등 공동보도문 (5개항) 발표

- 8.5~6 KEDO 집행이사회 개최(서울)
- 8.6 UN 아동기금 북한과 「어린이 영양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 조사」 실시 합의
- 8.12~14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등 10개항 합의
- 8.14~17 8.15 민족통일행사 개최(서울)
 - 북측 대표단 116명 참가
- 8.17~19 북한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 접촉(금강산)
- 8.18~19 북·일 적십자회담 개최(평양)
- 8.19 북한이탈주민 3가족 21명 평북 선천에서 배로 입국
- 8.20~23 북·러 정상회담 개최(블라디보스토크)
- 8.25 IOC 위원(김운용 - 장웅)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 합의(모나코)
- 8.25~26 북·일 외무국장급 협의(평양)
- 8.26 북한이탈주민 7명, 중국외교부 진입 시도
- 8.26~28 북한의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 접촉(금강산)
 - 북측 선수·응원단 파견 등 14개항 합의
- 8.27~3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서울)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남북 동시 착공 등 8개항 합의
- 9.3 북한이탈주민 16명, 독일대사관 학교내 진입

- 9.5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성화 백두산·한라산 동시 채화
- 금강산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에 전달(9.6)
- 임진각 통일동산에서 합화(合火)(9.7)
- 9.5~8 남북통일축구경기 개최(서울)
- 9.6~7 한·미·일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COG) 회의 개최(서울)
- 9.6~8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등 6개항 합의
- 9.10~12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금강산)
- 9.11~14 MBC, 서울 - 평양(조선중앙TV)을 위성으로 연결, 이원 생방송 실시
- 9.12 유엔사 - 북, DMZ 공사 관련 관리권 이양 합의문 서명
- 9.12 북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채택(총 6장 101조)
- 신의주 특구 지정 발표(9.21)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김용술)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 국제무역회사(양빈)사이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9.23)
- 초대장관에 양빈 회장 임명(9.24)
- 9.13~17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금강산)
- 경의선·동해선 연결 구간, 접속지점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제공, 착공식 등 7개항에 합의
- 9.13~18 제5차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 9.13~15 : 북측가족 100명, 남측가족 455명 상봉
- 9.16~18 : 남측가족 99명, 북측가족 221명 상봉
- 9.14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9.14~17 남측 태권도 시범단 평양 방문
- 9.16 수출입은행, 대북식량(쌀 40만t) 차관 계약

- 9.16~18 임남담 공동조사 실무접촉(금강산)
- 9.16~22 KBS,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개최(평양)
 -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단독공연(9.20)
 - 북측의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합동공연(9.21)
 - * 김태식 국회의부의장 등 국회의원 6명 공연 참관
- 9.17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관문점)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발효
- 9.17 북·일 정상회담 개최(평양)
 - 북한의 피랍 일본인 문제 사과와 재발방지 등 4개항의 「북·일 평양선언」 채택
- 9.18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 9.19 남북 경의선·동해선 DMZ 지뢰 제거 동시 착수
- 9.23 남북 개천절 공동행사 개최 합의(평양 단군릉)
 - 남측 :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위원장 한양원)
 - 북측 :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
- 9.24 남북 군 당국간 직통전화 개통
 - 자석식전화 1회선, 팩스 1회선을 오후 4시까지 운용
- 9.25~30 MBC 평양 특별공연
 - 이미지·최진희 등 181명 방북, 북측과 합동공연
- 9.26 미국 특사 방북 발표
 -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켈리(10.3~5)
- 9.29~10.14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응원단 등 총 668명 참가
 - 9.23 선수단 1진 159명 도착(김해공항)
 - 9.27 선수단 2진 153명 도착(김해공항)
 - 9.28 응원단, 기자 등 356명 도착(부산항)
- 10.3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관문점)
- 10.3~5 미 대통령 특사 켈리 차관보 방북

- 10.12~14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제1차 회의(금강산)
 - 「1차분 자재·장비 제공 품목 및 수량」
과 「자재·장비 인도인수절차」 합의
- 10.13~14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 개최(금강산)
 - 6.15 공동선언 관철, 전쟁방지등 공동선언문 채택
- 10.16~17 남북여성 통일대회 개최(금강산)
 - 여성사회의 연대와 단합도모, 남녀평등 기틀마련 등
4개항의 공동결의문 발표
- 10.17 북, 농축우라늄 개발 시인 관련 한·미·일 공동 발표
 -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 핵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 10.19~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해운·통행합의서 채택 등
8개항 합의
- 10.23~26 북한 태권도 시범단 41명 서울 공연
- 10.25 북, 미에 불가침조약 제의
- 10.26~11.3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 박남기(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등 18명
- 전국 18개지역 38개 산업시설, 연구소 등
- 10.30~11.2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평양)
 - 임진강 유역과 한강하류에 대한 현지조사, 홍수예보시
설 설치, 치산치수 등에 대해 협의
- 10.30~11.2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 12월중 건설 착공, 1단계 100만평을 2003년까지 끝내
도록 협력 등 7개항의 합의문 발표
- 10.31~11.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금강산)
- 11.6~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평양)
 - 경의선은 개성공단에, 동해선은 금강산지역에 연결, 북
측은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등 6개항의 합
의문 발표

- 11.16 부시 미 대통령 대북성명 발표
 -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기 계획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제거를 촉구
- 11.18~20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2차회의(금강산)
 - 철도·도로연결 위한 공동측량, 구간·기간·인원 결정 등
- 11.18~20 해운협력 실무접촉 1차회의(금강산)
 - 제2차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개최하여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 발표
- 11.25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 「금강산관광지구」 지정(10.23), 「금강산관광지구법」 채택(11.13)
- 11.26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동측량 완료
- 11.27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 「개성공업지구」 지정(11.13), 「개성공업지구법」 채택(11.20)
- 11.29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공동측량 완료
- 12.6~8 개성공단 건설 2차 실무 접촉(금강산)
 - 개성공단 건설 착공(12.26~30), 임시도로(개성~문산),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 채택
- 12.11~13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개최(서울)
- 12.12 북한,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 선언
- 12.12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임시도로 완공
- 12.14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남북 관리구역 지뢰제거 완료
- 12.15~17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금강산)
 -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구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제 6차 이산가족상봉 실시키로 원칙적 합의

- 12.15~17 제3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최(금강산)
 -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전까지 개통, 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2003년 1월 중순 평양 개최 등 4개항의 공동보도문 채택
- 12.23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논의
- 12.25~28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평양)
 - 남북사이의 해운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15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 가서명
- 12.31 IAEA 사찰관 2명 전원, 북한의 추방 통보에 따라 베이징을 통해 북한 철수

- 1.10 북한, NPT 탈퇴 선언
- 1.20~22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금강산)
 -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제6차 이산가족상봉 등 5개항 합의
- 1.21~24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이 적극 협력
 -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2.11~14 서울 개최
 - 제 10차 장관급회담 4.7~10 평양 개최
- 1.21~25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평양)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진행 등 5개항 합의
- 1.27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서명하고 발효시킴
- 1.27~29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특사자격으로 방북
 -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협의